2021
국정감사 백서

PEOPLE POWER PARTY

국민의힘

2021
국정감사 백서

PEOPLE POWER PARTY

국민의힘

2021 국정감사 백서

PEOPLE POWER PARTY

목차

제1부 발간사

원내대표 • 008
정책위의장 • 010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국회운영위원회 • 015
법제사법위원회 • 021
정무위원회 • 025
기획재정위원회 • 035
교육위원회 • 04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053
외교통일위원회 • 061
국방위원회 • 069
행정안전위원회 • 07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08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09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099
보건복지위원회 • 111
환경노동위원회 • 119
국토교통위원회 • 127
여성가족위원회 • 135

제3부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성과

국회운영위원회 • 143
법제사법위원회 • 155
정무위원회 • 163
기획재정위원회 • 171
교육위원회 • 18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187
외교통일위원회 • 195
국방위원회 • 205
행정안전위원회 • 21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3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39
보건복지위원회 • 251
환경노동위원회 • 259
국토교통위원회 • 265
여성가족위원회 • 277

2021
국정감사 백서

PEOPLE POWER PARTY

제1부

발간사

| 원내대표 발간사 |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 기 현

우리 국민의힘은 2021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권 5년의 총체적 국정운영 실패의 책임을 묻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최우선 목표를 두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잘한 일'을 묻는 질문에 '없다'는 답이 1위를 차지할 만큼, 지난 5년은 대한민국의 암흑기와 같았습니다. 코로나 초기 방역 실패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부동산 정책 실패는 국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 갔습니다. 경제 활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보다 세금주도 단기 일자리 양산에만 힘쓴 결과 청년은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희망 모두를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5년 내내 나라 곳간 헐어 쓰기만 한 탓에 나라빚은 무려 1천조원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오늘만 사는 정권'이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린 것입니다.

특히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로 일컬어지는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 사건은 국민에게 엄청난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나간 자리마다 의혹 투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수만을 앞세워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와 증인채택 요구를 모두 막아섰습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는 증인채택, 자료제출 모두 '0건'이라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오직 '재명수호'에만 사용하며, 국정감사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우리 국회의 권위를 완전히 추락시킨 것입니다.

자료도 없고, 증인도 없이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각 의원실과 당으로 많은 국민들, 특히 성남시민들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으며, 진실과 정의가 밝혀지기를 바라고 계심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방탄 국감'에 맞서 '국민 국감'을 치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진실을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끝까지 밝혀내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습니다. 또한 전국민이 지켜보는 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을 한 이재명 후보에게 '위증'의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문재인 정권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힘써 주신 의원님들과 보좌진, 당 정책위원회와 사무처 당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남은 정기국회 일정동안 문재인 정권 5년간 무너진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세우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책과 예산을 발굴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정권 교체로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1월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 정책위의장 발간사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 도 읍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국민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기조 아래 민심을 대변하여 문재인 정부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무도(無道)·무능(無能)·부패(腐敗), 그리고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법치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망치고,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유린했습니다.

임대차 3법 날치기 처리와 26번에 이르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살인적인 집값 상승과 연일 치솟는 물가, 주52시간제 및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비과학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골목 경제 붕괴, 선심성·시혜성 퍼주기로 인한 각종 기금 고갈, 국가채무 급증과 국민부담 증가,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의 폐단과 전기요금 인상 등 그야말로 민생 경제는 파탄이 났습니다.

여기에 공정과 상식의 파괴이자 내로남불의 전형인 '조국 사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LH 투기 사태'와 같은 각종 권력형 부패와 비리 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삶의 모든 부분이 피폐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였던 이재명 前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게이트는 전 국민적 분노와 공분을 샀습니다. 성남시와 성남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특정 민간업체와 측근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수익을 몰아줬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단군 이래 최대 민간 특혜'사건입니다. 이 때문에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조명하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대장동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경기도, 증인 채택을 철저하게 막은 더불어민주당 등 열악한 국정감사 환경 속에서도 우리 당은 이러한 특혜를 가능하게 한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이자 최종 책임자인 '그분'의 실체와 진실을 규명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 前 지사의 거짓말과 궤변, 말 바꾸기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에 우리당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사안을 지적하고, 이재명 前 지사의 몰염치한 민낯을 국민 여러분께 세세하게 보고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 국정감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실정 등에 대해 끝까지 국민을 대변하겠습니다. 향후 감사원 감사 청구를 비롯해 검찰 고발,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법률 제·개정 등 시정에 필요한 모든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도·무능·부패·무책임한 정책과 실정을 철저하게 지적하고, 품격 있는 정책 질의로 국정감사를 이끌어 주신 당 소속 국회의원님들과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당 정책위원회와 사무처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과 정책위원회는 국민과 민생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국민과 같은 눈높이로 각종 정책 현안과 사안들을 고민하고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1
국정감사 백서

PEOPLE POWER PARTY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국민의힘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대장동 게이트 의혹 진상규명 및 선거중립 촉구

대장동게이트에 대한 청와대 인식·대응 문제 지적

-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에도 부실한 수사 이유와 문제점 지적
- LH 사태 당시 연일 강경 메시지와 다른 청와대 입장 지적
- 대장동 사건 수사가 진행 중에 피의자가 될 수 있는 후보와 대통령 만남은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이자 선거개입 문제 야기할 수 있음을 주지

대통령 특검 도입 결단 촉구

- 국민의 70%이상이 특검을 원하는 여론조사 결과 민심으로 받들 것을 요구
- 대통령도 당대표·대선후보 시절 대형 사건들에 대해 특검 수차례 요구
- 검경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후보의 만남은 현재 진행중인 검경수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음을 주지

청와대의 선거 중립 대책 요구

- 대선 직전 국민현혹 매표용 남북 이벤트 불가
- 선거 중립 내각 건의, 선거와 관련있는 법무부·행안부 장관만이라도 중립인사로 교체할 것을 요구

이재명 후보 무료변론 등 불법의혹 제기

- 국가인권위원장, 이재명 지사에게 무료변론 통해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 형·형수 욕설, 형 강제입원 의혹 등 가족 인권 침해 문제 지적
-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시민 강제 행정입원 보도 관련 인권위 조사 요구 등

대장동 게이트 특검 도입 촉구

주요 내용 및 성과

■ 대통령의 특검 결단 촉구

-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수사 부진은 대통령 레임덕 현실화
  - 대통령은 지난 10.12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 지시했으나, 검찰은 코메디 같은 수사로 대통령 수사하명 불이행
  - 대통령비서실의 대통령 지시사항(신속 철저 수사) 점검 미이행도 질타
- 문재인 대통령, 당대표 및 대선후보 시절 검찰 중립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8차례나 특검 요구한 사례 상기
- 여론조사(10.11~12일 케이스탯리서치)에서 국민의 73%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응답, 민심 따를 것을 촉구
  - '특검 도입은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핑계로 침묵하는것은 국민여론 외면
- LH사태의 경우 3.3~10일 총 6차례 "전수조사"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수사력 총동원" 등 강경 입장에 비해 대장동 대응 확연히 차이남을 지적

■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회동(10.26)의 부적절성 질타

- 국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도 지켜보는데 회동 그 자체로 수사에 면죄부 가이드라인으로 비춰졌음을 지적
-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이 만난 것은 부적절한 처사이며 여권 지지층을 결집을 유도할 수 있는 사실상의 선거개입임을 지적
- 대통령이 민주당 당원이므로 자당 대선후보를 만날 수 있으나, 수사 범주에 있는 후보를 만난 전례가 없음을 지적
- 회동에서 대장동 언급은 없었다지만 묵시적 청탁행위 가능성 제기
  ※ 여당 일방적 국감 파행, 당소속 국회 운영위원 성명 발표(10.26)
  - 대통령과 자당후보 회동 부각시키기 위해 동일 시간대 청와대 국감 보이콧까지 벌인 '기획된 파행' 임을 강조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특검 수용 위한 대통령 결단 촉구(계속)

중립내각 구성 및 청와대 대선 개입 중단 요구

주요 내용 및 성과

■ 선거관련 부처 장관 민주당 당적 보유, 선거·정치 중립 붕괴 우려 제기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2월 "저는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라며 당파성을 서슴없이 표현한 바 있음을 상기
- 현재 법무부·행안부 장관이 여당 의원이고 총리는 여당 소속 정치인 출신, 대선 앞두고 민주당 당적 보유 총리 및 장관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
  - 16~19대 대선 당시 법무부·행안부 장관이 여당 소속이었던 적이 없으며, 4번에 걸친 대선에서 국무총리도 당적을 가진 적이 없음.
- 대선후보 관련 수사도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맡은 법무부장관(검찰 지휘)과 행안부장관(경찰 지휘) 아래에서 진행되어 선거의 공정성 위태로움 지적, 최소한 법무·행안 두 장관만이라도 중립인사로 교체할 것을 요구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도 아직 재판 진행 중임.

■ 남북문제 선거 이용 우려 제기

- 선거직전 가짜 평화쇼 기획 우려 제기
  - 교황 방북 통한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직전 시점의 남북 이벤트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 부각. 지난 지방선거 전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개최 상기
  - 대통령의 교황 방북 요청 여부 질의에 "교황께서 말씀하시면 대통령은 들으실 것으로, 먼저 요청할 것은 아니다"라는 국가안보실장 답변에 대해 국민상대로 말장난에 불과함을 지적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법무부·행안부 장관 중립인사 교체 및 청와대 선거 엄정 중립 요구(계속)

■ 남북문제 선거 이용 시도 중단 촉구(계속)

이재명 후보 무료변론 등 불법의혹 제기

주요 내용 및 성과

■ 이재명 무료변론,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제기

- 국민권익위원장의 발언("지인이나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다" 10.20 정무위 국감)에 따라 친분이 없는 이재명 지사 무료변론은 부정청탁의 소지가 높음을 지적
  - 국가인권위원장, '무료변론 요청은 이재명 지사가 전화를 걸어와 처음 통화한 것으로 개인적 친분은 없었고, 친한 사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답변
- 이재명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은 당시 상고이유보충서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서 2건도 제출했음을 확인
  - 상고이유서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충서 작성했을 것이라는 추론가능하며 이는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임을 지적
- 공무원에게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
  - 위원장은 단순히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상고이유서 초안 검토 후 제출
- 상고이유서 초안 검토 및 참여는 위원장의 경력 및 사건 수임료 사례에 비추어 일백만원 가치 이상의 이익 제공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있음.

■ 이재명 후보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인권위 조사 요구 등

- 친형·형수 욕설과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가족구성원에 대한 행동은 명백한 인권 침해임을 부각
  - 사실이라면 인권침해 문제소지가 있다는 인권위원장 답변에 여당의원 반발
- 김O랑씨 등 성남시민 23명 강제 행정입원 보도에 대한 인권위 조사 필요
- 성남시장 시절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에게 '이 사람 정신병자 같은데요? 등 '정신병자', '정신병원' 관련 잦은 언급 문제 지적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국가인권위원장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수사 촉구(계속)

국민의힘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관련 특검 촉구

- 성남시민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안기고, 특정인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준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철저 수사 촉구
-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사업에 대해 "내가 설계했다"고 직접 밝힌 만큼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함을 강조
- 특히 검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꼬리자르기식 수사에 대해 강하게 질타
  ☞ 검찰수사는 이미 많은 문제와 한계점을 드러냈으므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이 절실하다는 점 강조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관련

-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직후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과 관련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
-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 당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사실상 무죄를 주도했다는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
- 또한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전에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O배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여러차례 찾아간 사실을 밝혀냄.

고발사주·제보사주 의혹 관련

- 공수처의 불법 압수수색·야당탄압 수사에 대해 강력 문제 제기
- 공수처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문제 제기 및 수사 필요성 제기
  -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의결서 유출, 김웅- 조O은 통화녹음파일 유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검찰과 공수처에 촉구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검찰 부실·꼬리자르기 수사 지적 및 특검 촉구

주요 내용 및 성과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특검 필요성 피력

- 검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꼬리자르기식 수사 질타
  - 검찰이 유O규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핸드폰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를 언론에서 지적하자 거짓으로 해명, 경찰이 유O규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후에야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에 대해 질타
  - 김O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제대로 수사를 마치지도 않고 졸속으로 신청한 탓에 법원 기각 당한 점 비판
  - 법사위 종합감사 직후 유O규 기소를 발표하며 '배임'죄를 제외한 것에 대해 강력 문제 제기
  - 수사를 주로 담당했던 부장검사를 수사에서 사실상 제외시키는 등 검찰의 수사 의지와 진상규명 의지에 대해 문제 제기
  ☞ 이처럼 검찰의 수사는 역량부족, 의지부족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강조

-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밝힘.
  - 대장동 사업은 민관합작이라는 방식을 통해 토지수용, 인허가 등 개발의 리스크는 '관'을 통해 최소화시키고, 분양가상한제 등을 피하기위해 분양은 '민'에서 하도록 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창출해낸 사업
  - 특히 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겉으로는 성남시민에게 돌려준다고 홍보하면서 독특한 수익구조를 통해 특정 개인들에게 몰아준 '민관합작 사기극'임을 밝혀냄.
  - 또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러 공문서에 직접 사인한 점 등을 밝혀내 이재명 지사가 이 사업을 주도했음을 지적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旣 제출된 특검법 조속 처리 노력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旣 제출

대장동 게이트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수사 촉구

주요 내용 및 성과

■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지적

-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대법원 무죄 선고 관련 의혹 제기
  -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대법원 선고 당시 대법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에 손을 들어줘 사실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며 이재명 지사 무죄 선고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이후 화천대유 고문직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 제기
  - 초기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는 '상고 기각(유죄 선고)'였으나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일부가 무죄 의견을 보이자 '파기환송(무죄 선고)' 취지의 검토 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
  - 또한 대법원의 출입기록을 살펴본 결과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인 김O배가 선고 전 수차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찾아갔던 것을 밝혀냄.

-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지적
  -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매월 1,500만원 가량의 고문료를 지급받은 것은 변호사법 위반임을 지적

- 진상파악을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자세 촉구
  - 소위 '사법농단' 사건 때 여러차례 자체 조사를 벌이고 검찰의 수사 협조까지 천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라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
  - 실추된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자체 진상조사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주문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법원의 진상파악 및 검찰·공수처 수사 지속 촉구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정무위원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전방위 이슈 제기 및 책임론 집중 부각

이재명 대선 후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집중 제기 및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등 책임론 집중 부각

- 당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위와 연계하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및 무료변론 등 후보 관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공세적 이슈 제기 및 여론전 전개
  -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민간에 이익이 집중되도록 설계한 관련자들과 대선후보와의 관계, 특금신탁 뒤에 숨은 관련자들의 실체, 금융기관의 참여과정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주력
  - 특히, 백현동 개발사업의 비상식적인 종상향 인허가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역할 등에 대해 집중 문제 제기 등 책임론 부각
  - 또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CB 발행과 의심스러운 자금흐름에 대해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조사 촉구, 또한 무료변론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관련 권익위의 이재명 후보 구하기식 편향적 해석에 대한 집중 질타
- 민주당의 대장동게이트 핵심증인 채택 전면거부, 관련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실별 적극적인 관련 자료 확보 노력과 심도있는 분석 등으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어느정도 파헤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함.

정권말 알박기용 낙하산 인사 문제 집중 부각

- 금융 전문성이 전혀 없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금융공기업 낙하산 인사 시도 문제의 심각성 지적과 소속 기관장의 무책임과 각성을 촉구함으로써 일부는 내정이 철회되는 등 소기의 성과
- 정책기획위원회 및 청와대 출신 국책연구기관장들로 인해 국책연구기관이 국가미래가 아닌 정권편향적 연구를 할 우려 지적 및 개선 조치 요구

문재인 정부 정책실패 및 편향적 정책 집행 지적, 이에 정책 수정 및 제도개선 촉구

- 서민과 실소유자를 옥죄는 과도한 가계대출 규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술책임을 지적
- 정치편향적 행보로 국민분열을 야기하는 광복회에 대한 보훈처의 관리감독책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 지적

대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생방안 마련, 대규모 소비자피해 발생 사건에 대한 관련당국의 적극적인 조치 등 촉구

여권 대선후보 권력형 부패 카르텔

성남 대장동게이트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수용 촉구

주요 내용 및 성과

성남 대장동게이트 관련, 조사권한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조사 촉구

-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관련되어 민간업자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가져간 경우로, 심각한 공직자의 부패, 부조리에 대해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원 등이 직무유기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을 촉구
- 민관합동개발이란 명분 하에 공영개발 명목으로 땅수용과 인허가 등 개발관련 현안이 지나치게 유리하게 처리되었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음. 건설 과정에서도 특정건설사를 중심으로 시공담합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공정위가 담합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
- FIU가 이미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하고 경찰에 통보한바 있음. 특히 이 시기에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음. 비록 경찰의 무혐의처분이 있었다고 해도 FIU에 수상한 자금흐름 조사권한이 있으므로 조사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 하나은행이 당초 약정한 수수료 외 추가로 지급받음. 이 과정에서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성남의뜰 대표가 전결처리함. 하나은행 컨소시엄 선정과정, 이사회 개최과정, 수수료 추가 지급 과정 등을 금융위와 금감원이 능동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구
- 천화동인 관계자들은 SK특금신탁 내에 숨어있는 구조.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특금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특금신탁임을 표기하고 실제 투자자가 누군지 밝히도록 제도개선 요구
- 무자격자가 지방공기업 임원이 되고 그 자격을 바탕으로 고위직이 되면서 비리까지 발생한 상황. 국민권익위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경기관광공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요구
-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개발 민간회사에 대출을 해준 바 있는데 이후 그 부실채권을 인수한 예금보험공사가 제대로 채권회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대장동게이트가 발생할 수 있었음을 밝혀냄.
-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사업 진행시 사업성을 검토하고 보증을 진행하는데, 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부터 '대장동사업은 사업성이 크고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해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보증을 제공했다'는 답변을 얻어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감안해 설계되었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함.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및 무료변론 관련 문제 제기

- 이재명 후보의 초호화 변호인단 수임료가 시민단체 고발에 따르면 전환사채 발행을 포함, 23억원 규모라는 의혹이 제기됨.
  - 의혹의 중심에 있는 기업은 의심스러운 전환사채 발행 이력이 있고 그 기업의 관계사에 이재명 후보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이 사외이사로 참여하는 등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상황임을 밝혀냄.
- 또한 소위 '쪽지발행'을 통해 아무런 기록도 없이 누군가에게 거액이 지급될 수 있는 허점에 대해 예탁결제원이 상장사 CB 발행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주문
- 특히, 변호서비스는 엄청난 가치있는 무형서비스임에도 무료변론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므로 권익위가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

■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 식품연구원 부지를 4단계나 종상향을 하는 등 일반적인 개발과정과 달리 많은 의혹이 있음을 밝혀냄.
  - 감사원 감사 결과 자연녹지 해제, 종상향 요구 등에 문제가 있어 식품연구원 직원들은 해임처분 등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성남시청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음.
  - 이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과거 선대본부장 출신 김○○이 어떤 역할을 해서 70억원의 대가를 받았는지도 의문
  - 국조실 공직복무관실 등이 성남시청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을 요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관련 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인 점검

- 금융기관의 참여과정,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진행 및 수상한 자금흐름, 부적절한 수수료 지급 등과 관련 금융위, 금감원의 감독권한 행사
-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김영란법 위반 여부, 무자격자의 임원 채용 관련(채용비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대한 국조실 공직복무관실, 부패예방추진단 등의 조사 등

■ 관련 기관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국감 중 여실히 드러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 필요성이 명확해진 만큼 정기국회 내 특검 관철 추진

■ 금융관련 제도개선 추진

- 상장사 CB 발행의 투명성, 특금신탁을 통한 투자의 투명성 제고방안 등 제도개선 추진

문재인 정부 총체적 인사 난맥

정부 실정 감추기용, 전문성조차 없는 정권말 알박기식 낙하산 인사 비판

주요 내용 및 성과

■ 문재인 정부 실정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와 청와대 출신 국책연구기관장의 임명으로 인한 정권편향적 연구 우려 지적

-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출신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취임사에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가 의심되는 행보를 보였음을 지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마저도 청와대 행정관 출신 낙하산 인사 임명
  - 특히 해당자는 과거 대외경제연구원에 압력을 행사해 한미연구소 예산지원을 중단시킨 의혹의 당사자로, 대한민국 미래를 그리는 자리에 연구원에 대한 압력 행사 논란이 있었던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큰 문제임을 지적
- 국토연구원이 정부 정책 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강남아파트값 상승은 언론때문이라는 곡학아세식 분석을 발표한 것은 코드를 맞춘 친정권 낙하산 인사때문임을 지적(황덕순 노동연구원장, 이태수 보건사회연구원장, 홍장표 KDI원장 등)

■ 전문성 부족 정권편향적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 지적

- 금융관련 지식이나 법률전문가도 아닌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이O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예보위원으로 활동했었던 문제점 지적
  - 특히 예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법상 금지된 정치활동(이재명캠프 정책본부장)까지 했음을 지적
  - 금융위원장 추천인사임에도 금융위원장은 당시 담당자의 교체로 인해 관련 기록도 없고 추천 경위도 알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
- 한O진 전 노무현재단 본부장에 대한 예탁결제원 상임이사 선임 임시주총이 언론보도 이후 취소된데 대해 금융전문성이 전혀 없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에 대한 선임 취소인지 보류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

■ 보훈복지의료공단의 방만한 운영 지적

- 보훈병원 의사채용 과정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했다는 문제가 내부에서 제기된 바 있으며, 보훈공단 이사 선임 과정상 문제로 인해 징계받은 직원이 있으나 청와대비서관 출신 관리책임있는 이사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음을 밝혀냄.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연구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견제

■ 보훈의료복지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추진

말로만 서민경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

서민 실수요자에 맞는 적정수준의 가계대출 대책 마련 촉구

주요 내용 및 성과

■ 정부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가계대출 옥죄기는 반대, 실효성있는 현실적인 가계부채 대책 마련 촉구

- 개별 의원실에서 자체적인 여론조사 진행
  -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의 적절성에 대해 부적절 의견이 53.6%, 효과적인 부동산 가격상승 대처방안은 30.7%가 주택공급이라고 답변
  - 가계부채 증가이유는 문재인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 때문임에도 본질적 내용은 감추고 실수요자를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상황
  - 실수요자까지 옥죄는 과도한 대출 규제 정책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라는 청와대 지시에 따른 조치임을 지적
  - 국민이 수긍 가능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다시 제안할 것을 강력히 요구
- 인터넷은행의 전산미비로 전세대출 추가가 안되는 상황에서도 금융위는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라는 입장이고, 금감원은 약관만 점검하고 절차나 추후 문제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함을 지적
- '20년 가계대출 증가율이 11.4%인데 올해 증가율을 어떻게 6%로 묶겠다는 것인지, 6% 제시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지적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서민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요구

- 특히 선착순 대출 등 현장에서 대출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금감원이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문재인 정부 이념 편향적 인사 운영

편향적인 정부 정책 시정 요구

주요 내용 및 성과

■ 국가보훈처의 편향적 보훈정책 집행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시정 요구

- 김원웅 광복회장 부모의 공적 검증 관련 보훈처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여전히 의혹은 해소되지 않음.
  - 공적검증위원회 명단이나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공적조서, 자필공적서 등도 개인정보란 이유로 미공개 상태. 별도로 입수한 자필공적서를 보면 필체가 완전히 다르며 공적서상 기록과 한국독립운동사 기록이 상이하는 등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지적
  - 정치편향적 행보를 계속해 논란이 되는 광복회에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보훈처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 마련 촉구

- 국무총리가 천안함 생존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약속했음에도 후속조치는 매우 미흡함을 지적. 심지어 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장은 천안함이 북한에 의한 폭침인지 아닌지 사실관계를 몰라 답변을 하지 못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

■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의 심각성 지적

-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출범 당시부터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참여하여 향후 편향성 논란이 우려되어 청년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으나 국조실은 대책마련도 없이 편향성에 문제없다는 태도로만 일관
  - 청년정책조정위원 일부가 특정대선후보 캠프에 참여하는 등 이미 편향성을 강하게 띠고 있어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

■ 산업연구원의 도덕적, 법적 해이 지적

- 산업연구원의 수리온헬기 관련 연구를 진행한 센터장이 KAI 고문을 맡은 바 있어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며 국조실은 산업연구원에 징계를 요구한 바 있음.
  - 산업연구원이 해당자에게 경징계처분을 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매우 경미한 징계임을 지적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청년기본법 개정안 적극 추진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정치적중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 추진

■ 산업연구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추진

-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봐주기식 경징계에 그친 산업연구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추진

벼랑끝 골목상권

대기업- 골목상권의 상생을 위한 대안 마련과 기업의 잘못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주요 내용 및 성과

■ 카카오의 소상공인 골목상권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카카오는 혁신기업으로 국민의 지지 속에 성장한 기업임에도 현재는 과도한 계열사 확장 등 전형적인 독점대기업의 행태를 보이며 소상공인과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기업으로 비판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지적
  - 특히 자회사를 통한 동일인 가족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횡령과 배임의 문제까지 연결됨을 지적
  - 카카오가 내놓은 대책이 임시방편이 되지 않도록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상생할 수 있도록 개선안 요청

■ 머지포인트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응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불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으로 환불 진행 등 점검
  - 불투명한 환불 계획,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등록 여부의 불명확성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상화 불가능
  - 머지포인트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선 오픈마켓이 공동책임을 지는 방안까지도 공정위가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대기업과 골목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마련 추진

■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플랫폼 업체가 공동책임을 지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처리 추진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문재인 정부 5년, 경제 실정 비판

-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시장은 왜곡되고, 재정은 바닥나고, 민생은 피폐해졌음.
  -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일자리는 줄고 실업률은 급등.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쏟아부었으나 효과는 미미. 재정 일자리를 통해 초단기 임시직만 양산, 고용의 질은 떨어지고 고용 통계만 정권 입맛에 맞게 분식. 실업급여 인상과 중복지원으로 기금만 고갈시키고 국민 부담만 증가
-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폭등·매물실종·세금증가·전월세난 심화. 집 가진 자는 투기꾼으로 만들고, 무주택자는 절망에 빠뜨린 무능한 정권
  - 증세와 대출규제, 주택공급 실패, 임대차 3법으로 시장 혼란 야기. 서민과 실수요자의 피해 급증. 지난 7월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 국민의 9%만이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
  - OECD 평균에도 못 미쳤던 부동산 보유세는 올해 최초로 OECD 상위권 차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대장동 게이트' 탈루 의혹 추궁

- 대장동 개발사업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악질적 설계로, 단군 이래 최악의 비리 사건으로 기록될 것
- 지난 4월부터 의심스런 고액 현금흐름에 대한 FIU 통보를 받았음에도 차일피일 수사를 미루며 세무조사도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한 정권
- 관련 증인 채택 전무,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여당의 방해로 진실을 파헤치는데 한계

공공기관 방만 경영 질타

- 공공기관의 몸집은 급속도로 증가한 반면, 수익성·생산성·안전성 지표는 문 정부 들어 모두 최악
  영업이익률은 2016년 대비 1/3 수준으로 급락, 순이익도 7년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해 부실 덩어리로 전락
- 임직원 수는 2만4천명 증가해 인건비도 3조원 가량 급증. 적자나고 부채 늘어도 공기업 임원들은 성과급 잔치. 직원들의 초호화 사내 복지도 여전
- 공공부문 일자리 양산, 비정규직 제로, 정권 맞춤형 경영평가, 공공기관의 부실 경영으로 인한 손실로 국민 부담만 증가

민생 현안 중심의 정책 국감

- 고공행진하는 유가, 공공요금 인상, 장바구니 물가 상승에 대한 정부 대책 요구.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던 기재부, 초과세수에 힘입어 유류세 인하 전격 결정
- 고소득자에게 지급된 EITC 문제 지적, 외국인 부동산투기근절방안 등 요구

문 정부 경제정책 평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평가는? 「전 과목 낙제」

주요 내용 및 성과

■ 문재인 정권만 모르는 경제 실정

- '文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악화' 62.2%, '잘한 정책이 없다' 42.3%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41.0점 ▲주52시간제 도입 등 노동정책 44.4점 ▲코로나19 위기대응 44.1점 ▲부동산정책 27.9점 ▲청년일자리 정책 44.3점
- 응답자의 45.5%가 '0'점을 준 부동산 정책…74.2%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 혹평 이유로 ▲일관성·실효성 없는 정책남발 40.3%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서민·실수요자만 피해 30.9%
  - '내 집을 마련하거나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기 어렵다' 81.4%
  - 가장 잘못한 부동산 정책은? ▲양도세 및 보유세 인상 20.5% ▲대출 규제 강화 20.3% ▲임대차 3법 17.3% 등
  - 작년 통과된 임대차 3법 관련, '도움이 되지 않았다' 54.7%, '오히려 전월세난을 심화시켰다' 32.3%
- 청년일자리 정책 평가 '최악'
  -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89.2%, '현 정부에서 더 악화됐다' 43.1%
- 文 대통령과 홍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고 강변해왔으나, 민심은 현 정권의 독선적 경제 정책에 분노.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 방향을 대대적으로 전환할 필요

  * 추경호 의원·한국경제신문 공동 여론조사 결과, 모노리서치/9.19~9.25/국민 3,082명 대상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정권이 바뀌어야 '비정상의 정상화' 가능

- 文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실태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잘못된 정책은 즉각 폐지하거나 정권 출범 이전으로 환원
- 실효성이 없거나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정비 필요

공공부문 개혁

허위공문발송·유령청사신축·먹튀특공… 관세청 주연 막장 사기극?

주요 내용 및 성과

■ 거짓 행정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재정을 낭비한 관세청

2005년 10월	행자부, 관평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제외기관으로 고시 관세청, '15년부터 청사 신축 추진
2017~2018년	행복청, 건축허가 검토단계에서 관평원이 이전제외대상임을 알고 문제 제기
2018년 2월 8일	관세청, 이전승인 예정이라는 거짓 공문을 행복청에 발송
2018년 2월 26일	관세청, 행안부에 고시 변경 요청
2018년 3월 29일	행안부, 변경 고시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
2017.5~2019년 7월	관세청, 이전 주장하며 직원 82명 중 49명이 무자격 특공 당첨
2018년 6월	행복청, 행안부에 공식 확인하지 않은 채 건축 허가
2018.9~2020년 8월	관세청, 관평원 세종시 청사 신축 진행
2019년 9월	행안부, 뒤늦게 확인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2020년 10월	행복청, 특공 대상자 확인서 발급 중지 요청
2020년 11월	관세청, 관평원 대전 잔류 결정
2021년 5월	행복청, 관평원 특공대상기관 지정 취소

- 관세청의 위법적 행태 ① **거짓 공문 발송으로 막대한 혈세 낭비**
  - 관세청 직속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은 이전대상기관이 아님에도 세종시에 연면적 4915㎡ 규모의 유령 청사를 신축해 171억원의 재정 낭비

- 관세청의 위법적 행태 ② **소속 직원들의 무자격 특공 수혜**
  - 유령청사 빌미로 관평원 직원 전원 특공 신청해 49명이 당첨. 관평원 원장도 셀프 특공 수혜 누리고 분양받은 해에 명예퇴직. 시세차익만 3년간 5억원

- 관세청의 위법적 행태 ③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無**
  - 이전검토·특공신청·거짓공문 발송 등 책임자는 모두 퇴직한 상황.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정부 차원의 징계와 사후조치는 전무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불법 행위를 저지른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인 관평원에 대한 감사 요구

-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 및 재발방지책 마련
- 특공 수혜자 이익 전액 환수조치, 미입주 직원 31명에 대한 입주 중단 조치
- 관세청·기재부·행안부·행복청·LH 등의 관련 책임자 징계

대장동개발의혹 진상규명

막대한 개발이익, 의심거래, 탈세의혹...
손 놓고 있는 국세청

주요 내용 및 성과

■ 대장동게이트, 천문학적 이권이 오고간 민관 개발사업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참여한 화천대유, 5천만원을 출자해 수천억원의 이득을 얻는 과정에서 원주민 등 피해 발생
  – 토지 수용단계에서 헐값에 토지를 수용, 분양 시에는 가격조정 없이 민간업자만 막대한 이득을 취함.
- 개발사업의 3대 리스크인 인허가·토지매입·분양리스크가 전무한 엄청난 수익만 계산된 사업. 사업자 공모에서 초과수익 제한 조항과 토지매수가격제시가 빠진 것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

■ 화천대유 횡령 및 탈루 의혹 제기

- 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거래 정황 포착, 수상한 대여금 이자지급(6.9%→25%), 대여자와 차입자간 서로 다른 이자비용 기재(이자비용 차액 연 4.1억원), 고액급여 지급 등의 사례를 볼 때 횡령과 탈세가 의심. 즉각적인 세무조사 착수 요구

■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한 국세청, 팔짱끼고 방관한 여당

- 정O학 회계사가 포함된 도원 회계법인 회장이 전직 광주국세청장 출신, 성남의뜰 감사를 한 중앙회계법인 대표가 전직 인천청 조사국장 출신으로 봐주기 조사 의혹 제기
- FIU로부터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정보를 제공받아 세원 확보를 해온 국세청, 지난 4월 화천대유 관련 보고를 받았음에도 답변 거부
- 국회 차원의 화천대유 관련 납세자료 제출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은 민주당. 그리고 자료 제출을 끝까지 거부한 국세청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대장동 게이트 관련 철저한 세무조사 촉구

-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국회 차원의 대응 필요. 과세자료 비공개 열람 요구

이재명 경제 공약 비판

망국의 지름길, 악성 포퓰리즘 정책 '기본소득'

주요 내용 및 성과

■ 전국민 기본소득 실현 … 5년간 나랏돈 252조원 소요

- (최초) 전국민에게 연간 25만원씩, 청년(19~29세)에겐 연간 125만원 지급
  (이후) 전국민에게 연간 100만원, 청년에게 연간 200만원 지급
- 2023~27년 기본소득 지원에 따른 재정소요는 252.5조원, 연평균 50.5조원
  - '22년도 국방예산 55.2조원, 작년 법인세 총세수 55조원, 부가세수 65조원
  - 국토보유세 등을 부과해서 재원 마련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보유세는 이미 OECD 상위권 랭킹

■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 기본대출 … 나랏돈 약 440조원 소요

- 10~20년 장기 저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 가능
- 전체 성인 인구 1000만원 대출시 439.3조원('20년 성인인구 43,929,147명 기준)
  - 문재인 정부 '17년 2분기 대비 '21년 2분기 가계대출잔액 증가액 392.5조원 (1312.8조원→1705.3조원)
  - 전체 국민 중 대출 중인 사람들이 모두 대출을 받을 경우, 약 200조원
    ('21년 1분기 기준, 개인대출자 약 2000만명 기준)
  - 기본대출의 부실위험 규모 200조 중 약 50조원(고위험대출 차주 규모 25.1%)

■ 주요 경제부처 입장은 '반대'

- 한국은행, '재정부담 증가, 도덕적 해이 등 나타날 수 있어 그 편익과 비용에 대한 엄밀한 평가, 국민적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
- 기획재정부, '민간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 금융위원회, '정책 서민금융의 목표, 재정 부담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한정된 재원으로 서민금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저신용자들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데 집중할 필요'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여당 후보의 악성 포퓰리즘 대선 공약 저지

- 기본소득·기본대출 공약의 허구성과 부작용에 대해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 대국민 홍보전

시민단체의 예산 사유화 비판

친여 시민단체들의 돈줄된 '사회가치연대기금'

주요 내용 및 성과

■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둔갑해 돈 주머니 불려온 친여 시민단체

-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직시 서울시 예산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들었던 시민사회단체가 정부를 앞세워 금융권, 중앙정부 예산까지 사유화 시도
  -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며 친분있는 특정 단체에 돈을 맡기고, 관련 단체에 용역과 기금을 몰아주며 이자 수익까지 챙긴 정황 포착
  - 2019~2020년에 공기업과 민간은행으로부터 확보한 금액만 283억7290만원

■ 허위 사업계획서로 비영리법인·지정기부금단체로 허가해준 기재부

- 기재부, 허위 사업계획서로 지정이 불가능한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를 2018년 12월 비영리법인으로 인가. 2019년 6월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 기재부, 법 제정 없이는 출연·출자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정부가 1500억원을 기금에 출연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명시했음에도 이를 묵인·방치
  -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법규상 대표자가 특정 정당 및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지정. 재단 이사장인 송 신부는 '박원순 시장 추모단체 대표',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발기인'으로 활동하며 SNS를 통해 정치 선동을 일삼는 정치편향적 인사

■ 허위 소개서로 금융기관 갈취한 사회가치연대기금

- 사회가치연대기금, 2019년 2월 기재부가 1500억원 출연한다는 허위 소개서로 은행연합회에 1000억원 출연 요청. 부담을 느낀 은행연합회는 600억원 결정
  - 은행연합회는 600억원 중 250억원은 기존 예산으로, 남은 350억원은 사업조정을 통해 조성, 여의치 않을 경우 은행권의 추가 출연까지 고려
- 기재부가 2018년 2월 발표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자발적 출연· 출자, 기부 등으로 주요 재원을 확보한다고 했으나, 실상은 할당에 따른 강제 출연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허위문서 작성, 현금 갈취 등 사기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 필요

- 기재부에 즉각적인 인가 및 지정 취소 요구
- 시민단체의 예산 사유화를 막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제) 입법 저지

국민의힘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마지막 국감으로 수적인 열세에도 문재인정권 5년과 좌파 교육감들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침.

- '교육 부패 끝판왕 조국' 비호하는 부산과 경남의 '조국 수호 교육감'
- 서울대 교수 직위 해제 후, 20개월 간 5,600여만 원의 급여 수령한 무위도식 조국
- 조국 전 장관 자녀 부정 입학에 대해 "최종심을 지켜봐야 한다"는 차O인 부산대 총장의 이해 안되는 답변
  - 반면에 최O실 딸 정O라 사례와 숙명여고 쌍둥이 자녀 시험지 유출 사례 모두 재판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각각 입학 취소와 퇴학 처분이 이루어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특별채용 불법 의혹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유물로 전락해 버린 무자격 교장공모제
  - 무자격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유출 비리에 연루된 인천교육감 보좌관과 전교조 출신 인사들에 대한 재판 진행 중
- 코로나19 시국에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협의회 2시간 협의 위해 1박 2일 동안 세금 1,300만 원 사용 등

동시에 4차 산업혁명과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우리 교육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고찰해 보는 정책 국감 활동을 전개함.

-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정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의 강력한 대응 주문
-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
- 유튜브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썸네일에 아이들의 무분별한 노출 대책 방안
- 점점 증가하는 학교폭력을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방안
- 학생, 학부모와 소통없이 엉터리 용역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 18.5조 규모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사업성 재점검 필요 등

공동체와 국민분열

아직도 진행중인 '교육 부패 끝판왕 조국' 지키기

주요 내용 및 성과

■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조국 지키기'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답변 받아냄.**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 직위 해제 후 20개월 간 5,600여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해
  ⇨ 유은혜 교육부총리, "수업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것은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 과거 대학 총장 신분으로서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 아주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주장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입장인지?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을 옹호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기재)
  ⇨ 정O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당시 무리한 판단, 적절치 않았다"

- 조국 전 장관 자녀 조O의 부정입학에 대해 부산대학교가 조속히 입학취소를 해야 한다고 지적함. 최종심을 지켜봐야 한다는 차O인 부산대 총장의 주장은 말이 안됨.

- 교육감들이 교육과 학생은 뒷전이고 조국 전 장관과 그 지지자들의 심기만 살피고 있음.
  - 지난 6월 13일, '온 가족인 조리돌림을 당하는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살아돌아온 그가 고맙고 또 고맙다며 부산교육감은 페이스북에 격려와 응원의 글을 남김.
  ⇨ 김석준 부산교육감, "당시 주위에서 비판도 받고 우려도 있고 해서 글을 삭제했다"
  - 웅동학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고 정O심 전 교수가 여전히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경남교육청의 노력이 전무함.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교육부 소관 공공·유관기관의 장 및 교육감들의 정치 편향적인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안 발생시 상임위 회의에서 문제 제기

■ 부산대 공정위원장이 조O이 24등인데 3등으로 허위발표한 것을 비롯해 부산대 공정위가 조O 입시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교육부 감사를 요청함.

공동체와 국민분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유물로 전락해 버린 무자격교장공모제

주요 내용 및 성과

■ 전교조가 참교육을 실천하는 단체가 아니라 교육청 등 교육계를 장악하려는 이익공동체로 전락함.

- 2021년도에 실시한 교장공모제(내부형B)를 통해 임용된 교장 48명 중 30명(62.5%)이 전교조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됨.

■ 조희연 서울교육감

-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사전 내정하고 불법 특별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짐.
  - 학생들, '조국아빠, 조희연 삼촌 없으면 그냥 찌그러져 살아야 되냐'며 탄식 자조함.

  ⇨ 조희연 교육감, "적법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으나 적합성과 사회적 공감 부분에 대해 조금 우려를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답함.

■ 도성훈 인천교육감

- 전교조 출신인 교육감 전 정책보좌관과 장학사가 같은 전교조 출신 교사를 공모 교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면접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임.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교육부가 '2022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안)'에서 제도 개선을 함.

-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공모교장 심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7명 이상으로 하고, 자기소개서 등에 특정인사 및 단체와의 연관성을 기재할 경우 만점의 10% 이상 감점 조치 등임.

■ 지난 5월, 17개 시·도교육청의 무자격 교장공모제 운용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해서 감사원이 검토중임.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위기의 '지거국'(지방거점국립대)과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주요 내용 및 성과

■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지역거점국립대학교가 위기

- 충북대는 2021학년도 입학인원 2,976명 대비 합격 포기인원은 4,393명으로 147%에 달함.
- 부산대는 2021학년도 모집 인원은 4,567명이며, 합격증을 받았으나 입학하지 않은 인원은 3,825명(83.7%)임.
- 경북대는 2021학년도 모집 인원은 5,018명이며, 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입학하지 않기로 한 인원은 4,362명(86.9%)임.

  ⇨ 지방에 위치한 대학들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서 특성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함.

  ⇨ 지방대의 건재는 지방 일자리 창출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나아가 정부 부담 GDP 대비 대학교육비 비율은 0.6%에 불과해 OECD 회원국 평균의 1%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임.

■ 대학들의 자정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함.

- 충남대 교직원 단체 골프 논란, 심지어 조사보고서를 해당 골프동호회 회장인 총무과장이 '셀프' 작성함.
- 국립 인천대는 작년 9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총 52건의 지적사항 받음.
  - 공식채용 절차도 없었고 취업규칙까지 바꿔가면서 내부 직원을 전략기획실장으로 채용, 채용된 전략기획실장은 고용기간을 스스로 늘려 '셀프 재고용'하고 교육부는 감사결과를 늦게 통보하여 관련자들이 퇴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줌.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에서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 대학들의 자발적인 퇴로 마련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을 공유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함.

■ 충남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요청하고 인천대에는 감사원 감사를 요청함.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

멈추지 않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주문!

주요 내용 및 성과

■ 멈추지 않는 중국의 역사 왜곡 실상을 널리 알림.

- 중국은 교과서를 통한 역사 왜곡을 넘어 영화·드라마·게임 등 문화콘텐츠를 이용하여 역사를 왜곡함.
  - 김치를 중국음식으로 소개하고,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홍보영상과 중국 열병식에서 우리나라의 한복·장구·상모돌리기를 등장시키는 등 전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음.

■ 우리나라 대학에는 중국 공산당 선전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공자학원이 21개나 있고 5개의 공자학당도 운영되고 있음.

- 세계적으로 공자학원을 폐쇄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정부는 공자학원 폐쇄에 미온적인 입장임.

공자학원 운영 21개 대학 현황 ※자료:공자학원총부 공시

구분	학교명
국립대 (6개)	강원대, 인천대, 충남대, 충북대, 안동대, 제주대
사립대 (15개)	연세대, 한양대, 한국외국어대, 경희대, 우석대, 제주한라대, 우송대, 동아대, 동서대, 호남대, 계명대, 세한대, 순천향대, 원광대, 세명대

■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교육부도 적극 나서야 함.

- 10월 25일은 고종황제가 1900년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하면서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임을 밝힌 날로, 현재 민간에서 독도의 날로 기념하고 있음.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정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의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함.

- 우리나라 대학에 있는 공자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22 예산안 심사에서 적정 예산을 검토함.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요 내용 및 성과

■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부터 일반인까지 과거 학교폭력 논란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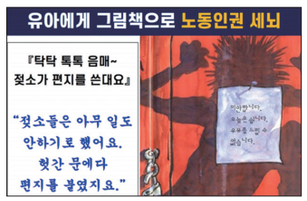
-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생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일정 기간동안 보존해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불이익과 경각심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 주문

■ 유튜브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썸네일에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음.

- 유은혜 교육부총리, "저희도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구글과의 협의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들과 공동으로 대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함.

■ 전교조가 유치원생에게 그림책으로 노동인권 수업을 진행하고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함을 지적함.



■ 인류가 AI와 공존하는 시대 도래로 정보교육 강화는 시대적 요구임.

- 교육과정에 AI 등 정보 관련 과목 수업 시수가 적정 포함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검토가 필요함.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충분한 소통으로 취지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개) 발의 예정

국민의힘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대선 앞두고 편파방송 극성

- KBS·MBC, 방통위·방심위의 편파방송 및 편파운영의 다양한 사례 지적
-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팩트체크넷 사업의 아전인수식 편파 운영 실태 지적
- MBC 도쿄올림픽 자막 방송사고 책임자의 자회사 이사 취임 등 제식구 감싸기 인사 행태 지적

대국민 사기극 5G 정책 실패

- 28GHz가 LTE 대비 20배 빠르다는 이론적 속도를 대통령이 나서서 대국민 홍보전을 벌였으나 실제로는 기지국 설치율이 0.35%에 불과
- 처음부터 불가능한 목표를 가능한 것처럼 포장하는 데 급급. 기업으로부터 전파사용료 6천억원을 갈취한 셈이 됨.
-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기업체 사용에만 집중하고 6G로 직행하는 전략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폐해 갈수록 심각

- 영세소상공인을 먹잇감으로 삼는 '플랫폼 갑질' 행태 팽배
- 카카오모빌리티, 쿠팡, 야놀자 등 플랫폼 기업들의 다양한 갑질 행태 지적
- 시가총액 기준 네이버는 재계순위 3위, 카카오 6위, 쿠팡은 7위를 기록, 코로나 사태로 급속성장 중,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 다 할 것을 요구

대선 앞두고 짙어진 방송 정치적 편향성, 방송의 공정성·중립성 촉구

주요 내용 및 성과

선거를 앞두고 짙어진 방송의 정치적 편향성, 방통위와 방심위, KBS, 방송문화진흥회 등 방송의 공정성·중립성 강력 촉구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송의 정치적 편향성 가중. 관련 여·야 정치 보도의 횟수, 내용 등을 시각화해서 집중 질타하고 방통위, 방심위의 갈지자 심의·방송정책 문제에 대한 개선 강력 피력
- 정치적 편향성 문제와 함께 MBC 뉴스데스크 녹화 방송 문제, 도쿄 올림픽 저질 자막 문제와 관련자 솜방망이 처벌 문제 등도 제기해 방송의 질에 대한 근원적 문제점 지적
- 북한 조선 중앙 TV 등에 용이한 접근이 여전한 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관련 대응책 마련 주문
- '팩트체크넷'으로 대표되는 정치 편향 팩트 체크 행위에 대한 부실함, 조악성 등에 대해 비판하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관계자에 대해 집중 질타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방송의 공정성·중립성을 위한 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 통과 노력 등

- 현재 상임위 계류중인 방송법(개) 등 방송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함께 향후 미디어 공약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기 위한 정치적 중립성 제고 노력

정부와 여당의 대국민 사기 5G 정책 실패

주요 내용 및 성과

■ 대통령·정부·여당이 과대 선전한 '20배 빠른 5G 통신'의 허상을 실증적인 논거로 파헤치고,국민 통신 편익 증대를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

- 2019년 문재인 대통령·정부·여당은 20배 빠른 5G 서비스 28GHz 주파수 대역을 기준으로 홍보해 왔으나, 실제는 3.5GHz 대역으로 전국망 구축(3.5GHz는 LTE보다 4배, 28GHz는 LTE보다 20배 빠름.)

- 연말까지 2,000만명 이상 5G 서비스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통 3사 5G 커버리지는 여전히 전국 균일 포괄이 안되는 것으로 파악. 5G 통신 품질 관련 집단 소송도 진행중.

-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0배 빠른 28GHz 무선국은 (2021년 6월 30일 현재) 125개에 불과하며, 수신 단말기도 부재함을 확인했고,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과 대국민 통신 서비스 제고를 위한 노력 주문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국민들에게 서비스 가능한 5G 무선국 설치 등 구체적 대안 제시

- 5G 품질 개선과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5G 무선국 2만개 추가 설치 대안 제시
- B2B 등 대비 위한 5G 정책에 대한 세밀한 조정 주문
- 글로벌 통신 환경 변화에 따른 6G 기술 개발 등 강조

플랫폼 독과점 폐해

주요 내용 및 성과

■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 확장 '플랫폼 갑질' 문제에 대한 다각도 분석 및 문제점 심층 제기 및 개선 방안 마련 촉구

-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가 상시화 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현상 심화 가중되었음. 관련, 플랫폼 기업은 시장형성→수요공급창출→전면 유료화가 주요 이익 회수 전략인데, 관련 기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전면적인 이익 충돌 현상 심화된 것으로 파악

- 특히, 종합감사시에는 여·야 치열한 힘겨루기 끝에 국민의힘 중심으로(박성중 국민의힘 간사)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일명 네카쿠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직접 독과점으로 인한 과잉 수수료, 시장질서 혼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적 몰락 등 사안에 대한 문제점 제기하고 개선책 마련 주문

- 개별사안으로는 카카오T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역에 대한 과도한 침식(택시 호출 중개 앱으로 시작해 대리운전, 바이크, 주차, 셔틀, 기차 등 이동 수단 전체 포괄 플랫폼)으로 인한 이용자 서비스 차별 문제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 상실 문제.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 정산의 지체 문제, 야놀자 등 숙박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음.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기존 업계와 공생할 수 있는 법제 마련과 플랫폼 업계의 자구 노력 스크린

- 기존 업계와 공생할 수 있는 법제 마련 및 타 상임위 연계 법제
-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플랫폼 업계의 자구 노력 스크린

탄소중립을 위한 현실적 과학기술 정책 점검 및 대안제시

주요 내용 및 성과

■ 탄소중립을 위한 현실 가능한 과학기술 정책 점검(안전한 원전 정책)

- 최근 문재인 정부 탄소중립위는 2030년까지 40%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등 탄소 중립 정책 목표치를 지속 상향시키고 있으나, 관련 탄소 감축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대안은 부실함이 밝혀짐.

- 무리한 탈원전 과속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정책적 타당성 논리 마련을 위해 월성 1호기 삼중수소 누출문제 등 원전의 안전성을 고리로 원전의 단계적 폐지 등을 정책화하고 있으나, 독일을 제외하고 전세계적으로 국가와 기업은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의 에너지 기술 채택을 긍정하고 있음을 구체적 논거로 제시함.

- 또한, 민주당은 월성 1호기 삼중수소 누출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원전의 안전성을 폄훼했으나, 관련 보고서와 엔지니어 등의 설명을 통해 삼중수소가 외부에 누출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지역 주민들의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선동'에 가깝다는 점을 부각시켰으며 보고서 유출 문제 등 보안 강화 필요성 강력 피력

- 특히 정부 여당의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 대안으로 무탄소 발전 등 실험적 기술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과학기술계와 대한민국 산업계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SMR(소형모듈원자로), 파일로 프로젝싱 기술 수준 등 에너지 기술 등 점검하고 관련 대책 강구 주문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과학기술 대안 등 점검 및 관련 예산 계획 검토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의 과학기술 대안 수시 점검하고 관련 예산 계획 등 종합 검토

OTT 등 방송·통신 글로벌 환경 급변과 국내 방송 통신 정책 긴급 점검

주요 내용 및 성과

■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국제적 흥행'이 상징하는 OTT 등 방송·통신 글로벌 환경 급변에 대응하는 국내 방송 통신 정책 긴급 점검 및 대안 제시

- 2021년 세계 미디어 시장의 화제는 대한민국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흥행임. 전세계 80개국에서 1위의 자체 흥행을 보인 오징어 게임은 콘텐츠 산업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취약한 국내 콘텐츠 개발 환경에 대한 경종을 울렸음. IP(지식재산권)이 넷플릭스에 귀속되는 계약 관계에 대한 문제와 함께 국내 콘텐츠 산업 환경의 후진성,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글로벌 컨텐츠 업체에 대한 문제 등이 집중 제기됨.

- 특히, 장기적으로 머니게임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고, 하청기지화가 되면 한국 시장에는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

- 방송계는 KBS, MBC 등으로 대표되는 올드 미디어의 양적 팽창과 예산 타령으로 일관, 적자 운영에 늘어나는 고임금 인력 구조 등 방만 경영도 여전하다는 점 집중 제기

- 관련 기존의 방송·통신법제와 규제 일변도의 위원회, 컨텐츠 계약 관계 등에 대해서는 무능한 현재 방송·통신 관련 기구로는 더 이상 OTT로 대표되는 글로벌 방송·통신 흐름에 조응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남.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관련 법 개정 및 위원회 위상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 검토

- 글로벌 방송·통신 환경에 조응하는 법제 개정 및 관련 기구 위상·기능 구조 조정 필요

국민의힘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문재인 정부는 임기말 성과에 급급해 종전선언 집착하면서 북한 김여정 눈치 보느라 안보마저 포기

-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후 당초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북한이 선결조건을 내세우며 김여정 담화를 통해 "종전선언 제안은 좋은 발상"이라며 관심을 보이자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 추진에 열중
  - 하지만 북한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이란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고 대한민국은 무장해제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도사린 무책임한 처사란 점에서 경각심 필요
-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도발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북한 김여정의 협박에 굴복해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급기야 SLBM 발사에 대하여 이를 도발로 규정하거나 규탄도 하지 않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다른 양태를 보이며 엇박자 노출
  - 심지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전략적 도발은 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대화 탐색용"이라는 인식을 밝혀 북한을 두둔하는 지경

인권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이중적 행태

- 말로는 인권을 내세우지만 북한인권은 철저히 외면하고 심지어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이중적 행태
  - 북한인권재단 출범 마냥 지연,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외면, 우리국민의 피해에 무관심, UN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부실외교에 이어 인사실패까지

- 한일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일본이 기피하는 인사를 주일 대사로 기용해 관계개선의 장애물로 작용
- 대중 외교는 과도한 저자세로 상호주의 원칙에 불균형을 보이는 가운데 과거 교수로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밝혀지고 주재국 인사들과 적극적인 교류도 없는 주중 대사가 버젓이 재임

국익에 기반한 정책 제언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및 쿼드 참여 등 인도·태평양 시대에 부응하는 외교 전략
- 정권의 눈치 보지 말고 원전 수주를 향한 해외공관의 적극적인 활동
- 해외동포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모국과의 연대감 강화를 위한 재외동포청 설립

위험이 도사린 종전선언은 도박에 불과

주요 내용 및 성과

■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기류 변화

- 2018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고 밝혀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을 명확히 했으며 북한은 거세게 반발
- 2020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고 밝혀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동일선상에서 언급했으며 북한은 무반응
- 2021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고 밝혀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로 우선순위가 뒤바뀜

■ 북한의 반응

- 당초 북한은 리태성 외무성 부상을 통해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가 이후 북한 김여정이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관심을 표명하고 ① 서로에 대한 존중 보장 ② 적대시정책 철회 ③ 이중기준 철회 등 선결조건을 제시

■ 위험이 도사린 종전선언

- 북한이 하노이 회담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종전선언에 대한 선결조건을 내세우며 호응했는데 선결조건이란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폐지 ▲전략무기투입 중단 ▲첨단무기개발 및 도입중단 ▲北자위력 강화(핵·미사일 개발) 용인 ▲적대적 언동(도발, 위협) 사용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것이란 점에서 우리의 안보와 직결
  - 결국 종전선언에 대한 이견으로 한미 동맹에 손상만 야기할 우려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북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의 허구성 지속적으로 제기

■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와 결속이 훼손되지 않도록 위험천만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감시 및 견제

북한의 '도발'을 도발이라 말 못하는 문재인 정부

주요 내용 및 성과

■ 2021년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 1월 22일 순항미사일 2발
- 3월 21일 순항미사일 2발
- 3월 25일 탄도미사일 2발
- 9월 11~12일 순항미사일 2발 (신형장거리)
- 9월 15일 탄도미사일 2발 (철도이용 발사)
- 9월 28일 탄도미사일 1발 (극초음속)
- 9월 30일 지대공 미사일
- 10월 19일 SLBM 1발

■ 김여정 협박에 굴복한 문재인 정부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SLBM 발사는 이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도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여정이 9월 25일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담화를 낸 이후 문재인 정부의 발표에서는 '도발'이라는 표현이 실종

■ 북한의 도발을 도발이라 말 못하는 문재인 정부

- 북한의 SLBM 발사와 관련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최종문 외교부 2차관, 윤형중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참석했으나 북한이 초강도 무력도발에 나섰음에도 이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고 규탄하지도 않은 채 "깊은 유감을 표한다" 수준의 입장만 표명

  ※ 미국 국무부 및 백악관은 북한 규탄 입장을 표명하여 대조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감에서 "북한의 이번 SLBM 발사는 전략적 도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SLBM 발사를 "대화를 탐색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답변
  - 외교안보 장관들이 모두 '도발' 이라는 표현을 금기어로 간주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자신을 안보장관으로 규정하는 것마저 주저하는 태도를 보여 빈축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 행태의 민낯을 보여주는 북한인권

주요 내용 및 성과

■ 「북한인권재단」 출범 마냥 지연

-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재단출범이 마냥 지연되고 있으며 통일부는 수수방관
  - 이인영 장관은 이사 추천의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주장해 국민의힘은 이미 이사 추천 명단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이 명단제출을 하지 않으면서 재단 출범을 지연시키는 사실관계를 호도
  - 또한, 과거 통일부는 국회에 이사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이었던 반면 이인영 장관은 국회 추천과는 별개로 통일부 장관 추천 이사 2명도 아직 추천하지 않은 채 책임회피 자세로 일관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외면, 우리 국민 피해 무관심

- 탈북한 국군포로가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한 판결과 관련 법원이 임종석 청와대 외교안보특보가 대표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의 북송 자금의 성격을 확인하려 했으나 경문협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통일부도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방조
- 생존하는 6.25전쟁 참전군인의 국내 거주가 확인되었음에도 여전히 전시납북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실태와 이를 시정하려 노력하지 않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납북자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해결 의지 결여를 시사
- 서해 공무원 피살 및 시신 소각 사건과 관련하여 유족이 진행 상황을 문의하자 통일부 공무원이 "현안이 워낙 많아 순번이 돌아올지 모르겠다"며 무성의한 답변 태도를 보여 거센 반발 초래
- 현재 북한에 억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우리 국민 6인에 대해서는 실태파악도 안된 상황 (선교사 3인, 한국 국적 취득 탈북민 3인)

■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장기간 공석

- 「북한인권법」에 따라 외교부에 신설되어 초대 대사의 임기가 지난 2017년 8월 만료되었으나 후임자 지정되지 않아 장기간 공석 상태

■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 올해 유엔주재 EU 대표부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또다시 불참

부실외교에 이어 인사실패까지

■ 부적격 인사를 주일대사로 기용

- 한일관계가 최악인 가운데 일본이 기피하는 강창일 주일대사를 기용
  - 주일 대사 부임 후 일본 총리 및 외교부 장관을 못 만나는 첫 사례라고 지적하자 강 대사는 본인이 "신청한 적이 없다"면서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는데 접견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
  - 강창일 대사는 과거 북방영토를 방문해 일본을 자극하더니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러시아에 빼앗겨 점유당했다"고 발언하는 등 오락가락 하는 처사를 보였는데 북방영토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것이라고 일침

■ 강창일 주일 대사의 과거 부적절한 발언

- 일본의 기피 경향은 강창일 대사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일본×'이라고 발언하는 등 부적절한 막말성 발언을 한 것에서 기인한다는 지적
- 강창일 대사는 과거 라디오 방송에서 한일관계를 '오물'이라고 표현
  - "지난 정권에서 잔뜩 뿌려놓은 오물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과정에 있는데..."
    (2018. 1. 10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참 오물을 치운다는 기분인데요..."
    (2021. 1. 21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한중 외교는 상호주의 불균형

- 문재인 정부가 중국 시진핑 주석의 답방에 몰두하지만 시 주석이 방한하지 않는 건 한국이 중국의 속국인양 저자세를 보인 굴종외교의 결과
- 중국인 백신 접종자가 국내 입국할 경우 우리는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중국은 백신접종한 우리 국민이 입국하는 경우 자가격리 지속

■ 부적격 주중대사의 자리지키기

- 장하성 주중대사가 과거 고려대 교수 시절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이용한 것과 관련 교수로 계속 재직했으면 교육부 징계 대상인데 이미 퇴직하고 주중 대사로 부임하는 바람에 징계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대사로서 활동은 미비하다는 점에서 대사 임무 수행의 적정성에 의문

국익에 기반한 정책 제언

주요 내용 및 성과

■ 다국간협력체 참여 방안 검토

-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현재 쿼드 가입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
  - 동맹외교 강화의 실천적 의미에서 실질적인 쿼드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를 강화할 필요성 제기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조속한 참여

-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의 참여에 앞서 가입하는 것이 국가 전략적으로 바람직

■ 원전수주를 향한 해외공관의 소극적 자세 탈피

- 문재인 정부가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을 강조하는 바람에 카자흐스탄 주재 대사관의 업무보고에서 원전 관련 내용이 누락되는 등 해외 공관들이 원전수출을 위한 활동에 소극적
  - 문재인 대통령 유럽방문 및 정의용 장관 중동 방문 시에도 원전수주 노력을 위한 일정이 전무
- 정권의 눈치보지 말고 원전수주를 향한 해외공관의 적극적인 활동 독려

■ 재외동포청 설립

- 동포지원을 담당하는 외교부 산하 비영리법인 '재외동포재단'과 동포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인 국무총리 산하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여러 부처로 나눠진 동포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재외동포청' 신설 제안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재외동포청'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김석기 의원 대표 발의) 추진

국민의힘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군의 국가관, 안보관이 무너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군인공제회의 「성남 신흥동 제1공단 복합개발」 사업 손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당선된 이재명 시장은 그간의 신흥동 관련 인허가를 전면 중단시켜 당시 3,791억 원을 투자한 군인공제회로 하여금 현재까지 2,343억원의 거금을 미회수 상태로 만듬.
- 또한, 이재명 당시 시장은 신흥동과 대장동을 묶어 결합개발을 하겠다며 공원을 만드는 사업을 성남의뜰에 맡겼음.

  ※ 성남의뜰: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분명한 도발입니다.

- 서욱 국방부장관은 최근 발사된 북한의 SLBM에 대해 도발이 아닌 위협이라고 함.
  - 이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무기개발을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지말라'라는 언급 이후 그간 사용했던 도발이라는 말이 사라진 것
- 주지하다시피 그간 동해로 발사된 북한 미사일은 방향을 남쪽으로 바꾸면 바로 대한민국 특정지역을 타격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도발임

군 수뇌부의 안일한 자세를 확인하였습니다.

- 경항모보다는 SM- 3 미사일이 더 필요
- 예비군 장비 중 77%가 노후화돼 시급히 교체가 필요
- 1.3조 군 초소형위성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
-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적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할 것
-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정상적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군인재산 손실

군인공제회의 「성남 신흥동 제1공단 복합개발」
사업 손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및 성과

군인공제회의 사업 손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2010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신흥동 관련 그간의 인허가를 전면 중단시켜 당시 3,791억원을 투자한 공제회로 하여금 현재까지 2,343억원의 거금을 미회수 상태로 만듬
- 그간 공제회는 성남시에 2010년부터 15년까지 8차례 걸쳐 주상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요청했으나 이재명 당시 시장은 신흥동과 대장동을 묶어 결합개발을 하겠다고 거부했으며 실제로 공원을 만드는 사업을 성남의뜰에 맡김.
  - 결국 성남시가 공원부지로 지정해 해당지역 토지의 지가가 하락해 2018년 평당 1,624만 원에 수용당해 공제회는 평당 900만 원의 손실이 발생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군인공제회의 후속조치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 잔여부지인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회수와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미회수된 거금과 기회비용 손실까지 모두 회수하는지를 지켜보겠음.
  - 현재 시행사에서 성남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으로 1심에서는 시행사가 승소했으며 곧 2심도 선고될 예정

기강 해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분명한 도발입니다

주요 내용 및 성과

■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분명한 도발입니다.

-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SLBM 발사를 위협으로 본다며 도발은 우리 영공, 영토, 영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궤변을 펼쳤음.

- 또한, 국방부 국정감사 시 국방 업무보고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옹호하는 듯한 내용마저 나옴.
  - 순항(9.11.~12.) 및 탄도미사일(9.15.)에 이어 北 주장 극초음속미사일(9.28.), SLBM(10.19.) 시험발사 등 미사일 연구개발 활동 지속

※ 최우선 5대 과업에 속하는 극초음속미사일 연구개발사업은 순차적이고 과학적이며 믿음직한 개발공정에 따라 추진(9.29.,조중동)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 이같은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그간의 발언 또한 허구임을 상기시키고자 함.

군 수뇌부의 무책임한 모습

군 수뇌부의 안일한 자세를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및 성과

■ 군 수뇌부의 안일한 자세를 확인하였습니다.

- 날로 증가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해상에서도 요격할 수 있는 SM- 3 도입 등이 급선무인데도 경항모 도입에 더 혈안
- 예비군의 노후 장비에 대한 교체가 시급
  - 특히, MZ 예비군에게 6·25전쟁 당시 장비 사용법을 가르쳐야 하는 촌극마저 발생
- 1.3조의 군 초소형 위성 사업의 작전요구성능(ROC) 부실로 인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발사 징후를 바로 확인할 수 없음.
- 날로 증가하는 적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
-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등 각종 사건·사고와 관련해 각급 지휘관들에게 적시에 지휘 및 조언기능을 못하고 있음.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 2024년 전력화될 신형 이지스함에 SM- 3가 탑재될 수 있도록 할 것
- 동원전력사령부 5개 동원사단의 노후 무기체계를 상비사단 수준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경주
- 군 초소형 위성도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발사대 등을 잘 탐지·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 통합방위법에 군의 영토, 영공, 영해 수호에 이어 사이버공간도 추가하는 법을 개정할 것
- 안보지원사는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와 관련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또한, 방위산업기술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

국민의힘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부패한 문재인 정권의 실정 은폐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진실규명 노력

- 경기 성남 대장동 로비 특혜의혹 관련 여당의 증인, 참고인 채택 거부 및 특검 거부와 성남시청, 경기도청의 자료제출 비협조 등에 의한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에 강력 비판 및 진상규명 요구
-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경찰청의 늑장수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질타
-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조직내 부당한 지시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범죄 등에 대한 공직자 범죄 급증 상황의 비판과 대책요구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정의 지적과 대안제시

-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무분별한 증원과 함께 공무원연금 적자급증, 공무원의 개인영리행위, 정치중립 훼손 활동, 공직기강해이 등 지적 및 대책요구
- 지나친 코드인사, 회전문 인사, 개방형직위에 역량부족한 인사의 낙하산 임명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
- 지자체의 방만한 경영과 주민 혈세 낭비 사례 비판

■ 권력의 눈치보는 공공기관의 정치적 편향 행태에 대한 비판

- 경찰의 민노총 집회의 미온적 대응과 자영업자 집회의 과잉대응 등과 같은 편향된 공권력 집행 지적
- 선관위의 정권눈치 보기 편향적 오락가락 유권해석, 제대로된 검토없이 여러 문제점을 안고있는 설익은 선거제도 도입 시도 비판

방만한 행정 비판

방만한 행정 비판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및 성과

■ 무분별한 공공인력 증가로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 급증 등 국가재정 악역향 및 국민세부담 증가 비판

- 최근 5년간 인구 1.1% 증가할 때 공공부문 인력 19만명 증가
-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비정규직 10만명 정규직 전환으로 청년 신규채용에 악영향을 주어 청년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 중의 하나가 됨.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행정안전부의 중장기적 계획속에 양보다는 질 위주의 인력 충원 집중 요구

- 코로나19 이후 극심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직·방역직은 극심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 수요에 맞는 인력충원책 마련
- 경찰·소방공무원·사회복지직 등 격무부서 중심의 증원 고려

방만한 행정 비판

부실·방만 운영하는 허울뿐인 지자체 소속 위원회

주요 내용 및 성과

■ 부실, 방만하게 운영되는 '허울뿐인 지자체 위원회' 비판 및 정비 촉구

- 1년간 회의 한 번 개최하지 않은 지자체 위원회가 7,198개에 달함.
- 전국 지자체 위원회 28,071개, 1년간 평균회의 개최횟수는 3.6회, 위원회당 평균 운영경비는 약 138만 원이었음.
- 위원회의 기능 및 필요성을 검토해 부실, 방만 운영되는 실적이 저조한 허울뿐인 위원회는 정비할 것을 촉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지자체별 지자체 소속 위원회에 대한 정비 상황 점검 및 실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점검

공정·정의 실종

경기 성남 대장동 로비 특혜의혹

주요 내용 및 성과

■ 부패한 문재인 정권의 실정 은폐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진실규명 노력

- 대장동 로비 특혜 의혹 관련 여당의 증인, 참고인 채택 거부와 성남시청, 경기도청의 자료제출 비협조 등에 의한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에 강력 비판 및 진상규명 요구
- 경찰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의심되는 자금 흐름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도 5개월 동안 수사를 미룬 것과 서울경찰청에서 용산경찰서로 사건을 미루는 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늦장수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질타와 함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요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추후 경찰청과 검찰 수사 등 공권력의 대응이 적절하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문제 제기

■ 행안위 국감(10.18)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관련 발언 등의 궤변과 위증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 조치

부실한 경찰 수사력 비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권한 강화된 경찰의 부실한 수사능력 및 기강 해이 지적

주요 내용 및 성과

■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권, 종결권 등 경찰의 권한이 강화됐음에도 불구 부실한 수사 역량 및 여전한 경찰 조직내 기강 해이 사례들을 질타하고 대책 마련 촉구

- 수사종결권 부여된 이후, 업무 과다로 수사관들의 수사부서 기피 현상 심각
  올해 상반기 경찰 송치사건 중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비중은 9.7%(31,482건), 전년 동기 4.1% 대비 5.6% 포인트 증가
-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받고도 제대로 된 수사 부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대장동 관련 부패신고를 의뢰받고도 내사종결하여 부실 수사 및 은폐의혹 야기
- 일부 지방경찰서의 수사 정보 유출, 사건·직무 관련 뇌물수수, 부적정한 보조금·경비 집행, 사건 수사비, 식비 이중지급 등 부적정 집행,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경찰조직내 비위 자정 대책 촉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경찰청의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 방안 및 실행에 대한 관심과 점검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비리 의혹 및 자질 비판

-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정치 수단으로 이용된 성남FC 실태 지적, 진정한 체육계 독립성 확보 방안 촉구
- 성남FC 거액 후원 기업들의 이권과의 연계성 문제, 코마트레이드의 후원 협약 문제, 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 제기
- 이재명 후보의 욕설 관련 국립국어원장에 "고위공직자일수록 언어의 파급력이 큰 바, 바른 국어 사용이 강조된다"는 답변을 이끌어 냄.

문재인정부의 총체적 실정(무능력·무책임·편향적)을 파헤친 국감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국정감사

- 문재인정부의 문화예술계 낙하산 인사, 화이트·블랙리스트 사례 강력 비판
- 문재인정부의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로 조선왕릉 유네스코 문화유산 취소 가능성 지적, 문화재청의 무능력한 업무처리 및 대응 실태 강력 비판
- 한국정책방송원 유튜브의 민주당 어용방송 논란, 편향적 실태 지적

문재인정부의 권력형 특혜·불공정 비리를 낱낱이 지적

- 문재인대통령 아들 문O용 씨의 과도한 문화예술계 지원금 수혜 내역 지적, 정부의 허술한 보조금 관리 실태와 공정성 문제 제기
- 전임 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정권 차원의 특혜성 비호 실태 지적
- 스포츠윤리센터 채용 비리 의혹 제기,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속 조치 비판

문재인정부의 맹목적 대북정책과 방관적 친중정책을 비판

- 한국관광공사 대북 용역 보고서의 UN 대북제재 회피 설계 내용 강력 비판
- 광주 비엔날레 북한 미술작품의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혹 제기
- IOC 제출 2032 서울- 평양 올림픽 유치 제안서의 대북 제재 위반 사업 포함 실태 지적
- 중국의 노골적 역사왜곡과 저작권 침해에 방관하는 문재인정부의 친중 실태 강력 비판

웹툰·콘텐츠 산업분야 플랫폼의 불공정행태 지적, 정책 대안 제시

- 웹툰작가들과 플랫폼사의 불공정 계약을 지적하고자, 국감 증인으로 카카오엔터, 네이버웹툰을 참고인으로 웹툰작가를 출석토록하여 불공정 계약 형태 등을 지적
- 여기어때, 야놀자의 숙박여행업계 잠식상황에 대한 지적과 상생방안 요구
- 해외 OTT로부터 국내 방송, 콘텐츠제작사의 2차 저작권 확보를 위해 국감 증인으로 넷플릭스사를 채택하여 이익배분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개선방안 제시 요구

정부 실정에 대안 마련 촉구, 주요 정책의 방향 제시

- 문재인정부의 각종 권력형 비리와 불공정 사안에 대한 시정 권고, 후속 조치 및 실태 점검 예고
- 중소여행업, 웹툰작가 등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

무능력·무책임·이념편향

문재인정권의 총체적 실정 강력 비판

주요 내용 및 성과

■ 문재인정부의 문화예술계 낙하산 인사, 화이트·블랙리스트 사례 강력 비판

- 문재인정부 새문화정책 준비단 민간위원 보은 인사 특혜 의혹 제기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특정 대선 후보 캠프 참여 실태 비판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 제자 중심 설립 회사의 서울시·문예위 용역 수주, 탁현민 비서관의 노바운더리 특혜 의혹 사례, 전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일감 몰아주기 사례를 언급하며 문재인정부의 문화계 화이트·블랙리스트 실태 비판

■ 문재인정부의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로 인한 조선왕릉 유네스코 문화유산 취소 가능성 지적, 문화재청의 안일한 업무처리 및 대응 실태 강력 비판

- 문화재청의 조선왕릉 관리 부실 실태 지적
- 장릉 인근 무분별한 신도시 건설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취소될 경우 다른 왕릉들의 문화유산 취소 가능성 제기
- 유네스코 정기보고서('21.7)에 해당 문제 누락 경위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허위보고 및 위증 가능성 지적, 문화재청의 무능력한 업무처리 실태 비판
- 문화재청의 실질적 대책 마련 강력 촉구

■ 한국정책방송원 유튜브의 민주당 어용방송 논란, 편향적 실태 지적

- 한국정책방송원 유튜브 '최고수다- 허허실실'의 민주당 인사 옹호 사례, 대다수 여당 인사 출연 실태 지적
- 한국정책방송원의 정치 편향적 실태 비판, 정치적 중립 촉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장릉 인근 신도시 건설 관련 문화재청의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누락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및 시정 조치요구

■ 새정부문화정책 준비단 보은인사 및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 요구

■ 한예종 교수의 특정 대선캠프 활동 및 특혜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 요구

권력형 비리 의혹

문재인정권의 문화예술계 권력형 특혜 의혹 제기

주요 내용 및 성과

■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비리 의혹 및 자질 비판

-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정치 수단으로 이용된 성남FC 실태 지적, 진정한 체육계 독립성 확보 방안 촉구
- 성남FC 거액 후원 기업들의 성남시 인·허가 및 이권과의 연계성 지적
- 성남FC와 코마트레이드의 후원 협약 사실 지적
- 제19대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성남FC직원 동원 의혹 제기

■ 문재인 대통령 아들 대상 문화예술계 권력형 특혜 의혹 강력 비판

- 대통령 아들인 문O용 씨의 과도한 문화예술계 지원금 수혜 내역 지적
- 고양어린이박물관 5회 계약(4,381만 원), 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피해 긴급예술지원금'(1,400만 원),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지원금(3,000만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 기술 융합지원 사업'(6,900만 원), 청주시립미술관 초청기념전(1,500만 원), 강원 양구군청 미술관 사업(7,000만 원) 등 총 2억 4천여만 원의 수혜 내역 지적
- 2020년도 문예위의 '축제형 신나는 예술여행 확산 사업'에서 초기 계획에 없었지만 실제 행사에 추가된 출연진인 문O용씨에 대한 추가 의혹 제기
- 정부의 허술한 보조금 관리 실태 지적, 공정성 문제 제기

■ 친노친문 핵심인사의 국유재산 무단점거 수억대 변상금 체납실태 고발 및 징수 요구

- 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대선자금의혹 핵심인물 문화재청 건물 무단점유 및 불·탈법 자행에도 문화재청은 급여 압류 해지 등 봐주기 조치로 일관
- 부동산 압류 강제집행 미집행 사이 체납자 소유 아파트 실거래가 3배 (10억원)상승

■ 전임 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정권차원의 특혜성 비호 실태 지적

- 기관 평가 및 경영실적 낙제점 지적, 경영평가 조작 등으로 인해 기재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전임 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해임 결정
- 평가 결과 '해임'으로 결정된 전인 콘텐츠진흥원장의 '면직 처리' 경위 질의, 문재인 대선캠프 주요인사인 전임 원장에 대한 특혜 의혹 제기, 위법성 지적
- 콘텐츠진흥원 사업과 청와대 비서관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진 '노바운더리'와의 연계 의혹 지적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문O용씨 정부 지원금 수혜 관련 감사원 감사 요구, 권익위 조사 요구

■ 성남FC 후원 관련 이권 개입, 특혜 여부, 각종 논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이념편향 / 외교·안보 참사

문재인정부의 맹목적 문화예술·관광·체육 대북 정책 비판

주요 내용 및 성과

■ 한국관광공사 대북 연구 용역 보고서의 UN 대북제재 회피 설계 내용 강력 비판

- 대북 반입금지 물품과 북한에 차단된 외화벌이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설계 내용 비판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저촉을 최소화하면서 북한 관광을 추진하는 우회적 방안 기재 내용 지적
- 페이퍼컴퍼니 활용 북한 지원 방안, 리스크가 큰 북한의 토지 자산 담보 지원 관련 대한민국 국책은행 이용 의혹 제기

■ 광주 비엔날레 북한 미술작품의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혹 제기

- 북한 작품 제3자로부터 입수되더라도 UN 안보리 제재 위반 상황임을 지적
- 북한 미술품의 외화벌이 악용 실태 지적, 대북 제재 위반 제소 필요성 제기

■ IOC 제출 2032 서울- 평양 올림픽 유치 제안서의 대북 제재 위반 사업 포함 실태 지적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한국관광공사 대북 연구 용역 보고서 관련 감사원 감사 요구

■ 한국관광공사 대북 연구 용역사업 과업지시서 내 '국정과제 이행 차원' 명시 관련 고발 검토

무능력·불공정 실태 / 외교·안보 참사

중국의 노골적 역사왜곡과 문화전쟁 방관하는 문재인정부의 친중 실태 비판

주요 내용 및 성과

■ 중국 정부의 노골적 역사왜곡과 동북공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역사 왜곡 자료 전시 실태 지적

-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의 전시내용 중 위나라가 충청지역까지 지배, 한나라가 한강 이남까지 지배, 명나라가 만주지역까지 지배했다고 표기된 역사 왜곡 지도 전시 실태 지적
-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관련 사실을 늦게 인지하였고 단순 실수로 인한 사고라고 기립 사과 표명했으나 향후 추가 검토 필요

■ 중국 정부의 문화전쟁·K 콘텐츠 배격 운동의 실태 지적, 문재인정부의 소극적 대응 비판

- 최근 5년간 중국의 국가별 판호 발급 현황 언급하며 문재인정부와 콘텐츠진흥원의 소극적 대응 비판
- '오징어게임' 등 인기 문화콘텐츠에 대한 중국의 각종 저작권 침해 사례 언급, 문체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 대응 촉구
- 김치, 한복을 중국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문화 왜곡 실태 비판

■ 중공군 미화 중국영화 '금성대전투'의 등급분류 절차 논란 지적

- 역사왜곡의 논란의 큰 '금성대전투'에 대해 문재인정부와 관계 기관의 안일한 문제 의식과 초기 대응 실태 비판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국립중앙박물관 대상 중국전 동북공정 지도 관련 감사원 감사 요구

불공정 실태

문재인정부의 문화예술 · 체육계 불공정 실태 지적

주요 내용 및 성과

■ 스포츠윤리센터 채용 비리 의혹 제기,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속 조치 비판

- 체육계 인권 강화를 내세우며 문재인정권에서 출범을 강력 추진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채용 비리 의혹 제기
- 스포츠윤리센터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가, 탈락자 뒤바뀐 사례 지적, 관련 자료 제출 지속 요구에도 문체부 자료 제출 거부 실태 비판
- 해당 직원 관여 의혹 제기, 문체부 자체 감사 후속 조치 비판

■ 2021 세계선수권대회 레슬링 국가대표 선발전 승부조작 문제 제기

- 당시 경기를 참관하던 감독관, 선수 등 다수가 승부조작 의혹을 제기했으나, 레슬링협회는 스포츠공정위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림.
- 공정한 국가대표 선발심사를 위한 체육회 및 레슬링협회 특별감사 촉구

■ 대한수영연맹 채용 비리 의혹 제기

- 최종 합격자 2명의 서류전형 결과 언급하며 관계자 유착 의혹 제기
- 체육계 각종 기관의 공정 채용 촉구

■ 콘텐츠 산업의 저작권 분배 · 수익구조 문제점 지적, 대응방안 마련 촉구

- '오징어게임'의 투입 제작비에 비해 넷플릭스의 수익은 약 1,166배임을 지적, 해외 OTT 저작권 문제와 국내 콘텐츠 시장 잠식 대응 방안 마련 촉구
-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거부, 교묘한 영업이익률 조정, 국세청 추징 사례 비판, 제도 개선 촉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스포츠윤리센터 채용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 요구

국민의힘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문재인 정부, 최악의 농어민 홀대 정부임을 부각하며 다각도로 비판

-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인 2022년도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림식품부 예산 비중은 2.8%로 역대 최저치.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농업홀대 현실을 집중 부각
- 해수부 피격 공무원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도 최종 조사결과 발표 시기조차 미정. 유가족의 힘든 현실을 감안, 조속한 결과 발표 촉구
- 안전·재해보험 내실화 약속했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설계로 농어민이 정작 필요한 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가입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 지적
- 가축방역 성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정작 과도한 기준 범위내의 살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 소홀 부분 외면 지적

이재명 후보 대장동, 백현동 관련 의혹 제기 및 법적조치 요구

- 성남시 백현동 판교더샵 아파트 허가 관련 현재 실거주 주민들이 옹벽 문제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을 지적하며 당시 산지전용 불법허가권자인 이재명에 대한 법적조치 요구
-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농협 및 수협 대출심사시 리스크가 낮다고 평가한 부분을 지적하며, '리스크가 커서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이라는 이재명 후보 주장 정면 반박

과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농어민 생존 위협은 뒷전인 문재인 정부 집중 질타

- 농민들의 보호를 최우선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해상풍력, 농촌형 태양광, 산지풍력단지 등을 무분별하게 추진하여 오히려 농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임야, 논 등을 훼손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행태 집중 지적
- 특히 풍력발전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의체에 해수부 및 수협의 적극적인 동참 및 어민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기울일 것 촉구

옵티머스 펀드 관련 피해자 대책 촉구 및 책임자 문책 요구

- 옵티머스 펀드 관련 책임자인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금감위의 최종 징계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음을 지적
- 그간 사태수습을 위한 노력 및 피해자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던 반면, 주식시장 활황으로 임직원 임금 인상 및 인센티브 지급 등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 연임 등 자리 유지에만 급급한 사장 및 조직 전체에 대한 따끔한 질책 및 책임자 문책 촉구

그 외에, 국가정체성 훼손하는 오표기 문제 지적 및 시정 촉구, 대형 포털 및 국내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동물의약품 불법거래 규제 마련 요구,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드러난 무능·무책임 질타, 군급식 경쟁조달 개편으로 장병건강 및 군납농·어가 피해 부분에 대한 적극적 대책 주문

무능·무책임

문재인 정부, 최악의 농어민 홀대 정부

주요 내용 및 성과

■ 말만 앞세운 문재인 정부 농어민 정책에 대한 종합 비판

-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인 2022년도 농림식품부 예산 비중은 2.8%로 역대 최저치.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5년차 농업예산 성적표라고 보기에는 초라함을 넘어 농업 홀대, 농업 무시임을 지적하며 예산확보 위한 적극적 노력 촉구
- 해수부 피격 공무원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도 최종 조사결과 발표 시기조차 미정. 유족들은 생계 영위조차 힘든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당국에 신속한 조치 강하게 요구
- 안전·재해보험 내실화 약속했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설계로 농어민이 정작 필요한 사항은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가입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 지적
- 가축방역 성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정작 과도한 기준 범위내의 살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 소홀 부분은 외면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농업 예산 3%대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및 현장과 소통하는 실효성 있는 농어민 지원 정책 수립 여부 지속 점검

권력형 비리 의혹 / 무능·무책임

옵티머스 펀드 관련 후속조치 사항 점검 및 책임자 문책 촉구

주요 내용 및 성과

■ 옵티머스 펀드 관련 책임자 거취표명 촉구

- 작년 국정감사시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 외압 의혹 규명에 초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그 후속 조치 사항 면밀히 점검
  - 옵티머스 펀드 최다 판매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했어야 할 NH투자증권 정O채 사장에 대한 금감위의 최종 징계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부분 질타
  - 현재까지 회수액이 290억에 불과한 점, 사태 해결을 위한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회장 포함한 임원 임금 한도를 4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 및 3년간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지급한 점 지적
  - 또한, 현 검찰총장인 김오수를 당시 변호인으로 선임한 후 황제변론 받아서 무혐의 받은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심과 동시에, 회사가 정O채 사장 개인의 변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문제점 지적하며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책임자 거취 명확한 지도감독 조치 촉구

무능·무책임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농어민 생존 위협

주요 내용 및 성과

■ 일방적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농어민들의 생존터전 위협은 뒷전인 정부 및 주무부처 질타

- 문재인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위해 경제림·재해위험지역에 산지풍력단지 허가 지적
  -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위해 축구장 7,000개 면적 산림 훼손
  - 작년 말 혈세 6,000억원을 투입한 인공조림지에도 풍력단지 조성 허가
  - 발전기 면적의 8배에 달하는 부대시설에 대한 재해위험성 검토 규정 마련도 없이 추진
- 해상풍력 활성화 추진하며 어민들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해수부의 노력 부족 지적. 입지 적정성 판단, 어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운영 등 합리적 원칙과 절차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 정책의 피해는 곧 국민에게 고스란히 갈 수 있음을 강조. 어민들의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후 추진할 것 요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시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병행 추진 여부 지속 점검

무능·무책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저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촉구

주요 내용 및 성과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저조에도 정부의 안이한 태도 지적

- 2015년 한·중 FTA 체결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과 민간기업들의 외면으로 목표액에 미달되고 있음을 지적
  - 2021년 9월까지 조성된 상생기금은 1,467억원, 5년간 목표액 5,000억원 대비 29.3%에 불과한 수준
  - 출연비율을 보면 대부분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출연(72.6%)하고 있고, 민간기업은 약 400억원인 27.2%에 그치고 있는 상황
  - 저조한 이유는 현행법상 기금 출연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고, 민간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
- 농어업인과 농어촌 피해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인 만큼,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역할 주문과 함께 목표액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생기금에 출연하여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보완 시급 지적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안정적 기금 운영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 촉구

- 수수료 인하, 평가배점 개선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기금조성액이 목표액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직접 출연하는 방안도 강구

국민의힘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탈원전 중단, 탄소중립은 원전과 기업현실이 관건임을 부각시키고, 문 정권의 부패·무능·방만 실태를 집중 질타하며, 대안도 제시하여 정책국감을 주도

- 2021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대체로 주목할만한 이슈는 없었고, 특별한 여야 대립이나 파행 없이 진행됨.
  - 이재명 대장동게이트의 관심이 높아 산중위 국감도 첫날부터 특검 주장 관련 피켓과 소품 활용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고, 국감 기간 동안 성남 가스공사 부지 용도 변경과 지역화폐 코나아이의 특혜 의혹 등 이재명 관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전개함.
- 무엇보다, 탈원전의 폐단과 전기요금 인상간의 상관관계,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의 비현실성과 준비 부족, 선진국의 움직임에 역행하는 현실, 산업현장과 공감대 없는 일방적 목표 설정 등의 논란과 우려를 객관적으로 집중 제기함.
  - 결국, 원전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가 탄소중립 달성의 관건이고, 산업현장의 지속성장도 가능하다는 상식적·현실적·논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냄.

산업통상자원 분야는 탈원전 폐해 구체적 제시, 산업부 역할 지적 및 주문

- 탈원전 관련 전기요금 인상 우려, 발전 공기업 부채 증가와 도덕성 해이, 탄소중립 소요비용과 업계의 어려움 등 문제점 지적, 재생에너지의 허구성 고발이 있었고, 민주당과 정부는 원전 가동으로 탈원전이 아니고, 탈원전과 전기요금 연관성 부인에 재생에너지가 탄소중립 에너지란 비현실적 무리한 주장을 전개
- 에너지공기업에 대해 탈원전에 따른 한전 등 발전사의 부채 누적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전기요금 인상 억제 방침을 유도, 대장동게이트 관련 북측 송전탑 의혹 추궁과 한전의 무책임성을 질타함. 또한 성남 가스공사 부지 매각 관련 이재명과의 연관성 제기, 에너지공기업의 에너지 수급 실태 지적과 권력에 치우침 없는 자원개발의 필요성도 주문함.

중소벤처기업 분야는 손실보상 보완 주문, 대형플랫폼 기업의 갑질 실태와 골목상권 살리기, 이재명게이트 관련 의혹 제기와 함께 대안도 제시

- 손실보상 방침과 미흡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벤처부의 대응에 대한 종합 점검이 있었고, 중기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및 판로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함, 한편, 조O, 조O은 사건 관련 중기부의 조치도 강조함.
-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갑질 방지, 정부의 지역경제를 내건 사업들의 부정 실태 고발과 개선대책 마련도 촉구함.

탈원전 중단은 당연, 전기요금 인상은 억제

주요 내용 및 성과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정책 파탄으로 초래된 세금 낭비와 전기요금 인상의 국민부담 차단

- 탈원전 중단에 대한 객관적 지적을 하며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부작용으로 전기요금 인상,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의 부채증가, 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사실과 자료에 근거해 부각시킴.
- 발전사 적자 누적 등 경영 상태, 연료가격 등과 연동돼 결정되는 시스템, 낮은 원가의 원전 대신 고비용 저효율의 재생에너지 확대,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화 제도의 부채증가 등에 대한 실체도 규명함. 이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 억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객관적·실증적으로 주문함.
- 산업부장관이 '발전사가 경영 효율성 높여야 더 효율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차원의 노력을 강조한 점은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간접 시인
- 탈원전 정책을 집행한 공기업 한수원도 뒤늦게 원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사실과 현실에 근거해 정부 입장에 대한 다른 목소리를 낸 점도 확인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성 감안, 종합적인 고려와 판단 검토

- 선거를 의식한 인상 억제 예상과 차기 정부에 부담 전가 상황을 염두
  - 태양광 풍력 확대로 인한 천문학적 비용에 대한 국민 알리기
  - 발전사 누적 실태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대책 마련
- 추후 전기요금 인상시, 전기요금 부담 경감대책 마련 동시 촉구
  - 전기요금 인상 없다는 방침 강조, 인상요인으로 작용한 부문의 총금액 발표
  - 전기요금에 KBS 수신료 부담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강력 추진해 국민부담 완화

선언만 있고 비용추계도 없이 뜬구름 잡는 탄소중립

주요 내용 및 성과

■ 탄소중립도 정치논리로 휘두르는 문재인정권 실체를 드러내어 개선을 촉구

- 작년부터 최근까지 대통령과 탄소중립위원회의 비과학적이고 정치 선언적인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의 허구성을 사실과 현실에 맞게 지적하고, 기업 현장의 우려와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제시함.
- 무리하고 졸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발전에 천문학적 세금 투입과 낭비, 환경파괴 문제 등의 탈원전 부작용들을 탄소중립을 내세워 감추고 당연한 것으로 여론몰이하는 점을 논리적으로 추론케 했음.
- 산업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71%를 달성하는데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만 1,248조 소요 등 비용 추궁에 모르쇠 일관, 발표만 있고, 달성 목표도 수차례 변경한 졸속적 정치선언임을 부각시켰고, 가용한 기술과 비용 측면의 검증 절차 없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든 점도 확인하며 질타함.
- 정부가 현시점에서 필요한 비용과 30년 뒤에 들어갈 비용은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어서 탄중위에서도 비용 부분에 대해 정확한 추계를 하지 않았고, 비용도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는 답변,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등이 같이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별도 연구용역 추진 중이라고 한 것은 비용추계 없다는 사실과 탄소중립이 정치적 선언임을 고백한 것을 확인함.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정부 발표에 대한 비용 등 문제점 지속 점검 및 공개와 행정 조치 병행

- 산업별 우려와 실태에 대한 의견 청취 추진
-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추진

산업부의 충격적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하기

주요 내용 및 성과

■ 기소 위기에 처한 백운규를 구하기 위해 국회 입법권과 국가기강 파괴한 산업부

-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관련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 위기에 처했던 백운규 전 장관을 구하기 위해 법질서를 무시하며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사실 확인
- 정부는 탈원전으로 중단한 원전사업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을 검토하다 법체계에 안 맞는다고 추진 중단, 이후 기소 위기에 처한 '백운규 구하기' 차원의 시행령 개정, 개정('21년 6월8일)된 시행령 적용시점이 백운규 임기(2017년7월~2018년 9월) 포함, 공포 시점도 기소 직전인 올해 6월30일, 백운규 살리기용 국회 입법권 파괴와 국가기강 농단 사실을 규명함.
- 대전지검이 백운규의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를 추진했지만, 8월18일 열린 검찰수사심의원회가 낸 불기소 권고의 핵심 근거 규정이 논란의 전기사업법 시행령으로 산업부가 서둘러 만든 시행령을 근거로 백운규의 책임이 면제되고 엄격히 제한된 기금 사용규정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
- 또한, 현 산업부장관도 '21년 5월25일에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및 향후 계획' 관련 '법률에 근거한 비용 보전이 보다 바람직하지만, 에너지 전환 로드맵 후속조치에 따라 비용보전을 미룰 수 없어 시행령 개정 추진' 내용의 보고를 받았던 점을 확인, 이는 시행령 개정이 명백히 백운규 구하기용인 점을 증명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감사원 감사로 외압과 부당한 지시 여부, 재판의 문제점 규명

- 감사원 감사 추진 외 전기사업법 핀셋 개정
- 탈원전 소송비용 등 반영된 내년 관련 예산 삭감 추진해 국민부담 완화

이재명 게이트의 다른 버전인가? 코나아이는 누구 겁니까?

주요 내용 및 성과

■ 누가, 민간 기업 '코나아이'에 막대한 이익을 밀어주고 있는가?

- 코나아이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12월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1,093억(올해 8월 기준), 올해만 758억 원 발생 추정, 소상공인의 돈을 특정 기업에 수수료 수익으로 몰아주기를 한 실체 규명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으로 발행 규모를 늘릴수록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은 증가, 특정 기업의 배를 불려주는 구조, 코나아이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점유율 70%, 40% 이상이 경기도 실적, 경기도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 강력 제기
- 코나아이 경영진에 이재명 지인 포함 의혹, 코나아이가 전국 지자체로부터 운영수익으로 거둬들인 금액만 30억, 코나아이 관리 선불충전금 미사용액은 4,599억 원('21년 9월 기준), 누적 이자 수익 15억 발생, 다른 대행사들은 카드수수료 수익, 누적이자 수익을 카드사 및 지자체와 나누어 가져가는 구조, 코나아이는 독식해온 실태 확인
-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다고 만들어진 지역화폐 운영 관련 민간 회사가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걷어 발생하는 이익을 전횡하는 구조, 소상공인 등을 위해 도입된 취지에 맞게 전면 개편되어야 할 과제 발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투명한 운영과 소상공인에게 도움되는 감사원 감사 및 제도개선 필요

- 소상공인 대상 수수료 0% 검토
- 고객 충전금 운용의 기준 설정 및 안전장치 담보할 제도개선 등

행복하지 않은 행복한 백화점을 행복하게,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절실

주요 내용 및 성과

■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판만 깔아주고 실질적 대책은 실종된 실태를 고발

- 중소기업이 가장 힘들어하는 제품 판로개척, 이를 위해 설립된 행복한백화점 등의 입점 매장 수 및 매출 감소가 지속
- 올해 7월 말 기준 입점 매장이 2019년 대비 57.7% 감소. 특히, 중소기업의 혁신 제품 판매지원을 위한 면세점·백화점 등의 '아임쇼핑 정책매장'도 62% 감소, 특히 행복한백화점 정책매장은 72% 폐업에 매출 실적 '0원'인 곳 속출(47%), 작년 정책매장 전체 25.3%가 매출 실적 0원 기록, 면세점도 인천공항 3곳과 현대 무역센터점만 운영되며 73% 폐업, 고속도로 휴게소는 100%, 하나로마트·백화점 등 대형유통점은 75% 폐업과 심각한 매출 하락 실태 확인
- 중소기업 경영 관련 가장 중요한 제품 판로가 기업 성장은 물론 존망에도 직결되는 만큼, 보다 기업에 필요한 실효적 대책 마련 필요성 증대, 소비자 트랜드 분석 및 마케팅 전략 방안 등 마련이 절실함.
- 또한, 문제의 원인을 외부 환경으로 돌리기보다, 제품 입점에만 치우친 보여주기식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효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 점검

- 철저한 상권분석과 소비자 트랜드, 시대변화 등 종합 고려한 대책 필요
- 매장 수 확대 및 품목의 개선 등 세부사항 점검 등

정당한 보상, 사각지대 보상 등 실질적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개선 시급

주요 내용 및 성과

■ 소상공인을 더욱 힘들게 하는 무늬만 손실보상 제도개선을 촉구

- 정부가 소상공인 등에 대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내려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고, 사각지대 없는 100% 보상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인 점을 강하게 집중적으로 지적, 정부는 전액 보상은 어렵다고 한 점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분명히 확인시킴.
- 특히, 여행·관광·공연업 등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폐업 등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손실보상 대상으로 적용되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서 제외되어 인원제한 간접피해 일반업종으로 분류된 점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 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도 "소관부처에서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손실보상 범위에 들지 않는 다른 업체들을 어떻게 지원할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답변을 받아 냄.
- 지난 6월~7월 사이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 심사와 통과가 졸속이었고 소상공인의 기대와 달랐던 점을 확인했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실히 일깨웠음.
- 향후, 실질적이고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민주당이 진솔한 자세로 제도개선에 임해야 하는 점을 확인시킴.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중소벤처기업부와 민주당의 제도개선 실천 촉구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 개정
- 소상공인단체 및 현장의 고통 청취와 반영을 위한 일정 지속 전개 등

매년 반복되는 도덕적 해이, 방만 경영 근절대책 이번에는 마련해야

주요 내용 및 성과

■ 모범은 커녕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의 반복되는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에 대한 강한 질타와 함께 근절 대책 수립을 강력 요구함.
- 산업부 차관의 SK E&S 측으로부터 보은 차원의 향응과 상품권 수수 의혹, 발전사업 운영 금지 대상인 한전 임직원들의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태양광 발전소 운영하다 82명 징계(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지적함.
- 또한, 코트라 해외무역관들의 반복되는 성추행 등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의 지속 실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실적부진과 부채증가 속에 1억원 이상 연봉자의 최근 3,220명 급증, 낙하산 보은 인사가 없다던 문재인정권의 정권 말 알박기 식 낙하산 인사, 정부 감사결과 사실로 밝혀진 전 공영홈쇼핑 대표의 비위에 셀프 사임과 퇴직금 수령 등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 실태 질타
- 매년 고질적 문제들이 반복되는 이유로 관리 감독 부실과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에 공감대를 이루었고, 정부의 반성 촉구와 함께 철저한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주문함.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강력한 내부 점검 시스템 추진과 법적 조치 검토

- 해당 기관의 자정 기능 확대와 관리감독 및 징계 시스템 강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관련 사건 수사 의뢰, 강력한 법적 조치 등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사건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 필요

주요 내용 및 성과

■ 국민 세금 빼먹는 불량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대책 추진을 강력히 주문

- 불공정의 상징인 조국 전 법무무장관 딸 조O씨의 인턴 월급수령이란 국민우롱 사건, 야당 흠집 내기 차원의 공세를 제기한 사람의 부도덕한 행태들을 질타하고 시정을 촉구함.
- 한국전력 국감에서 조O씨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사실과 근거로 추궁, 법원 판결로 조O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그에 따른 의사 면허도 취소가 상식이고 국민의 법 감정인데도, 버티고 있는 반사회적인 문제를 지적, 특히, 한전 산하 한일병원이 조씨에게 400만 원씩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냄.
- 취소가 확정 때까지 의사 자격 유지란 법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한전 측의 답변과 민주당의 비호는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하면, 집권 세력의 도덕성과 내로남불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게 함.
- 또한, 소위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O은씨의 세금 도둑 배 째라 식 태도도 집중 지적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로부터 대출받아 총 2억 5,000만 원을 상환해야 할 처지인데도, 전세금만 9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1억 3천만 원이 넘는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호화생활 실태를 국민의 입장에서 성토함.
- 정책자금 상환 독촉을 문자와 전화 등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정부의 허술한 추심절차에 강력한 경고를 하고, 국민세금 낭비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주문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해당 인사에 대한 강력한 시정조치 진행

- 조O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 추진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 강구
- 조O은에 대한 강력한 환수 조치 진행 여부 점검 및 해당 기관 감사

정부의 혜택을 받아 운영되는 알뜰주유소의 불법 실태를 규명

주요 내용 및 성과

■ 국민세금으로 혜택을 보면서 대국민 사기영업을 해온 알뜰주유소

- 지난 10년간 전국 자영 알뜰주유소가 가뜩이나 고유가로 시름하는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일으킨 국민 배신 사건으로 실체가 드러남.
- 2012년 이후 올해 2월까지 자영 440개 알뜰주유소가 석유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216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운 알뜰주유소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확인. 주로 가짜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정량 미달, 등유 차량용 연료 판매 등이 주를 이뤘음.
- 폐업 일로의 일반 주유소와 달리 알뜰주유소는 정부로부터 시설개선 비용, 사업 활성화 차원의 최대 3억 원 여신 등을 지원받고, 설치 시 이격거리(1~3km)까지 보장받고 있어 독점시장 보장 등 특혜 주유소로 그 수는 증가 중
- 그럼에도, 조사와 단속업무는 이원화되어 한국석유관리원이 조사를 담당, 석유관리법위반 행정 처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어 조치가 제각각인 실태가 파악됨. 최종 처리 결과도 지자체만 파악하고, 중앙 정부, 석유공사, 단속 석유관리원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방안 개선이 시급
- 국민세금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알뜰주유소의 국민 상대 사기영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재발방지가 절실해 적발에서부터 최종 처벌까지 합리적인 관리체계 마련, 제도개선을 추진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법 개정과 강력한 현장 단속 체제 수립

- 석유관리법 점검 및 개정으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국민의힘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백신도입 TF, 결국 백신 선구매 골든타임 놓쳐 피해만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 경구용 치료제 도입은 백신도입 때처럼 실기해선 안돼

- 범정부위원회가 작년 8월 21일(백신도입 TF 5차 회의)에 백신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해놓고 10월 30일(백신도입 TF 7차 회의) 까지 두 달 동안 손 놓고 있었음.
- 위드코로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구용 치료제가 게임체인저가 될 것임.
- 백신도입 때처럼 치료제 옵션 따지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

백신접종 피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질타 및 즉각적인 조치와 대책 마련 촉구

- 10월 13일 기준 백신접종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건수는 총 31만 2천건으로 7천만 접종건 수 대비 0.45%, 하지만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사망 및 중증 사례 2,635건을 심의해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345건에 그쳐 사망은 728건 중 2건, 중증은 653건 중 5건만 인정
- 대법원 판례에서도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음.
- 코로나 백신은 모두 단기간에 개발되고, 예외적 사유로 긴급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부작용들이 발생할지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므로 적극적으로 피해보상 확대해야.

SK바이오 · 삼바 성과에 숟가락만 얹는 K- 백신, K- 방역 결국 정권 홍보에만 몰두

-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개발에 정부가 조금의 지원금도 보태지 않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 계약을 성사해낸 모더나 백신의 국내 우선공급여부도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남.
- 백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문가 견해에 따라서 CEPI에 빨리 참여했다면, 아마도 지금 국산 백신은 3상이 아니라 생산이 가능했을 것
-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을 완성해도 우리나라에 우선 공급된다는 보장이 없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 중인 모더나사 백신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의 처분권이 없음을 지적
- 그러면서도 K- 백신, K-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정권 홍보에 나서는 것은 염치가 없는 태도라고 질타

이재명 후보의 정치 선동, 일산대교 포비아

- 민자유치로 인해 이용 가능기간 단축, 공사 금액 절약, 파산에 대한 책임(의정부경전철) 문제 해결했지만, 경기도가 공익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
- 경기도 공익처분 추진으로 인해 민자투자 SOC에 대한 지자체의 공익처분 분위기와 민자사업 위축은 국민 후생 감소라는 피해를 가져다 줄 것임.
- 국민들이 낸 연기금 919조원(7월말 기준)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에 간섭하고 결정할 주체가 아님.

자화자찬 '문재인 케어'는 공정하지도 평등하지도 못한 실패한 정책

- 정치적 표 계산에 따라 다수의 경증환자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대규모 보험재정을 무차별 투입하고 중증·희귀질환은 외면
- 선택진료비를 없애고 특진비를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는 대신 각종 수가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손해를 보전해주고 있어 대표적인 조삼모사 정책이자 국민 눈속임에 불과
- 재난적 의료비 심사는 까다롭고 복잡한 요건 때문에 재난 오디션 수준이며 비급여 풍선효과, 과잉진료로 재정낭비 심각

코로나 백신·치료제 실기

골든타임 놓친 백신도입, 경구용 치료제는 적극적인 선구매 나서야

주요 내용 및 성과

■ 백신도입 TF, 결국 백신 접종수량만 정해놓고 해외동향만 파악하다가 백신 선구매 늦어

- 범정부위원회가 작년 8월 21일(백신도입 TF 5차회의)에 백신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10월 30일(백신도입 TF 7차회의) 까지 두 달 동안 손 놓고 있었음.
- 5차 회의에서 인구 60%에 해당하는 약 3천만명분의 백신 중 코백스퍼실리티 1천만명분과 개별기업 구매 2천만명분을 우선 확보하겠다고 보고하고 두 달 뒤 7차 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고
- 결국 코백스 퍼실리티 1천만명분 구매약정서를 체결한 것 이외에 다른 나라들은 백신 선구매하고 있을 때 손 놓고 있던 백신 실기론에 대한 비판

■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도입, 백신도입 때처럼 치료제 옵션 따지다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 위드코로나 상황에서는 경구용 치료제가 게임체인저가 될 것임.
-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가 일차적으로 1천만회분 생산이 가능한데 미국이 170만회분, 태국이 20만회분, 호주가 30만회분 등 선구매에 나서고 있는데 정부는 고작 2만회분에 그치고 있음.
- 백신도입 때처럼 치료제 옵션 따지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백신 늑장 도입에 대한 책임론 추궁 및 위드코로나 준비단계에서 중요한 경구용 치료제 물량확보 촉구에 따른 책정예산 증액 필요

- 올 '21년 책정예산 168억원(90만 원×약1.8만명), 내년 책정예산 194억원(90만 원×약 2만명)에 불과

백신접종 피해에 무책임한 정부

백신 접종피해 즉각적인 조치와 대책 마련 촉구

주요 내용 및 성과

■ 백신접종 피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질타 및 즉각적인 조치와 대책 마련 촉구

- 10월 13일 기준 백신접종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건수는 총 31만 2천건으로 7천만 접종건 수 대비 0.45%, 하지만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사망 및 중증 사례 2,635건을 심의해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345건에 그쳐 사망은 728건 중 2건, 중증은 653건 중 5건만 인정
- 중증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던 질병청은 4-1, 4-2 조건을 내걸고 최소한의 의료비 지원조차 하지 않고, 심의 결과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는 한 장짜리 서면 통보만하고 일체의 설명 없음.
- 대법원 판례에서도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음.
- 코로나 백신은 모두 단기간에 개발되고, 예외적 사유로 긴급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부작용들이 발생할지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므로 적극적으로 피해보상 확대해야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백신 피해보상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적극 추진

-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하여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
- 예방접종에 따른 질병 등의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예방접종 후 질병 또는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
-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관련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확대

허울뿐인 K- 백신, K- 방역

SK바이오·삼바 성과에 숟가락만 얹는 정부

주요 내용 및 성과

■ SK바이오·삼바 성과에 숟가락만 얹는 K- 백신, K- 방역 결국 정권 홍보에만 몰두

-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개발에 정부가 조금의 지원금도 보태지 않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 계약을 성사해낸 모더나 백신의 국내 우선공급여부도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남.
- 국내 개발 백신 중 처음으로 임상 3상에 진입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백신 후보물질 GBP- 501는 세피로부터 최대 2억천만불, 2500억 규모의 지원금을 받아 연구개발을 진행중이나 국내 전문가들이 세피 가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정부는 늑장 가입 결정
- 백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문가 견해에 따라서 CEPI에 빨리 참여했다면, 아마도 지금 국산 백신은 3상이 아니라 생산이 가능했을 것.
-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을 완성해도 우리나라에 우선 공급된다는 보장이 없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 중인 모더나사 백신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의 처분권이 없음을 지적
- 그러면서도 K- 백신, K-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정권 홍보에 나서는 것은 염치가 없는 태도라고 질타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국내 업체가 원활하게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신청한 GMP인증 서둘러 승인할 것 요구

■ 정부의 정치방역용 생색내기를 멈추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구

일산대교 포비아

이재명 지사의 정치선동, 일산대교 무료화

주요 내용 및 성과

■ 일산대교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이재명 지사의 인기영합주의 꼼수

- 연금기금은 2009년 일산대교(주)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선·후순위 대출' 포함 총 2,661억원 투자했고 주무관청인 경기도로부터 2038년 5월까지 운영권 및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최대 88% 보장받기로 함.
- 지난 9월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 발표
-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하면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인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민자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되고 일산대교는 무료이용 가능
- 2004년 참여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한국형 뉴딜 사업에 국민연금을 투자하려다 무산된 바 있고 문재인 정부도 '극일 투자자금 조성'으로 논란되었으며 여당 대선 후보들까지도 한국판 뉴딜펀드, 공공임대주택 마련에 연기금을 투입하라 압박
- 이처럼 정치권의 '쌈지돈'으로 전락하면서 노후 자금을 맡긴 국민들의 신뢰는 추락
- 국민들이 낸 연기금 919조원(7월말 기준)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에 간섭하고 결정할 주체가 아님.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국민연금은 다수 국민의 노후 보장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분석과 대응 필요

- 국민연금법 제102조와 기금운용원칙에 따라 연금공단이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활용해 최대한 수익을 추구
- 국민연금의 자산 훼손은 결국 국민 모두의 손해로 귀결되는 것으로 정치적 논리는 배제

퍼주기식 매표행위

의료의 우선순위 관계없이 혜택 받을 사람의 '숫자'에만 집중하는 '文케어' 필수적 의료 외면하고, 생색만 내겠다는 심산

주요 내용 및 성과

■ 자화자찬 '문재인 케어'는 공정하지도 평등하지도 못한 실패한 정책

-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단이 문케어를 위해 사용한 재정은 약 12조9,300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조3,064억 원(약 48%)이 취약계층과는 무관한 상급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
- 해당 항목들은 사실상 취약계층의 보호나 위중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는 관련성이 적고 문케어로 인해 6조 원이 넘는 건보재정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적 의료'가 아닌 곳에 사용
- 정치적 표 계산에 따라 다수의 경증환자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대규모 보험재정을 무차별 투입하고 중증·희귀질환은 외면
- 재난적 의료비 심사는 까다롭고 복잡한 요건 때문에 재난 오디션 수준이며 비급여 풍선효과, 과잉진료로 재정낭비 심각
- 문재인 케어의 목표는 비급여 항목 총 3,568개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것이었으나 이중 지난 9월 기준 실제 급여가 적용된 항목은 1,234개
- 정부가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급여화된 것은 34%에 그쳤으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내 70%까지 높이겠다고 했으나 지난해 보장률도 64.2%에 불과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적립금을 마음대로 털어 쓰지 못하도록 건강보험 기금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및 기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건보 국고지원금 확대 촉구

■ 문케어는 실패한 정책으로 대폭 수정 불가피, 정책실패로 재정을 낭비한 책임 인정과 대국민 사과 요구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대장동 사태 관련 인허가 문제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촉구

- 국감기간 중 최대 정국이슈인 대장동 특혜비리 사건에 대하여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임 시절 대장동 지역에서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멸실, 엉터리 환경영향 평가, 대장동 송전탑 지중화 미이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 인허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 실패 입증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몰락과 저소득 근로자 일자리 감소, 주52시간 무분별 적용으로 중소 상공인 피해 급증, 비정규직 근로자 대폭 증가, 산업재해 감축 실패, 고용보험기금 고갈 등 노동정책 실패를 입증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및 사회적 책임 필요성을 강조

- 노조에 의한 파리바게트 트럭 봉쇄 폭행, SPC운송거부, 화물연대 노조의 폭력만행, 노조가입 강요, 택배 대리점주에 대한 갑질 등 불법이 난무함에 따라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도입과 노조의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강조
- 강성 노조의 불법 점거와 비리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저자세 대응을 질타

문재인 정권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허구성 입증

- 친정부인사로만 구성된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30탄소감축 목표치가 30%→35%→40%로 변경된 것은 대통령의 넷제로를 선언에 맞춘 정치적 목표치이며 특히 비현실적인 40% 목표치는 산업계, 노동계 등의 타격을 고려하지 않는 고무줄 목표치라고 그 허구성을 지적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요 내용 및 성과

최저임금 급격 인상의 부정적 영향 입증

-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부터 5년간 총 41.6%가 인상되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규모'(한국노동경제학회)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10% 인상 시 고용 규모는 약 1.42~1.74% 감소하고, 이 기준을 적용하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급격인상으로 총 63만2000개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장(박준식)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특정 계층과 특정 업종, 한계 상황에 처한 영역에서의 부정적 영향은 상당히 있다고 본다"고 답변하고,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시인함.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최저임금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할 대책 마련 필요

- 최저임금 적용을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차등화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노조개혁 필요성

노조개혁의 필요성과 정당성 입증

주요 내용 및 성과

■ 설문조사 결과 (권영세 의원 설문조사)

- 대한민국 직장인 블라인드 가입자 3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은 54%, 긍정은 22.9%에 불과함.
- (기존 노조의 가장 큰 문제점) 근로환경개선보다 정치·사회이슈에 집중 43.3%, 강경투쟁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가 19.7%, 고용세습 등 불공정한 관행 19.3%로 나타남. 이는 직장인 다수가 기성 노조의 활동이나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노조의 역할) 전체 노동근로자의 권익개선 70%, 내부 감시를 통한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 13.7%, 조합원 요구 관철을 위한 강력한 교섭력 확보 12.6% 순으로 나타남. 이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노조가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밝혀짐.
-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3.4%에 달함.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노조개혁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 필요

- 이번 조사를 통해 기존 노조의 불법행위, 지나친 노사·노노갈등 유발 등 기존 노조의 폐악을 개선할 필요성을 입증했음.
- 현재 노동계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MZ노조 조직이 확대 중에 있으며, 이번 설문 응답자의 76.8%(1,850명)도 MZ노조에 대해 긍정적 인식과 함께 노조설립 취지에 공감하고 있음.
- 기존 노조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과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노조의 사회적 책임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도입 촉구

주요 내용 및 성과

■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의 필요성

- 노조의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노조의 불법과 횡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파리바게트 운송거부 파업, CJ대한통운 대리점주의 극단적 선택, 현대제철 무단점거, 대전 한온시스템 협력업체 부당해고 등 민노총의 부당노동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음. 이 뿐만 아니라 노조가입 강요, 공사현장에서의 횡포는 일상화되고 있음.
- 이에 맞서 전국 100여개의 대학에는 민주노총을 '민폐노총'으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대자보가 부착되는 등 노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신설 필요

-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형사상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더 이상 강경노조의 횡포와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현장이 혼란을 거듭하는 사태를 막아야 할 것임.

탄소중립 시나리오 허구성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정책 마련 필요

주요 내용 및 성과

■ 탈원전 기조를 유지한 채 2050탄소중립 달성은 불가능한 수준 지적

- 탈원전 기조를 유지한 채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3개의 시나리오 및 2030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40% 상향은 달성불가능한 수준임. 현재 30%의 원전비율을 2050년까지 6%대로 감축하고, 태양광·풍력 비율을 70%로 상향한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짐.
- 또한 우리나라가 보유한 저탄소 관련 기술과 친환경 바이오 소재 분야 수준도 미국, 일본, 중국에도 뒤처져 있으며, 특히 산업분야의 탄소감축 기술은 대부분 2030년까지 상용화가 힘든 실정임.
- 탄중위의 시나리오의 큰 문제점은 탄소중립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먹구구식이라는 점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계와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단계별, 상황별 등 다각적인 분석으로 제시해야 함.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 전면 수정 필요

- 정부안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국토의 3% 즉, 서울면적의 5배에 달하는 땅을 사용해야 함.
- 또한 정부는 원전 감소로 인한 전기부족분을 중국, 러시아로부터 확보한다는 구상인데, 이는 에너지 속국을 자처하는 것임.
- 따라서 친정부인사로 치우친 탄소중립위원회를 개편하고 산업계·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을 마련해야 함.

공기업 인사비리·낙하산

문정부 공기업의 인사비리·낙하산·방만경영 시정 요구

주요 내용 및 성과

■ 문재인 정권 공기업 비리 및 방만경영 시정 요구

- 환경부 블랙리스트 책임자 업무배제 미이행, 한국환경공단에 부적격 낙하산 감사 임명, 수자원공사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억대연봉자 급격 증가,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채용비리, 수자원공사 직원의 85억 횡령 사건 등 현정부 공기업의 인사비리, 낙하산, 방만경영 등을 구체적으로 해부하고 시정 요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공기업 채용비리, 내부 직원 비위 행위 전수 조사 필요

- 근로복지공단의 채용비리, 직원의 횡령 및 기관장의 감추기 등 공기업의 비리가 만연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감사원 감사청구 필요) 대책 마련 필요
-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여야 함.

국민의힘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21년도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핵심 성과>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등 게이트 진실규명 노력

- 국민적 관심이 높고 대선정국에서 가장 큰 파괴력을 가진 대장동 게이트
- 文 정권의 비호 아래 은폐가 진행되고 있지만, 의석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함.
- 이재명의 위선과 발언 뒤집기, 위증 등의 행태를 끌어내 향후 법적조치 토대를 닦음.

그들만의 카르텔, 민주당 광역단체 복마전 비리 적발

- 고 박원순 전)서울시장 시절 민간위탁 단체에 1조원 규모의 예산을 쌈짓돈 쓰듯 뿌리면서 그들만의 돈 잔치
- 재난정보 의무사업자 교통방송(TBS)은 정치편향 뉴스 송출로 정권의 나팔수 역할 자처
- 정교한 정책기법을 악용해 토지는 공공이 수용, 수익은 민간이 독식하는 대장동 게이트 설계 등 민주당 지자체장 지역의 카르텔 실체 적발

강성 민주노총의 초법적 횡포 고발

-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폭력 갑질 사례 등 건설 노동실태 공개
- 대리점주의 자살까지 이르게 한 택배노조의 정상적인 쟁의행위를 벗어난 무법자 행태 질타
- 코로나 확산도 무시하고 코레일네트웍스 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집회 대거 참석 문제 및 현황조차 파악 안 된 공사의 안이함 지적

카카오 모빌리티의 무분별한 문어발 사업확장 문제 지적

- 카카오 모빌리티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 기존 시장을 파괴하는 영업행태
- 기존 택시업계 등 영세사업자 불만을 대변
- 카카오의 영업행태에 대한 재검토 요구와 이를 수용하는 카카오의 답변을 받아내는 성과

<국정감사 증인소환으로 진실규명 시도>

■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 정O상, 유O규, 김O배, 남O, 이O주, 이O성, 이O문, 김O배, 조O성, 황O양, 고O환, 권O일, 강O우 등 대장동 게이트 핵심 연루자

■ **文 대통령 사위와 이스타항공 간의 유착관계 의혹**

- 서O호(文대통령 사위), 박O호, 김O상, 형O순, 형O훈, 구마다OOO 등

■ 국민 관심이 큰 현안 중심으로 자료 제출과 증인신문을 통해 진실규명을 시도하였으나 민주당의 국정감사 무력화를 위한 강한 반대로 증인은 단 한 명도 채택하지 못하고, 자료마저 유불리에 따라 문제가 없을 만한 자료만 선택적으로 제출하며 진실규명에 한계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진실규명

주요 내용 및 성과

■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의의

- 수익성이 높은 미개발지를 개발하며 민관합동 방식을 도입해 공영개발의 탈을 썼으나 특정 사업자의 배만 불리기 위해 무리하고 유리한 방법만 취사선택한 특혜사업
- 도시개발사업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인 토지 확보 문제를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참여시킴으로써 강제 토지 수용과 인허가 문제를 가볍게 해결
- 알짜 주택용지 5개 블록 수의계약, 분양가상한제 회피, 민간에게 유리한 일방적 수익구조 설계 등을 통해 특정 사업자의 이익은 극대화한 사업
- 또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 비율(25%)을 시장 재량권 남용으로 대폭 삭감(최초 15% → 6.7%)시키며 공익성마저 훼손

  ☞ 종합하면 원주민은 헐값에 삶의 터전을 빼앗겼고, 아파트 입주자들은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수천억 원의 차익은 화천대유 등 특정 카르텔이 독식한 '단군 이래 최대 사익편취 부패 게이트'

■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질의 방향

- 이재명 - 유O규와의 측근 관계 부정을 집요하게 파헤치며 꼬리 자르기 시도 차단
  -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출장 동행 등 측근 정황이 공개되며 위증 의혹 증폭
- 대장동 사업의 특혜 수익구조 설계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배임 의혹 집중 추궁
  - 검찰의 부실 수사로 유O규 기소 시, 배임 혐의를 제외하며 이재명 배임 혐의 입증도 불발(특검 도입 불가피)
- 성남시장 선거 당시 민간개발을 지지하던 이재명이 당선 직후 공공개발로 번복하던 당시 상황의 원주민 육성 증언 공개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특검 도입으로 연루자와 설계 주범 및 사법 거래 당사자 일망타진

이재명 백현동 게이트 진실규명

주요 내용 및 성과

■ 대장동 위에 백현동, 박근혜 정부 핑계 대며 파격적인 민간 특혜

- 당시 자연녹지지역이었던 한국식품연구원 백현동 옛 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수의계약, 이후 용도지역 6단계 상향 등을 통해 특정 민간업자에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몰아준 특혜사업
- 당초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과 국토부의 용도지역 상향 검토 등을 통한 조기 매각 추진 요청을 묵살
- '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 측이 '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의 선대본부장 출신 김O섭 씨를 영입 後, 8개월 만에 국내 아파트 개발 역사상 전무후무한 '6단계 용도 상향조정'과 '50m 옹벽 허용'으로 귀결
  - 이재명은 국감 답변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 협박당해 성남시는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 민간 매각을 추진했다'고 허위진술
- 대장동과 유사하게 증권사 껍데기를 씌운 지분구조로 실소유주는 베일에 가려 놓고 막대한 이익을 편취
- 성남시 각종 개발 특혜의혹 사건의 중심엔 언제나 이재명의 측근들이 개입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모든 게이트의 핵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특검 도입으로 연루자와 설계 주범 일망타진

■ 이재명이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 협박당해 성남시는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 민간 매각을 추진했다'라는 발언 위증 고발 추진

그들만의 카르텔, 민주당 광역단체 복마전 비리 적발

주요 내용 및 성과

■ 가성비도 낮고 효율성도 없는 부실 사회주택 사업에 등장하는 운동권 세력

- 사회주택 운영기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표자가 전대협 5기 의장 출신 등 운동권 인사와 고 박원순 전 시장 선거 캠프 출신들이 즐비
- 사회주택은 이웃 공동체를 되살려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명분일 뿐 실질적으로는 특정한 정치 이념에 경도된 세력이 독식하는 카르텔 이권 사업에 불과.
- 민주당은 사회주택과 관련된 지적에 필요 이상의 과민 반응을 보임.

■ 재난정보 의무사업자 교통방송(TBS)의 직무유기와 김어준 씨의 정치편향 뉴스 송출로 정권의 나팔수 역할 자처

- TBS가 사회적 재난 정보제공 의무사업자의 업무를 하지 않고 친정권 나팔수 역할만 자처하는 등 직무유기 자행
- 산사태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재난방송이 7시간이나 지연되는 등 자연 및 사회적 재난정보 늑장 보도 건수가 555건
- 지나친 정치편향성과 선정성 등으로 무장한 자극적인 콘텐츠가 시사 프로그램의 탈을 쓰고 송출 中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서울시 자체 행정감사 시행 등 기존 사업 재평가를 통해 불량사업자에게 강력한 페널티 적용 추진

■ 수십억 원에 달하는 상식 밖의 김어준 씨의 출연료 문제 공론화와 뉴스공장의 편파보도에 대한 지속적인 언론중재위 재소

■ 친박원순 단체의 ATM으로 전락한 사회투자기금 감사 필요

강성 민주노총의 초법적 횡포 고발

주요 내용 및 성과

■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폭력 갑질 사례 등 건설 노동실태 고발

- '건설노조 불법행위 유형 및 실제 조사 사례'에 따르면 '18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건설노조에 의한 피해사례는 12개 사 23개 현장, 총 47건
- '19년 10월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ㅇㅇ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협력업체 소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외국인 근로자도 폭행
- '19년 5월에는 공사 현장에서 ㅇㅇ노총이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며 56일간 현장 입구봉쇄
- 노조가 드론과 망원 렌즈를 동원해 사진·동영상을 촬영하고 무더기 신고·고발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 방해
- 악의적으로 병원과 아파트, 학교 등에 확성기를 설치해 소음피해를 유발해 현장소장을 압박, 노조원 채용과 일감을 요구
- 노조가 건설사와 발주자, 근로자 등을 안 가리며 협박하고 폭력을 일삼고 있는데도 국토부가 사실상 방관
-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지난 '19년 국정감사에서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할 때는 엄중 처벌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지만, 국토부가 건설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 해소 센터'에 신고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었고 국토부는 실태조사를 하지도 않았음.

■ 대리점주의 자살까지 이르게 한 택배노조의 정상적인 쟁의행위를 벗어난 무법자 행태 문제 지적

- 배송거부, 비조합원 배송방해, 시설 점거, 대리점주 집단 따돌리기 등

■ 코로나 확산도 무시하고 코레일네트웍스 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집회 대거 참석 문제 및 현황조차 파악 안 된 공사의 안이한 대응 문제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민주노총이 건설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신중검토

■ 택배노조의 무리한 쟁의행위를 제어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보완 입법으로 제도개선 필요

카카오 모빌리티의 무분별한 문어발 사업확장 관련

주요 내용 및 성과

■ 카카오 모빌리티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 기존 시장을 파괴하는 영업행태 질타

- 소상공인 사업영역에 해당하는 영세 사업에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하는 카카오의 행태 지적
- 특히 플랫폼 택시 산업에 들어오며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비가맹 택시 불이익 영업구조 등 기존 택시업계와 사회적갈등을 초래하는 등 선을 넘은 카카오의 영업방식 문제
- 국민의힘은 기존 택시업계 등 영세사업자 불만을 대변하고 카카오에 상생발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에 집중
  - 카카오의 긍정적 답변을 받아내는 성과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국민의힘이 요구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기존 택시업계와의 구체적인 상생 및 개선 방안 마련 지속 압박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증인채택 거부 맹탕 국감

- 윤미향 前 정의연 이사장 검찰 수사결과 여가부의 보조금 부정수급과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에 대한 증인요청을 하였으나 수사 중이며 현 국회의원으로 증인채택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
- 증인, 참고인 1명도 없는 상황에서 여가위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국감의 존재 의미가 없는 맹탕국감이 됨.
  - ▶ 범죄사실이 명백함에도 서정숙 의원의 '윤미향사건' 이라는 발언을 두고 수사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같은 동료 국회의원에게 '씨', '의원' 이라는 존칭을 사용하라며 여당의원들이 강하게 반발, 고성이 오감.

여가부 폐지 여론 문제 제기

- 여가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여가부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분분
  - ▶ 여당의 눈치만 보는 여당여가부가 되지 않기를 촉구

기림비 윤미향 명단 삭제요구

- 기림비에 정대협과 맞선 신미자 피해자 할머니의 이름은 빠져있는데 파렴치범 윤미향의 이름이 버젓이 올라있음에 명단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

소신없는 여가부

무능한 여성가족가부 폐지 논란

주요 내용 및 성과

여가부 폐지 여론

- 박원순·오거돈 시장 권력형 성폭력, 긴급위기가족 , 여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데이트 폭력 등 사건이 생길 때마다 피해자의 편에서보다 가해자의 편에서 방관하며 여당의 눈치만 보는 소신 없는 여가부가 되어가고 있음을 질타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의연 논란이 터지고,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이 터졌음에도 여성가족부는 젠더적인 측면이 아닌 정치적인 판단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함으로 여가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함으로 여가부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분분
- 여성가족부의 설립 이후부터 존폐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음. 2008년 이명박 인수위 시절에 논의되었으나 존치로 결정이 나면서 한동안 폐지론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
- 전 이정옥 장관의 경우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질의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라며 답을 회피
  현 정영애장관에게 같은 질의를 한 결과 가해자가 맞다는 답변을 받음.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현 정부에 눈치보지 않는 역량있는 인사 요구

- 여당의 눈치만 보는 여당여가부가 되지 않기를 촉구
- 전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소신없는 무능함으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교체
- 현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교체되었으나 여전히 소극적인 대응으로 여가부 존폐의 책임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양심잃은 윤미향

정의연 부정수급환수

주요 내용 및 성과

■ 윤미향 피해자 할머니 공금유용 사건 환수조치 해결방안

- 국민의힘 여가위 의원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윤미향 의원의 범죄일람표가 담긴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의 약 1억37만 원을 총 217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윤미향 의원은 적게는 1500원부터 많게는 850만 원까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사용처로는 고깃집부터 식료품점, 마사지샵, 종합소득세 납부, 개인 과태료 납부, 의료비 등 개인 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남.
- 검찰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윤 의원은 지난 8월 첫 공판 과정에서 모든 범죄 행위를 전면 부인
- 윤미향의 범죄사실이 명백함에도 정대협으로부터 부정수급금 6,520만 원 환수조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여가부로서의 본분과 책임추궁과 대응에 대한 질타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부정수급금 환수조치를 위한 행정조치 필요

- 여가부는 아직 수사의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환수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적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일관
- 부정수급금 환수조치를 대비하여 외교부와 협의 요청

방관하는 폭력

데이트폭력·성범죄

주요 내용 및 성과

■ 데이트폭력·친족간 성범죄 대책 방안 마련 요구

- 최근 마포 데이트폭력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으로 인한 사회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 국회는 3월 24일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하였고 10월21일 시행
-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
- 마포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과다한 폭력과 방관으로 사망을 하였으나 현재 가해자는 상해치사로 조사를 받고 있음. 이에 대한 여가부의 대응이 없음에 질타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가 엄중히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여가부에서 수사, 구속 등 발 빠른 현장 대응 등 역할을 제대로 해 줄 것을 당부

■ 친족간의 성폭력과 버닝썬 사건 이후 약물에 의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나 약물의 유통 과정과 이들을 엄격하게 규제, 처벌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고 여가부에서 이들을 보호 조치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

■ 성전환자가 늘어나고 있음에 여성들이 당할 수 있는 역차별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안 마련

- 스토킹법, 피해자보호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폭력피해 등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소 등을 통해 초기 피해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을 강화할 필요

2021
국정감사 백서

PEOPLE POWER PARTY

제3부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성과

국민의힘

제3부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성과

국회운영위원회

추경호 의원

국민혈세로 정책실패 감춘 文정권, 미래부담만 잔뜩 키워놓고 나몰라라

차기 정권에 경제 시한폭탄만 잔뜩 남겨놓고 떠나는 文정권

-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며 27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남은 것은 주택가격 폭등, 소득주도성장(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는 더욱 구하기 어려워져
- 일자리 정책 한다면서 통계분식용 단시간 알바성 세금일자리만 양산
- 文정부 이후 국가채무 410조원 증가하면서 '22년 1,000조원 돌파, 가계부채 역시 450조원 증가하면서 2,000조원 시대 열어
- 탈원전 밀어붙이면서 원전생태계 파괴, 민노총 눈치보며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은 실종
- 공공기관 수익성·생산성은 악화, 임직원·인건비·부채는 대폭 증가

선거 개입 의지만 있고 대장동게이트 의혹 규명에는 의지 없는 청와대

- 문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검·경은 늑장수사, 배임 혐의를 제외한 기소 등으로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
- 검·경의 행태를 봤을 때, 사안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청와대의 메시지는 오히려 보여주기 쇼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팽배한 상황
- 검·경의 부실수사에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와 국민들까지 분노하며 특검을 촉구하고 있는데, 강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는 청와대의 태도를 강력히 질타
-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당일 이재명을 청와대에 불러 회동을 하는 등 청와대가 선거 개입에만 의지가 있고, 대장동게이트 수사에는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어, 특검 수용을 통해 확실하고 공정한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

예정처의 고백, 지출 낮춰잡아 장밋빛 재정 전망

- 재정전망에 활용하는 변수를 3~5년의 평균치를 사용하던 데서 장기재정전망에서는 9년간의 평균치를 사용해 장밋빛 재정 전망을 내놓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정치적 행태를 지적하고,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것을 주문
- 예정처 역시 정부 전망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워 타협했다는 입장을 인정하고, 향후에는 각 의원실에서 요청하는 자료분석과 통계 작성에 노력할 것을 약속
- 국회의 의정활동지원기관으로서 자료와 통계, 보고서 작성에 있어 정치적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

강민국 의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 청와대부터 국회까지 냉철한 비판

청와대의 국정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0회의 북한 무력 도발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 발언은 14회, '도발'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10회에 불과,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도 김정은 눈치만 보는 청와대의 안보 무능 지적
- 이재명 후보 호화 변호인단의 낮은 수수료는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 지적,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개인적 친분에 의한 무료 변론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권익위원장 답변 문제 지적
- 민주당 대표의 현 정권과 거리를 두는 발언, 대장동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엄중 수사 지시에도 지지부진한 검찰의 수사 등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현상이 시작됐음을 지적

제 역할 못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북한 인권 담당자 1명, 북한 인권 관련 예산 인권위 예산의 0.4% 수준, 북한 인권 정책은 외면하고 김정은에 더 신경 쓰는 현 정부 지적

국회 운영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 전체 26억 5,900만 원 들여 설치한 국회 태양광발전기, 목표량 대비 발전량 최대 27%에 불과한 점 지적
- 청년에겐 국회 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국회의원실에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시기 큰 도움이 되는 입법보조원, 운영 지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점 지적

김기현 의원

비정상의 정상화, 비상식의 상식화!

‘대장동 게이트’ 진실규명 및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 촉구!

- 녹취록 및 이재명 후보의 반복된 거짓해명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직 사퇴 및 수사 필요성을 청와대에 강조

내년 대선 및 지선 앞두고 선거중립 위협하는 文정권 비판하고 선거중립내각 구성을 촉구!

- 文대통령, 중앙선관위, 부처 장차관 등의 행보와 그간 총리와 법무·행안장관 모두 여당 소속이었던 사례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선거중립 침해를 우려
- 지난 9월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요청했듯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 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함.

文정부에서 독립성 · 위상 상실한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을 것 촉구!

- 이용수 할머니의 면담 요청에 정의연과의 만남을 역제안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사실상 제안을 거절하고, 되려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였음을 지적
- 북한인권 문제 논의할 회의체를 면피용으로 운영하고, ‘선택적 침묵’하고 있음을 사례를 통해 지적

인권위 진정처리, ‘신속성’ 담보 위한 방안 마련할 것을 촉구

- 최근 5년간 장기 진정사건 늘어나고, 1년 이상 장기사건 중 82%가 각하·기각되어 실질적 인권보호 기능 떨어짐을 지적
- 내규상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 지킬 수 있도록 대안 마련 촉구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업무 · 사업 · 예산 중복을 지적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

- 각 기관의 유사한 홈페이지 운영, 조사회답 등의 업무 중복 등 사례 제시
- 순환근무 특성상 전문성 담보되지 않는 인사체계 지적하고 대책 마련 촉구

김정재 의원

청와대에 대장동 사건 특검 필요성 강조!
문재인 정부 인권 문제와 국회사무처 감사관실 문제 지적

대장동 사건 핵심수사대상인 이재명 후보와 수사기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부적절한 회동의 문제점 지적

- 국정감사 당일 청와대에서 만난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관련, 검찰총장에게 대장동 사건 핵심 수사대상으로 지목된 이재명 후보와 경찰청장·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은 검찰에 수사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 준 것이라는 점 지적
-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면 좌천되는 검찰의 일명 ‘윤석열 학습효과’로 인해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 한계 지적, 대장동 사건 특검 필요성 강조

대장동 민영개발 지시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장동 사건 설계자, 대장동 사건 불공정의 국민 분노 전달, 특검 필요성 강조

- ‘공공개발 이익환수’ 등 주장하면서 대장동 사건 거짓말로 일관하는 이재명 후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는 인허가권 가지고 있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임을 강조
- 이재명 후보가 설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천화동인 등이 약 3억 투자하고 약 8,000억 회수한 불공정한 시스템에 대한 국민 분노 전달

공수처의 인권침해, 북한 인권 등 인권위원회에 인권 관련 이슈 질의

-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에 무료변론한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지적
- 공수처의 손준성 검사 구속 영장 신청 절차의 인권침해 문제 지적
-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선원 강제북송 사건 관련, 김정은 눈치 보느라 북한 인권 문제 안중에도 없는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적 행보 지적

국회방송 부패 신고한 공익신고자 보호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은 국회 감사관실 문제 지적

- 국회방송 내 인건비 및 제작비 부정수급에 대한 공익신고, 2월에 신고했지만 4달 뒤인 6월부터 조사 진행, 이마저도 부실·엉터리 조사
- 의원실에 제보한 공익신고자 겁박하고 제 식구 감싸는 모습 보인 국회사무처 감사관실 행태 지적, 재조사 진행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성일종 의원

대장동 수사 특검 도입해야!

신속·정확한 대장동 수사 청와대에 촉구하고, 특검 도입 요청

- 대통령이 10월 5일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 또 12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지시했으나 3일 후에야 압수수색한 것 지적
- 대장동의 핵심인 유O규가 휴대폰을 창문 밖으로 던졌는데 검찰이 못 찾고 경찰이 찾았으며, 시장실, 부속실도 수색하지 않음. 철저한 수사가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
- 대통령이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라' 지시했음. 실체적 진실은 설계하고 결재한 사람임에도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 이에 특검 도입해야 함을 주장함.

송두환 인권위원장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형수 욕설' 인권침해 소지 있다"

-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거론하며 "이 후보가 형수와 형님에게 쌍욕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안하나"라고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질의
- 송 위원장이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없다"고 말을 아꼈으나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인권위원장이 의견을 내야 한다"라고 재차 답변을 요구
- 이에 송 위원장이 "의원께서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입각하면 인권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 범주에 속하는 문제라는 것에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 끌어냄.

유상범 의원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관련 문재인 대통령 특검 도입 촉구 등

(대통령비서실)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도입 촉구

- 문 대통령이 야당 시절 특검 도입만 8회 촉구한 사실을 지적하고, 특검을 회피하는 현 정부와 여당의 내로남불 행태 지적
- 정의당, 참여연대, 경실련 등 야권·시민연합의 특검 도입 '한목소리' 지적

검찰 '대장동 수사' 문제점 비판 : 의지·능력·공정성 없는 검찰 수사

- 유O규 기소시 배임 혐의를 제외하는 등 '이재명 수사' 포기 선언한 검찰
- 증거인멸 시간만 벌어준 성남시청 뒷북 압수수색, 김O배·남O 등의 혐의 입증 부족으로 구속 실패 등 검찰 부실 수사 비판

이재명 후보자 배임 혐의 지적

- ①공모지침서 직접 보고, ②배당금 활용 방안 직접 결재 사실 등 이재명 직접 관여 정황 제시
- 이재명 측근이 황O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부당한 사퇴 압력, 이후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된 사실 등 배임 혐의 지적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이재명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 제시

- 송두환 위원장이 이재명 지사 재판에서 '상고이유보충서'(허위 답변) 대신 '상고이유서' 2회 제출한 사실을 밝히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의 명백함 지적

(국회예정처)

- 예정처 '건강보험 지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건보 재정폭탄 문제점 지적하고, 예정처의 중장기 재정추계 필요성과 합리적 방안 주문

이 영 의원

굉장히 비상식적인 것들, 국민께 알렸습니다!

(대장동 검증) 유영민 비서실장, "대장동 개발 굉장히 비상식적"

-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질의를 통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청와대도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봤기 때문에 엄중하게 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답변을 받아냄.
- 또한 대장동 사건이 부동산 개발 관련 비리 의혹이라는 점에 대해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아픈 곳"이라는 답변도 이끌어 냄.

(대국민 내로남불) 델타변이 비상 경고한 날, 힐링캠프 떠난 대통령경호처

- '21년 7월 5~9일, 대통령경호처 신임직원 17명이 4박 5일 간 경남 통영으로 힐링캠프를 감.
- 힐링캠프 출발날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철 유동 인구와 맞물려 방역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긴다면 자칫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주의해달라"고 밝힘.
- 국민에게만 적용되고 청와대에는 적용 안 되는 코로나 비상사태 인식에 대한 안일함 지적

(품위손상 국회) 본회의장 출입은 치마 입은 여성직원만?

- 본회의장 출입, 근무하는 국회사무처 의사과 소속 '열 담당 주무관' 11명 모두 여성. 주요 업무는 의원들의 의사진행을 보좌
- 과거 이 직군은 별도 채용을 했으나 현재는 국회사무처 공무원의 순환 보직임에도 불구, 전원 여성직원만 배치
- 또한 '열 담당 주무관'에게는 치마 제복만 지급. 반면 속기사복, 경위복의 경우 치마, 바지를 모두 지급.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업무에 치마입은 여성만 인사 배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오히려 국회의 품위를 손상 시키는 것이라 질타

임이자 의원

文 정부 실정의 역사를 되짚으며 문제의 핵심 강조

부동산 실패의 원인은 문재인·이재명 게임

- 文 정부가 매년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거듭 실패를 반복하며 부동산 투기과열 및 정부의 정책실패의 무능함을 지적
- 플랫폼 업계에서 열풍인 '오징어게임'을 문재인 정부에 빗대어서 부동산 정책에 거듭된 실패를 질타함.
- 작년 1월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을 밝혔고, 올해 1월 신년사에서는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히며 임기동안 부동산 사태에 대해 수도 없는 변명과 사과를 발표하고 부동산 정책을 25번 이상 변경하는 등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추진을 지적
- 소위 '부동산 어벤저스'라고 불리우는 문 정부 전·현직 장관들의 부동산 문제 등을 지적
- 강경한 대응을 보인 LH 부동산 사태 때와 달리 천문학적인 부동산 투기인 '대장동 게이트' 사건의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는 정부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행태 질타
-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은 文 정부 그 자체라는 결론을 도출함.

민폐노총이 되어버린 민주노총

- 10월 6일 실시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지속적인 대규모 집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불법파업으로 인정한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음.
- 민주노총의 정치적 행태와 국방예산 삭감, 기간산업 국유화 등 총파업 목적의 당위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영민 청와대비서실장에게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된다라는 답변과 함께 불법 파업으로 인정한다는 답변을 이끌어냄.

전주혜 의원

文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회동은 명백한 '수사 가이드라인' 지시, 송두환 위원장의 이재명 前지사 무료변론은 청탁금지법 위반

(대통령비서실) 文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만남은 '수사 가이드라인' 지시

- 文대통령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신속·철저 수사'를 지시, 그러나 유O규 前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기소 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제외하는 등 검·경이 대통령 지시를 잘라 먹는다는 지적
- 文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청와대 회동은 검찰과 경찰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 文대통령은 퇴임 후 안전을 보장받고,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수사를 덮는 것을 보장받는다는 의혹이 제기
- 이와 같은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하여는 특별 검사의 수사가 필요함을 지적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이재명 前지사 무료변론은 청탁금지법 위반

- 화려한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사건에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이재명 前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변호사 선임계 제출, 상고이유(보충)서 검토, 탄원서 연명 등의 변호사 행위를 무료로 한 것은 명백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민변이 주장하는 공익활동과는 관계가 없음.
-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관련하여,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 후 3일 만의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피의자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인권 침해 문제 지적

(국회사무처) 「형사소송법」에 배치되는 사무처의 영장 집행 대응 매뉴얼

-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의 의원실 압수수색 대응에 있어 국회사무처가 자동문 대응을 하여 논란
- 현행 형사소송법 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도록 규정
- 그러나 사무처의 영장집행 대응 매뉴얼에는 '압수수색 대상 책임자(의원실 보좌관)'에게 영장 확인 후 공무집행으로 규정함에 따라 형사소송법과 배치됨을 지적, 사무처의 '영장집행 관련 청사 출입시 대응 매뉴얼' 개정 필요 강조

태영호 의원

文 정부 실정의 역사를 되짚으며 문제의 핵심 강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 종전선언 체결 장소로 중국 베이징은 절대 불가
  -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에도 6.25전쟁 피해자이고, 중국은 가해자이기에 중국 베이징을 종전선언 장소로 절대 받아들이면 안된다는 문제점 지적
-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질타
  -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이 아닌 미국과 유럽 본토 방위에 그어져 있고 우리 정부의 대응 기준도 이 레드라인에 기초하고 있다는 문제점 지적
- 오락가락하는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에서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을 제기했지만, 2021년 UN총회 연설에서는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 문구의 앞뒤가 바뀌었음.

국가인권위원회

- 중국 공산당도 탈북민 강제 북송시 포승줄로 결박하고 안대로 눈 가리지 않아. 하물며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행정 권력 앞에서 멈춰 서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서만 내세우던 명분이다.
  - 2019년 발생했던 북한 탈북어민 두 명이 강제 북송된 사건을 국가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행정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라는 인권위의 입장은 유엔 결의와 유엔 인권규약 A 규약 B 규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아주 무기력한 모습이자 인권위 설립 취지, 권능, 임무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질타

국회사무처

- 현재 국회의 허술한 방역 시스템에 대한 지적
  - 방호과 직원들의 체온 측정 시 대면으로 진행, 이로 인해 방호과 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매우 큼. 안면인식 체온 측정 시스템 등 대상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온 측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 국회 사이버 침해 시도로부터 안전한가?
  - 최근 5년간 국회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침해 시도 및 현원 정보보호 담당 인원을 비교해 봤을 때 사이버 침해 시도는 통일부의 약 30배, 외교부의 12배가 많고 현원도 가장 많다. 하지만 정보보호 담당 인원은 통일부의 3분의 1, 외교부의 10분의 1 수준

국민의힘

제3부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성과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의원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를 중점적으로 감사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의혹 S그룹의 회장 비서실장이자, 라임 브로커로 징역을 받은 엄모씨가 박범계 정무특보라는 점을 지적

- S그룹은 이재명 지사 선거법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비 대납의혹의 중심에 있음.
- 엄모씨는 S그룹 회장 비서실장 겸 미래전략사업본부장으로 일했고, 박범계 장관이 2018년 당대표 출마 당시 정무특보(명함)를 맡음.
- 현재 엄모씨는 라임 브로커로서 금감원에 청탁을 한 혐의로 징역1년 6개월(1심)을 선고받음.
- 이재명 지사를 변론한 로펌의 변호사들이 박범계 장관과 이재명 지사와 엮여 있는 S그룹과 그 계열사에 사외이사와 감사를 맡았던 사실을 더해, 변호사비 대납과 쌍방울 그리고 박범계 장관의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함.

박범계 장관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재명 게이트를 뭉개고 있음을 지적

- 이정수 지검장은 박범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짐.
- 이정수 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도 받지 않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옴.
  - 김오수 총장은 9월26일에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지시했다고 밝힘.
  - 그러나 이정수 지검장은 9월28일 1차 압수수색 대상에서 성남시청 제외
  - 2차(10월15일)와 3차(10월18일) 압수수색에서도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은 압수수색 하지 않음.
- 이정수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지시를 번번히 무시한다면, 총장보다 더 윗선인 청와대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고 수사하고 있는 것이란 의혹을 제기함.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재명 선거법위반 재판거래' 문제 제기

- 대법연구관은 당초 '이재명 유죄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자, 뒤늦게 '무죄 취지의 추가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보도 됨.
- 또한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업을 몰랐다고 했으나,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일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하였음.
- 이를 근거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점을 지적함.

권성동 의원

이재명 전 지사의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사실상 내정되어있던 대장동 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아닌 화천대유 몰아주기

- 성남 대장동 사업자 선정과정에 있어 공모기간이 단축된 점, 하루만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점을 지적함. 이 과정에 있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이 사업을 기획한 점을 들어 결재권자였던 시장의 배임혐의를 제기함. 이후 화천대유는 만점을 받고 경쟁사 2곳은 0점을 받은 절차적 이례성과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이 "내말이 곧 시장님 뜻"이라고 언급한 것이 드러나며 게이트의 실체가 이재명 시장임이 밝혀짐.

특정인에게 집중된 개발이익, 천문학적 특혜구조의 설계자는 이재명이다!

- 대장동 사업은 소수의 특정 민간인들이 수익을 독식하는 구조였다는 점과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도 이를 묵인하였음을 지적함. 이재명 시장이 이를 알고있던 '배임자'인지, 이를 몰랐던 무능한 시장인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함. 또한 화천대유가 당시 수의계약을 통해 지구내 5개 사업부지를 확보한 점을 들어 사업리스크가 없었음을 질타함.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내정밀약과 불법 법률자문

- 이재명 전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은 무죄 판결했는데, 사실상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짐. 이는 대가성이 농후한 내정밀약임.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연간 2억여 원의 고문료를 받았으며 최근 사임했는데, 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자문을 했다는 것이 밝혀짐. 이는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임.

대장동 의혹에 재조명받는 성남시 백현동 논란

- 대장동 개발과 비슷한 시기 추진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구사옥 부지매각과 개발사업에도 이재명 지사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매각이 안되던 부지가 이재명 지사의 전 선대본부장이 매각사에 영입된 후 용도변경이 되어 매각되었고,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불법으로 옹벽이 세워진 대규모 분양아파트가 들어섬. 여기에 특혜의혹이 있음.

유상범 의원

대장동 게이트, 권순일 재판거래, 변호사비 대납 등 이재명 후보 관련 의혹의 문제 제기 및 문재인 정권 행태 비판

(법무부·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의혹 관련 검찰 수사 문제점 비판

- 전담 수사팀이 배임 혐의 규명에 소극적인 등 지휘부 수사 방해 정황
- 증거인멸 시간만 벌어준 성남시청 뒷북 압수수색, 김O배·남O 등의 혐의 입증 부족으로 구속 실패 등 검찰 부실 수사 비판

(대법원) 권순일 前 대법관, 화천대유 재판거래 의혹

-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가로 대법관을 퇴직하자마자 화천대유 고문으로 매월 1,500만 원을 받아 법관으로서 청렴성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지를 훼손시킴.
-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O배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권순일 前 대법관을 8차례나 만나, 무죄 판결 사주 의혹 문제 제기

(감사원) '대장동 개발 의혹' 감사원 감사 촉구

- 감사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수행 업무에 대해 감사 실시할 수 있고, 지자체 개발사업에 대해 최근 5년간 69건 감사 실시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해소와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 필요에 대한 문제 제기

(공수처) '고발사주' 및 '제보사주' 의혹 관련 수사 문제점 지적

- 고발사주 의혹 관련 무리한 강제수사 및 제보사주 수사 미진 등 대선개입 의도의 정치수사 비판

(군사법원)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 부실

- 국방부 장관, 대통령이 '공군 이 중사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지시·약속했지만, 부실 초동수사 관련자 '전원'이 불기소되면서 '의도적 부실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비판에 대한 문제 제기

장제원 의원

이재명 대장동 비리 방탄수사 강력 규탄, 특검촉구

박범계 법무부 정권방탄 법무행정 맹폭

- 이재명 대장동 비리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업무상 배임, 특검 촉구
  -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수익구조 및 사업주체 선정 과정 등을 不明하게 진행하고, 특정 민간에게 상식 수준 밖의 이익이 초과배분되는 것을 사실상 묵시적으로 승인하였으며 해당 수익분배까지 공모한 구체적 정황을 들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에 해당함을 지적
- 언론통제용 형사사건 심의공개위원회 자의적 밀실 운영 행태 지적
- 친여 인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고의적 유임 부당
- 피고인 이성윤 직무배제 촉구
- 독직폭행 1심 유죄 정진웅 징계 이중잣대 부당
- 박범계 법무 선거중립 의무 준수 촉구

김오수 대검, 수사원칙 내팽개친 부당수사 행태 지적 및 특검 촉구

- 이재명 소환 조사 및 기소 촉구
  - 김오수 검찰이 동 사건을 김O배씨가 공모하고 주도한 재개발 비리로 결론 내고 김O배와 유O규 단 두 사람을 사법 처리하는 선에서 '꼬리 자르기'하려는 수순에 돌입하여 이재명 소환 계획 제출 촉구
- 유O규 기소 배임 혐의 적시 촉구
  - 국정감사 당시 시점으로 유O규의 구속 만료가 목전, 관련하여 수사팀 차원 총장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는 바, 만에 하나 유O규의 기소 과정에서 뇌물 혐의만 공소장에 적시하고 이재명 지사의 관여 여부와 관련하여 배임 혐의는 추후 보강수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어설픈 중간결론 도출 할 경우 수사 자체가 법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맹폭

이정수 중앙지검, 이재명 면죄부 주기 부실·늑장 수사 행태 규탄

- 이재명 대장동 비리 배임 기소 및 유O규 부작위 압수수색 징계 촉구
- 반복적으로 자행되는 중앙지검 허위공보 행태 지적

김진욱 공수처, 존립 명분 파괴하는 수사 정치 규탄

- 대선 개입용 입건 정치 행태 지적
- 이재명 대장동 비리 공수처 해태

전주혜 의원

‘대장동 게이트’, 부실 수사 완결판

(법무부) 검찰 인사 후 권력수사 “All- Stop”

-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옵티머스·라임 관련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검찰 인사 후 모두 지지부진한 상태
- 검찰 내, 소위 ‘친정권’ 검사들의 사건 뭉개기가 노골화. ‘충견 검찰’을 넘어서 ‘애완견 검찰’이 되었다는 지적

(검찰) 대장동게이트, 검찰 수사의지 있는가?

- 검찰, 성남시청 다섯 번째 압수수색만에 시장실과 부속실 포함하여 집행
-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대검→중앙지검→수원지검 ‘핑퐁’
- 대통령의 ‘철저·신속’ 수사 지시 1시간 만에 부실영장 청구·기각
- 유O규 구속영장에 적시된 배임 혐의를 공소장에서 빼버려 이재명 면죄부, 검찰이 이재명 구하기 사설 로펌으로 나섰다는 비판

(대법원) 헌정사상 초유 ‘재판 거래’ 의혹

- 화천대유 대주주 김O배, 이재명 후보의 공선법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결정, 심리, 무죄판결을 전후해 8회에 걸쳐 권순일 前대법관과 ‘수상한 만남’ 드러남.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 직후 화천대유 고문직 맡아 대가성 의혹

(공수처) 정권수사는 거북이, 야당수사는 KTX

-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에 연루된 친정권 수사는 뭉개기. 조희연 교육감 전교조 퇴직교사 부당채용 사건은 기소까지 무려 4개월 소요
- 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은 고발 3일 만에 입건, 4일 차에 광속 압수수색 실시, 文정권 게슈타포로 전락한 공수처

조수진 의원

대장동 부패 게이트,
특검 도입만이 정쟁을 해결할 파이널 게이트!

(대법원 국정감사) 이재명-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 이재명 경기도지사 상고심의 캐스팅보터였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전원합의체 판결도 ‘무죄’로 뒤바뀜.
- 이후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달 만에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위법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몸통이라고 추정되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등록하여 고액의 고문료와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남.
-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는 만큼 대법원 차원의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

(법무부·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만이 유일

-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키맨’인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유O규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으나 한 달 전 이사한 월세방을 수색하고,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빈집·빈손 압수수색을 자행함.
-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으나 장관의 고교 후배, 대통령 친구인 울산시장의 사위, 친정권 정치검사 등으로 꾸려져 신뢰도가 매우 낮은 상황임.
- 부실, 봐주기 잡음이 나오고 있고, 검경의 중복수사로 인한 분산 문제까지 문제시되고 있으므로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요청

(대검찰청) 실무자 유O규 배임 구속! 설계자 이재명은?

-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핵심은 1조 원에 달하는 돈벼락이 특정 민간업자에게 돌아간 것임. 특히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대규모 사업인 만큼, 인·허가를 가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임을 지적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유O규가 수천억대 ‘배임’ 혐의로 기소될 것이란 관측이 있으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민간과의 수익구조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므로 스스로 설계자라고 밝힌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

(공수처)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개입 의혹 수사

- 박지원 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야권 후보에게 과거 의혹이 있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 입 다물라는 등의 협박을 일삼고, 언론 제보자를 만나 보도 시기를 논의하는 등 국내정치 개입행위로 국정원법을 위반함.
-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이라는 중대 의혹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수사가 매우 더딘 만큼 엄정한 수사를 촉구

국민의힘

제3부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성과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

'대장동 게이트' 규명/ 경제·산업 황폐화 문재인정부 비판

'대장동 게이트' 규명

- **(증인 신청 대응)** 유O규 등 이재명 전 성남시장 특혜개발 관련 핵심증인 신청. 여당의 물타기식 비핵심 증인 수용 협상 대응 및 꼬리자르기식 검찰수사 비판. 윤석열 후보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제기에 대한 강력 대응
- **(권익위 부패행위 조사 촉구)** 권익위가 의뢰한 '대장동개발 부패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건종결 관련, 경기분당서 간부의 화천대유 충성맹세 의혹 제기 및 이에 대한 권익위 부패행위 조사 촉구.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및 유O규, 이재명 시장에 대한 부패행위 및 비리 조사 촉구

경제·산업 황폐화 문재인정부 비판 : 과도한 공정위 제재 및 조사

- **(해운산업 공동행위 제재)** 정기선사 공동행위 예외규정 적용 쟁점을 별론으로 하고, 경제·산업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공정위 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 : 외국선사 반사이익 및 선복량 손실 등 해양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에 따라 판단하거나, 공정위 회의규칙에 따라 심의를 종료하도록 하는 등 대안 제시 : 수용(국조실 정책조정)
- **(영장없는 무소불위 기업집단국 조사)** 기업집단국 신설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기업조사에 대한 전수조사 분석, 총 272건으로 매주 한 두 번씩 조사가 이뤄질 정도로 다발적이나 법위반에 대한 '고발' 등은 소수에 불과해 '과잉조사'라는 비판. 이에 과도한 기업조사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가 필요하나, 공정위의 '조사절차 규칙'은 사실상 '면죄부'를 만든 격이므로 기업조사에 대한 정교한 사전통제 방안 마련 촉구

2030세대 가상자산 이슈 대응 : 금융위 가상자산 정책 소통창구 마련

- 가상자산관련 산업 제도화 단계에서 다양한 정책 이슈가 발생하고 있으나, 초기 규제 신설단계에서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는 가상자산관련 업계의 소통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가상자산업계 제도화 연착륙과 산업발전을 위해 업계단체 등록 등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시기 바람.

강민국 의원

정부와 여당 문제에는 쓴소리 전문가, 민생 챙기기에는 정책 전문가!

정부 및 여당의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한국성장금융 대표 낙하산 인사 지적 이후, 인사 철회 도출
- 정부 입맛대로 구성한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문제 지적
- 예금보험공사 위원으로 이재명 측근 이O주 위촉 문제 지적 및 사의 도출
- 대장동 사업 문제 지적 및 정부와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 촉구
- 이재명 지지 그룹과 기본 소득 행사 공동 개최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적
- 조국 일가의 갚지 않은 채권 원리금 지적
-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정책 무너뜨리는 LH 혁신방안 지적

서민 경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국민은 원리금 상환 고통받는데, 최근 3년간 약 120조 원 예대금리 챙긴 은행 지적
- 고객 예치금 93억 원 묶여 있는 '접속 차단 국내 코인거래소' 지적
- 일반인보다 대출금리 낮고 한도는 더 많은 전문직 대출금리 문제 지적
- 카카오 메신저 사기 횡행하는데, 금융당국의 은행권 메시지 카카오 일원화 문제 지적
- 58개 금융사 가운데 금융상품 환불요청금 가장 많은 카카오뱅크 지적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와 지원을 챙기고, 기업의 불공정 행위나 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 유명무실한 소관 법률 위반 사전심사 청구제도 지적
- 연안여객선 담보대출 기피한 산업은행 지적
- 실적 저조한 신용보증기금의 '유턴기업 보증지원' 지적
- 관리회사인 HMM 여유자금 맡은 산업은행 지적
- 전자증권제도 참여대상에 비상장사 홀대한 예탁결재원 지적
- 공정위 공표에도 눈 하나 깜짝 안하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들 지적
- 역별로 편차 심한 이동통신사의 5G 무선국 설치 문제 지적

박수영 의원

대장동으로 드러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특혜 문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대장동 특혜에 대한 문제 제기

- 컨소시엄 참여사의 사업계획서 분석을 통해 이미 토지보상,인허가,분양이라는 3대 리스크가 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이재명 전 성남시장 측의 노리스크 노리턴에 대한 반박
-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사업수익 배분, 적정금리 등 사업계획서상 주요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선정된 점에 대해 공정성 문제 제기
- 하나은행의 컨소시엄비용이 자신의 사업계획서보다 낮게 책정되었으며, 약 2500만원에 달하는 평당 분양을 이루면서 원주민과 입주민의 착취 문제 지적
-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의 보통주가 아닌 참가적우선주 선택으로 소수인원들에게 이익이 몰린 의혹에 대해 지적
-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실소유주 의혹제기
- 제보에 따른 50억원 약속 그룹과 로비 의혹에 대한 특검 요청 등

증가하는 국가부채와 재정관리의 필요성

- 예산서상의 국가부채와 결산서상의 국가부채 차이가 남에도 정부는 국가재정법에만 의거해 국가부채를 산정하므로, 국가재정법을 국제표준인 OECD기준으로 맞추어 제대로 부채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문재인 정부의 정부주도 일자리정책 비판

- 문재인 정부 이후 60대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경제중추인 3040대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부주도 재정일자리 사업을 통한 일자리 통계 착시문제를 지적하고, 민간주도로 청년층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 변화 요구

광복회의 불법수익사업, 부채증가 문제에 대한 보훈처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 지적

유의동 의원

본연의 임무는 망각하고 정권 입김에 오락가락하는 기관들

국무조정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우려했던 대로 여권 성향 '스펙쌓기용 위원회'로 전락
- 정권말, 도 넘어선 알박기 낙하산 인사
  - 형해화된 이사장 및 원장추천위원회 대대적 손질 필요
  - 올해 임명된 15명의 출연연구기관 원장 중 12명이 대통령 직속기구 및 자문기구 또는 청와대 출신

공정거래위원회

- 물가관리기구 아니라면서, 계란값 관리에 나선 공정위 지적
- 오픈마켓, 머지포인트 2,973억원 팔아놓고 환불은 고작 1.32%(39억원)
  - 제 2머지사태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 프랜차이즈 수천만원 납품대금 카드 결제 불가,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
  - 20개 주요가맹본부 중 납품대금 카드결제 가능한 가맹본부는 단 3곳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정부의 무리한 가계대출 관리로 실수요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 올 4사분기 입주 앞둔 5만 7천세대 입주 대란 우려
- 가계대출 대란은 금융감독원의 명백한 감독 실패임을 지적

금융 공공기관

- **신용보증기금** : 스타트업 메카 만든다더니 행사장으로 전락한 프론트원
- **예탁결제원** : 한O진 전 노무현재단 사업본부장 임명을 위해 있지도 않은 '상임이사' 직급 신설 추진, 자회사 KS드림 김O수 사장 임기마친 후에야 사장 연봉 삭감 등 늑장 조치
- **한국주택금융공사** : 대항력 문제를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로 인해 부실보증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 촉구

윤두현 의원

국민의 입장에서 文 정부 실정 지적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끝까지 파헤친다

- 더불어민주당과 대선 후보 측은 '위험이 큰 만큼 이익도 많았다(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 주장하지만 공모에 참여한 컨소시엄 모두 사업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고, 예금보험공사도 안전한 사업으로 판단해 보증했다고 답변해 거짓 주장임이 밝혀짐.
-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로 1조 원에 가까운 부당이익이 있었음. 법조인 등에게 준 50억 원 등은 깃털에 불과하고 몸통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함.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부당이익이 누구를 위해 쓰였는지, 설계자가 누구인지 실체를 밝힐 것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 前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채용 관련,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의 권고 미준수 지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5G, 터지지도 않는데 왜 요금은 5G?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마련해야

-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했지만 농어촌 등 지방은 5G 기지국이 턱없이 부족하고 28GHz 기지국 설치도 저조한 실정임. 5G 서비스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은데, 5G 요금제 선택이 사실상 강제되어 국민 편익을 저해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이통사 불공정 약관 개정 및 제도 개선 촉구
- **(이통통신3사)** 소비자 보호 위한 요금제 다양화, 서비스 개선 제안하고 개선점 찾겠다는 답변 이끌어 냄.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 마련해야

- **(한국주택금융공사)** 文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3년 새 129배 급증한 현실 지적. 임대인과 세입자 간 분쟁으로 국민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모집 중개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필요. 햇살론 등 저소득층·소상공인 위한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 제안

김원웅 광복회장 부친의 독립운동 허위 의혹 철저히 검증해야

- **(국가보훈처)** 필적이 다른 김원웅 부친의 자필공적서 2건 입수해 보훈처의 졸속 검증 지적하고 국민 혼란 해소를 위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재검증 요구
- 김원웅 광복회장의 정치 편향적 행보 지적 및 대책 마련 요구

윤주경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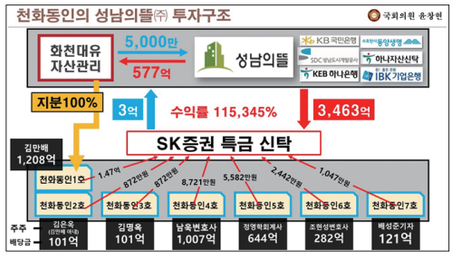
문재인정부 총결산 : "주먹구구" "수수방관" "유명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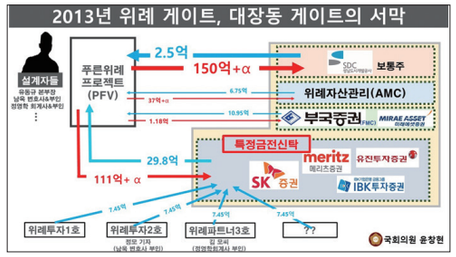
- 천안함 폭침 허위사실에 대한 도 넘은 정부의 무대응 행태 지적 및 강력 대응 촉구
- 신O총 예비역 하사에 대한 보훈처 상이등급 판정 문제 지적 및 절차 개선 요구
- 소득주도성장 통계를 바탕으로 한 문제점 지적으로 KDI원장 소주성 부작용 인정
-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비식별화 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는 AI 스피커 문제 지적
- 권익위원회가 발표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현황의 신뢰도 문제 지적 및 개선 요구
- 카톡선물 가액이하 결제불가로 불필요한 소비 유발 지적으로, 해당 상품이 단종되거나 품절일 경우, 별도의 고객센터 연락없이 고객 환불절차를 현격하게 간소화하기로 결정
- 보험사기 판단 입원적정성 심사 지연과 심사의 질 지적으로, 금융위·복지부 등이 모여 입원적정성 심사 지연에 대한 개선방안과 기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방안 논의 예정
-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시간대별 데이터도 없이 영업제한 실시로 해당 시간대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한 문재인 정부의 '주먹구구식' 코로나19 방역 대책 질타
- "코로나19 피해업종 소비 촉진" 취지와 달리, 온라인 업종 소비만 증가하는 등 상생소비지원금(카드캐시백) = 양극화촉진지원금제도의 미스매치 지적(금융위원장 인정)
- 가계부채 증가 원인은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탓이며, 가계부채증가율 6% 산정 근거 부실 질타. 문 정부 가계대출 규제 = 문재인판 오징어게임
- <대장동게이트> 관련 금융사에 대한 검사 및 회계감리를 금융당국에 촉구
-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갭투자 실태 지적으로, 보금자리론 추가주택구입 검증주기를 3년(현행) -> 1년 단축 추진
- 캠코, 주택 세일앤리스백 제도 지원성과 전무 지적으로, 지원대상 주택기준을 시가 6억원 -> 공시가 6억 원 또는 시가 9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 추진
- 청약신청금 환불지연 실태를 지적하고, 금감원에 <건축물분양법>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할 것을 촉구

윤창현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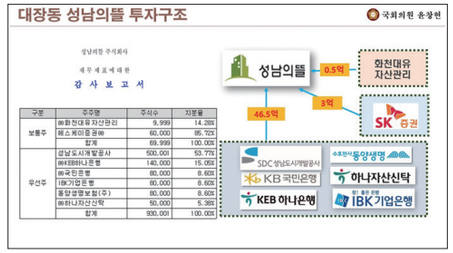
경제통·금융통의 국민소통 민생중심 국감
- 불공정·비상식을 짚어낸 대장동 게이트 해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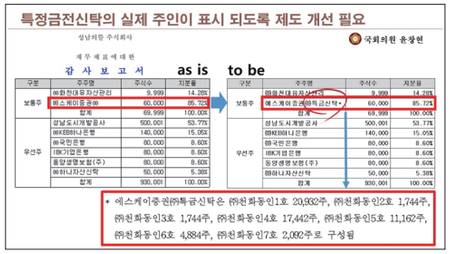
- '천화동인'의 비정상적 수익률(115,345%)을 밝혀내고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에 접근하는 실마리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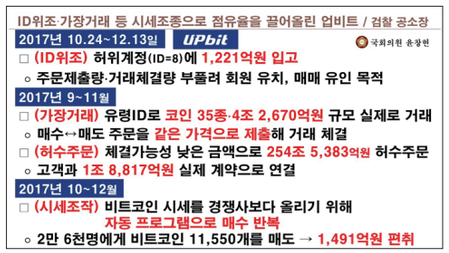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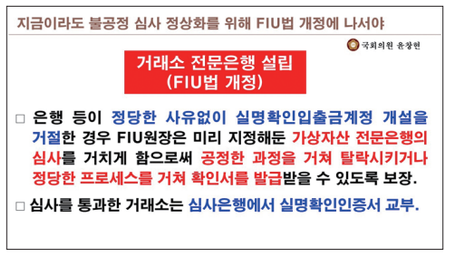
- 불공정·비정상 부동산 투자에 동원되는 특정금전신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금융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안 제시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불공정 거래를 지적하고 금융위의 거래소 불공정 심사에 대한 정상화 대안을 제시





제3부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성과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

이미 어긴 꼼수 재정준칙 비판, 역대 최대 세수오차율 질타, ㈜화천대유 세무조사 촉구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 이미 어겼다. '꼼수 재정준칙'에 재정총량 맛사지 들어간 정부

- 2020년 10월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 산식이 2020년 4차 추경(1.07초과), 2021년 1차 추경(1.2초과), 2차 추경(1.16초과) 등 이미 3차례나 어겨짐. 잠재성장률(추정치)하락에 따라 정부수입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년 총수입을 13.7%나 늘리고,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3.0% 이하에 맞춰 꼼수 재정준칙에 끼워 맞추기 위해 정부가 재정총량 맛사지를 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현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의 문제점을 지적함.

통계 작성 이래 금년 가장 큰 '세수 오차율' 1년 전과 42조 차이나

- 금년 초과세수 31.5조원 안에는 11.5조원의 기저효과분(전년도 세정지원 납부유예분)이 반영돼 있는데,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제를 보면 거의 모든 전제들이 2021년 전망치보다 떨어짐.
- 2021년 최종 국세수입이 314.3조원(2차추경 기준)이 된다고 가정하면 금년 세수 추계 오차율(282.7조 원 본예산 대비)은 무려 11.1%가 되어 2004년 세수오차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오차율이고, 첫 두자릿 수 오차율을 기록함. 오류투성이인 현 국세수입 추계방식을 지적하고, 세수모형 마련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함.

㈜화천대유에 대한 세무조사 촉구, 해외 직구 되팔이 문제 지적 등

- ▲FIU의 의심거래 정황포착 ▲수상한 대여금 이자지급 ▲대여자와 차입자간 상이한 이자비용 ▲급여퇴직금의 과다지급 등의 혐의가 있는 ㈜화천대유에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촉구함.

해외 직구 되팔이가 활개를 치고 있지만 관세청 단속이 저조한 실태를 지적하고, 조달청이 유독 대기업 담합사건만 봐주고 있어 공정위와의 협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통계청이 1인 가구 청년 고독사 집계 계획조차 없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였음.

박형수 의원

반복되는 부동산 게이트 및 공공조달 평가비리 근절해야

반복되는 민관 유착 부동산 게이트 근절방안 마련해야

- 대장동 게이트는 공공개발을 빙자하여 막대한 이익을 특정인들에게 몰아준 최악의 부동산 게이트임.
- 대장동 게이트의 구조적 원인은, 각 지자체에 지역개발사업 인허가권과 시행사 선정권, 수익 배분권 등의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었다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관과 민이 결탁하여 천문학적인 수익을 빼돌리는 것이 가능했음.
- 원주민과 입주자들의 피해가 고스란히 특정인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함.
- 기재부는 이번 대장동 게이트 사례와 위례신도시 게이트 사례 등을 철저히 연구해서 지자체가 관여하는 민관부동산개발사업의 전범을 만들어야 함.

조달청 공모사업 평가위원 비리 근절해야

- 조달청 입찰에 평가위원과 참여업체가 유착하여 평가점수를 편파적으로 매겨서 업체가 선정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 조달청은 즉시 평가위원 채점표를 전수조사 해야하며, 조달청 직원의 연루가능성과 조달청 평가위원제도의 제도적 미비점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하여 이번 기회에 이러한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함.

사회보험 부실문제 해결해야

- 소위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문제, 현 정부의 방치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국민연금 재정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
- 지금이라도 8대 사회보험 재정문제 해결방안과 연금개혁 방안 마련위해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배준영 의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국정감사에서 밝혀내고 정책 전환 요구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 폭등해도 대출은 조이면서 세금이 늘어난 것 지적

-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으로 2017년 대비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국민은 약 2배, 납부 세액은 2.5배나 증가했다는 사실 밝혀내.
- 집값 폭등에 따른 대출량 증가 원인을 국민께 떠넘기며 실수요자가 대다수인 전세 대출마저 규제해, 국민을 길거리로 내모는 정책 폐지 요구
- 권한 없는 금융위원회에서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법률에 명시된 '금융통화위원회(한국은행)'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

전 국민 관심사인 대장동 재개발사업 관련 세무 자료 정보공개 요구

- 「국회증언감정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대장동 재개발사업 관련 기업들에 대한 납세·과세·세무조사 정보 비공개 행위 질타
-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장동 재개발사업 관련 기업과 관계자들의 세무 자료를 여·야 합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제출받을 것을 제안
- 아울러 공식 통계 발표 전 청와대에 사전 제공하는 통계가 현 정권 들어 4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 밝혀내고 청와대의 통계 조작 논란 공론화
- 또한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와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에 매년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 요구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 제시

- 정부의 잘못된 세수 예측으로 10조 원 이상 국세 수입이 늘어나고 물가와 유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유류세 30% 인하 요구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면제 관련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어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해 줄 것을 촉구
-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와 구매 한도 상향 및 국민의 편의성 증가를 위한 해외 직구 한도 상향 요구
-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수입 관세 감면과 전기버스 부가세 면제 제도로 대부분 중국산 제품이 혜택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 촉구

서병수 의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세제 문제점 지적 및 미래 대응

기재부, 부동산 정책 콘트롤타워의 총체적 실패

- 부동산 불로소득·투기 엄벌 한다던 정부, '화천대유 사건' 앞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행태 비판
- 부동산 양도세, 선거 앞두고 선심성 정책 남발 및 장특공제 규제 강화, 선거 이후 집값이 오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조하는 정부·여당
- 정책 실패 결과로 나타난 증여, 10년간 생활비 이체까지 모두 세무조사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납세자에게 세무부담 전가하는 과세당국

- 올해부터 일용직·특고 근로자 소득파악 위해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매달 국세청에 신고 의무화
- 정부가 해야할 일을 납세자에게 전가시키면서 사업자 부담 증대시킴.
-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 개선 및 4대보험 징수 등 근본적 제도개혁 필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CBDC 도입, 대외리스크 안전망 점검

- **(기준금리 인상 목적)** 기준금리 0.25%p 인상 결정의 시기(부총리의 금리인상 시사 발언)와 효과(소비자물가상승률 0.04%p↓vs. 주택가격상승률 0.25%p↓)를 근거로 금통위의 기준금리정책이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전락했다는 점 비판
- **(CBDC 도입 준비)**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의 도입 여부 및 시기(총재,"2년 내에 도입 여부 결정"), CBDC 도입 시 편익(금융포용 확대, 화폐발행비용 감소)과 우려(빅브라더, 사이버리스크, 뱅크런 등)를 통해 한국은행의 사전 준비상황 점검
  ※ 2021.09.24. 서병수 의원, 「한국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CBDC 발행의 법적 근거 규정 신설)
- **(적정 외환보유)** 퍼펙트스톰 발생 가능성(이주열 "대비는 해야" vs. 홍남기 "가능성 안 커")에 대한 외환당국 입장, 현 외환보유액의 적정 수준, 한미 통화스왑(12월 만기) 연장 여부 확인을 통해 대외리스크에 대한 안전망 사전 점검했음.

서일준 의원

실증적·객관적 자료 통해 문재인 정부 총체적 정책 실패 증명

'친문 인사 공공기관 알박기' 전수조사 결과 발표

- 39개 정부 부처 산하 370개 공공기관 전수조사하여 공공기관 임원 728명 중 13.6%에 해당하는 99명이 대선 캠프, 민주당, 청와대 등 경력의 '친문 코드' 인사임을 확인(9월 8일 중앙일보 1면 탑기사)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 국가기관 최초 탈원전 전력손실비용 계산

-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하여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전력 손실비용이 30년 간 1067조원에 달함을 분석
- 국가기관 최초의 탈원전 전력손실비용 분석 결과로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부작용 실증적 증명 (9월 24일 중앙일보 1면 탑기사)

문재인 정부 5년 대북 정책 실패 객관적 근거 제시

-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1.4%로 역대 정부 중 최악 수준
- 문재인 정부 대북 코로나 지원금 0원 (MB정부 신종플루 지원금은 219억원)
- 전 정부에서보다 문재인 정부서 북한 미사일 더 많이 발사
- 제재 위반 북한 SOC 사업에 '5조원 지원' 해양수산부 연구용역보고서 입수

민생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가장 먼저 파악하고 대안 마련

- 최근 3년 간 보세구역 내 밀수 범죄 150배 급증에 대책 요구
-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연예인 홍보대사 과도한 예산 개선 주문
- 일본 수탈 근거 '대일배상청구자료'(한은 보유) 존재 확인 후 최초 언론 공개
- 여성 비하 욕설을 북한의 은어라 소개한 통계청 홈페이지 지적
- 6.25 참전 용사 모독 中 영화 부실 심사 영등위 서류 공개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시 급증한 불법 도박에도 저조한 단속 실적 질타
- 홈택스 등 국세청 엔티스 사업자 특혜 계약 의혹 제기

유경준 의원

엉망진창·허둥지둥·오락가락 文정부 경제정책의 실태를 파헤치고 실패를 고발하다

'엉망진창' 부동산정책

- 정부가 발표한 올해 주택 공급예측량 46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측량 4.1만호이나 실제로는 각각 39만호, 1.9만호에 그칠 것으로 분석, 정부의 엉터리 공급계획을 비판함.
- 정부가 사용하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공식통계조차 없어 국제비교도 힘든 엉터리 수치임을 비판,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의 보유세 수준이 OECD 평균 이상임을 증명함.
- 정부의 양도세 강화정책이 다주택자의 주택매도가 아닌 증여로 이어진 정황을 낱낱이 밝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결국 실패했음을 재차 확인함.

'허둥지둥' 가상자산 과세

-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준비가 매우 부족함. 이에 법·제도적 장치 없이 무리하게 과세만 하려는 점을 비판함.
-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양도세와 거래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실시와 함께 증권거래세 폐지를 요구함.

'오락가락' 세수추계

- 정부가 내부적으로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5% 넘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안을 편성함. 반면, 국민들에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경고한 것과 모순됨을 지적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비판함.
-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코스피는 평균 3470, 코스닥은 평균 1100으로 전망, 재정건전성 악화를 은폐하고자 최근 우리나라 주가지수 추이에 비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증시 전망을 바탕으로 세수를 추계한 것이 아닌지 비판함.

정운천 의원

농업무시·농업홀대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의 농정정책 지적

문재인 정부의 실효성 없는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지적

- 5년 사이 40세 청년농업인 1,551농가 감소('15년 14,366농가→'20년 12,815농가)
- 청년농업인 관련 부실한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한농대 정원 증원(570명 → 1,000명), 청년뉴타운정책 추진 등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대안 제시

세수 확보를 위한 온라인 마권 발매 시스템 도입

- 코로나19로 인한 마사회의 매출 감소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감소
  ※ 세수감소 추정액 : 1조 7,597억원(2021년 8월 기준)
- 불법 경마의 조세포탈의 환수와 기존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온라인마권 발매 제시

농·축산업 상속공제 문제점 지적

- 농지가격 상승 및 농업의 규모화를 감안하지 않아 후계자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는 현행 영농상속공제
- 가업상속공제 수준의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 필요성 제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실적 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상생기금 목표액 대비 실적 저조(목표대비 29.5%)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및 정부의 기금 출연 근거 마련, 기금 운영본부 독립 설치 등 기금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
  ※ 상생기금 활성화를 위한 「FTA농어업법」, 「상생협력법」, 「기부금품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층 전세자금대출 급증 문제 지적

- 27차례에 걸친 무능한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매매·전세가격이 폭증하면서 청년층(20대~30대) 전세자금대출은 88조원 급증했고, 전체 전세자금대출에서 청년층 비중은 59.2%(21.6월 기준) 차지
  ※ 시중 5대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 29조원(2017.6) → 88조원(2021.6)
- 청년층은 소득과 자산이 적어 취약차주 비중이 타 연령층 대비 높은 상황으로 청년층의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선제적 관리 대책 마련 촉구

추경호 의원

국민혈세로 정책실패 감춘 文정권, 미래부담만 잔뜩 키워놓고 나몰라라

文정권, 역대급 국채발행도 모자라 기금에서 빼쓴 돈 95조!

- 국가채무 1,000조, 국채비율 50% 시대를 연 文정권, 기금에서 95조 빼써
- 기금에서 빼쓴 돈, 박근혜 정부의 3배에 달해
- 결국,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지 (-)로 폭락! 추가 국채발행 우려 大
  => 기재부, 해결방안 등 검토 후 보고 요청

매출 188억원 증가한 사업주에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 간이사업자, 동네 떡집 등 매출 감소해도 못받는데, 매출증가 업체 지급
- 1억원 이상 증가업체 9만5천곳에 2,611억원 지급
- 기재부는 기본현황 조차 파악 못해. 재정집행관리 나몰라라!
  => 기재부, 매출 급증 업체 등 환수방안 검토예정

문 정권 4년 간 탈원전·文케어 추진,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이 동원되면서 공공기관 수익성·생산성이 모두 악화됐고, 정부 재정 의존수입은 5년새 32조원 늘어 100조원에 육박

- **(매출액 영업이익률 : 영업효율성 평가)** 14.0%%('16) → 5.2%('20)
- **(부가가치액 :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합)** 50.7조원('16) → 44.0조원('20)
- **(공공기관 재정의존도)** 67조8,000억원('16) → 99조4,000억원('20)

20대 국회에서 공공기관 정치권 낙하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 자격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기획재정부가 시행령 개정 통해 정치권 낙하산 임명 물꼬 터줌.

- 감사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자격을 갖추고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제한함. (20,3월 국회 본회의 통과, 21.1월 시행)
- 하지만, 20.11월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민단체 및 정치권 인사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무력화시킴.
- 현재 문정권 이후 임명된 공기업 감사 49명 중 38명(81%)이 캠코더 인사에 해당할 만큼 낙하산 임명이 심각한 상황임, 빠른 제도 개선이 필요함.

국민의힘

제3부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성과

교육위원회

정경희 의원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불공정, 위선 교육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재명 지사 석사논문 표절 관련 조속한 조치 촉구

- 이재명 지사 가천대 석사논문 표절율 27%(by 카피킬러)
- 교육부(유은혜 장관)에 이재명 지사 논문에 대한 실질적 조치 요구
  → 유은혜 장관 이재명 지사 논문 표절 검증 절차 진행 답변
  → 교육부, 가천대에 관련 공문 발송(11월 2일까지 답변 요청)

부산대 공정위의 조O 봐주기 허위발표 비판 및 공정위원장 징계 요구

- 부산대 공정위, 조O 대학성적이 3위라는 허위사실 발표(24위 → 3위)
- 판결문에 명시된 사실관계도 틀린 공정위의 의도적 조작 의혹 제기
- 부산대 공정위원장을 직무태만과 학교의 위신을 손상케 한 사유로 징계 요청 → 부산대 총장, '검토하겠다' 답변
- 공정위의 단순 실수로 무마하는 부산대 총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 및 부산대 공정위에 대한 교육부 감사 촉구

법 위의 단체 전교조의 비리·불법 및 과도한 단체교섭 요구 지적

-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전교조의 교장가는 길'로 악용되고,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심각한 범죄행위까지 적발된 점을 지적. 해당제도의 폐지 또는 전면적 재검토 촉구
- 민노총 총파업에 맞춰 유치원생에게 강제로 노동인권교육을 시키고 위법적인 조퇴투쟁까지하는 전교조에 대한 교육부의 조사와 조치 촉구
- 교육부와 단체교섭 중인 전교조의 과도한 특혜요구 및 다수의 위법적 요구사항이 절대 단체교섭에 반영되지 않도록 촉구
  – 전교조의 서울 시내 800평 규모 사무실 요구 및 법령에 우선한 단체교섭 요구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 위반하는 정치편향 교사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 정치편향 교사들, 시험문제 통해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견 전파함에도 직무배제, 계약해지 등 솜방망이 처벌
- 정치편향 교육 근절 위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교사에 대해 무관용 중징계 또는 삼진아웃제 등 대책 마련 촉구

김병욱 의원

불공정, 특혜, 부정부패에 물든 文정부 교육계

특권과 반칙의 대명사, 조국 前 장관 변호하는 교육계

- 조국, 강의 한번 없이 무위도식하며 서울대로부터 5,600만원 월급받아
- 한O섭 교수의 조국자녀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
- 민변·법무검찰개혁위원 출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조국 자녀 부정입학에 따른 입학취소 미루지 말고 결정내려야
- 부산대 공정위원장의 조국 자녀 등수 허위발표에 대한 교육부 감사 필요
- '교육 부패 끝판왕 조국' 비호하는 부산교육감 발언, 부적절
- 조국 일가로부터 웅동학원을 환수하는 노력이 전무한 경남교육청
- 법치체계까지 부정하며 조국 옹호한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자격 없어

대한민국 교육 망치고 있는 전교조 카르텔

- 조희연 서울교육감,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들을 직권남용으로 사전 내정하여 특별채용한 의혹으로 공수처 1호 사건 피의자, 서울교육감 자격 없어
- 인천교육청, 전교조 출신을 교장으로 임명을 위해 문제 유출
- 전교조의 불법 '성과급 나눠먹기' 방관·동조하는 좌파 교육감들
- 개선되지 않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올해도 62.5% 전교조

공정한 교육, 기회의 평등

-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합격생 51.4% 수도권 출신
- 위기의 지거국, 부산대 합격생 83%, 경북대 합격생 86% 입학 포기...정부재정 지원 확대해야
- 지난 2년간 국립대병원 직원의 친인척 채용 560건에 달해
- '개천의 용' 없다…의대 새내기 80%가 금수저
- 교육 사각지대 내몰린 탈북청소년…학업중단율 최대 3배 육박
-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 2억원 혈세 낭비한 서울시교육청, 책임져야
- 최근 5년간 서울대 연구규정 위반 49건, 부당저자 사례 가장 많아

정찬민 의원

문재인 정부 교육실정과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실태 점검

코로나19로 인해 언어폭력 등의 아동 정서학대 1년새 15% 급증!

- 2020년 전년대비 신체·성학대 감소, 정서학대 14.6% 증가(아동학대 통계)
- 반면 2020년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35.5% 감소
- '정서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함. 또한 교육현장에서 아동학대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상담을 적극 진행해야 할 것을 지적

학부모 58%, "전국 학력평가 부활해야" (리얼미터 설문조사 의뢰 결과)

- 우리나라 연간 공교육비,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기초학력은 하락해.
-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평가를 등한시하는 교육당국의 정책에서 비롯됐다': 동의 58% / 미동의 15.8%
- '국가주도 전국단위 시험을 통한 학력진단': 동의 57.5% / 미동의 15.3%
- 학부모·교육계 의견 수렴해 국가주도전국단위 시험시행 전향적 검토 필요

문재인 정부 임용시험 번복 10건, 합격 불합격 바뀐 피해자 152명

- 이전 정부 교직원 임용시험 오류 피해자는 2명에 불과
- 실무자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 → 재발방지 위해 징계 수위 높여야.
- 담당 부서장과 기관장 책임지고 교원임용시험 공정성·신뢰성 제고해야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52%가 수도권 학생, 수도권 편중 방지 취지 역행!

- 서울지역 합격생 21%는 강남 3구 출신!
- 2021학년도 지역균형선발전형 수능최저학력 기준완화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고교 출신 합격자 비율 감소 → 지역 간 학력차 더 벌어진 것

사학연금, '1000억' 대우조선해양債 투자…144억6천만원 손실로 마무리

- 사학연금 미래 재정의 불안정 속 막대한 투자 손실에 대해 반성 필요

조경태 의원

공정과 정의가 사라진 교육계

상급기관으로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교육부

- 조O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과 관련하여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문(2020. 12. 23.)에는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각 24등에 해당하는 점수이다'라고 적시되었는데도, 부산대는 조O의 학부성적이 3등이었다고 거짓 발표(2021. 8. 24.)하였다가 이를 번복
- 2020년 교육부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서 선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감사원 감사 지적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사담당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고사하고 미국 한국교육원장으로 정상 재직 중
- 10개 국립대 교직원들이 증빙 서류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총 94억 8,700만 원에 달하는 학생지도비를 부정수령하였다가 적발
-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강행한 혐의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올라.
- 인천시 교육청, 내부형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유출비리 혐의로 현 교육감의 보좌관 출신 1명은 구속, 나머지 공범 5명은 불구속 기소. 징역 6개월~4년까지 구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는 현직 유지 중.
- 공식절차없이 부정하게 내부공모된 인천대 산학협력단장은 스스로 고용기간까지 늘리는 '셀프 재고용'을 통해 총 4년의 계약기간을 마치고 정상 퇴직함. 2021년 2월경 교육부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인천대는 산학협력단장이 퇴직한 2021년 9월경까지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음. 교육부 또한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대상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종합감사 종료 후 약 150여 일이 경과된 뒤 감사결과를 인천대에 통보함. (총 52건의 감사 적발)
- 경북대에서는 총 2건의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됨. 이로 인해 oo학과의 신임 교수 채용은 전면 취소되고, △△학과의 신임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도 없이 정식 교수로 임명을 강행함.

국민의힘

제3부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성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의원

정부·여당 옹호하는 팩트체크 사업, KBS 편파 보도 등 불공정 文정부 국정감사

거대기업으로 성장한 네이버, 카카오, 쿠팡 3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 필요성 강조

- 높은 수수료와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속출, 생존 위협
- 새로운 먹거리를 찾거나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미국, 중국 등 거대 플랫폼 기업처럼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 마련하도록 촉구

야당 흠집내기, 정부·여당 옹호로 일관된 팩트체크 사업 지적

- 27억이 넘는 예산이 책정된 팩트체크 사업의 검증 내역은 야당 정치인 발언 흠집내기에 집중, 정부·여당에 대한 검증은 해명과 옹호로 일색
- 정치 편향적인 단체 '빠띠'의 대표자에게 사업을 맡긴 결과로서, 내년 예산 전액 삭감 및 책임자 징계 요구

매몰비용 7천억 원 가까이 투입된 신한울 3, 4호기 재개 추진 요구

-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 100만 돌파
- 신한울 폐쇄에 7천억 원의 매몰 비용도 모자라서 사업 철회로 인한 보상금을 국민들 전기요금에 3.7%를 떼어 충당하는 상황을 지적

KBS 편파 불공정 보도 지적

- KBS <뉴스9> 작년 8.15 광화문 집회 보도 46건, 올해 7.3 민노총 집회 보도 단 3건이었던 것을 지적
- KBS 수신료 인상안이 외면받는 것은 KBS의 지속적인 편파·불공정 보도 행태로 인한 것.

대장동 의혹에 MBC 기자가 연류, 해당 기자 퇴사 과정에 MBC 비호 의혹 지적

- MBC 기자가 대장동 의혹과 유사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계사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겸직금지 의무 위반 사실 지적
- MBC가 관련 기자의 퇴사에 적극 비호하며 묵인하고 있는 것을 제기

김영식 의원

왜곡과 비리, 의혹만 남은 문재인정부의 과학기술분야

백현동 비리와 언론 장악 비판

- 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매각 이후 성남시에 24회 대리공문 발송 배경 및 감사원 처분 징계자 봐주기 의혹 집중 추궁
- MBC 취재 편향성 및 정O내 기자(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O 변호사 부인)의 도망퇴직 및 취업규칙 위반(겸업금지)에 대한 MBC의 無징계 지적
- 정연주 방심위원장 종편 재갈물리기와 방통위의 북한 홍보 가점 비판
- KBS 진미위 부당해고 중노위 재심 결과에 불복·행정소송 제기한 양승동 사장 비판
- 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 무효 확정 및 대통령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요구
- 팩트체크넷 편향성(국가채무 400조원은 가짜뉴스 판정) 및 예산지원 불가 강조

문재인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 (일자리, 탈원전, 코드인사)

- 디지털뉴딜(경기침체·일자리문제 극복 국가프로젝트)=대국민 사기극 증명→ 디지털댐 구축 사업 참여자 중 72.5% 저임금 단기알바, 전문인력 양성 無
- 원전 부지 외부 유출 미확인 보도자료 배포하여 공포 조장한 원안위 비판
- 원안위의 신규원전(신한울1호기) 운영허가 발목잡기 비판 및 재발방지 대책 요구
- 가동원전의 수명연장 없이 탄소배출 목표 달성 불가능 확인
- 탈원전에 발목잡힌 SMR·파이로 프로세싱 개발지원 지지부진 비판
- 원자력연구원의 탈원전 단체(한병섭, 이정윤) 수당 몰아주기 행태 지적
- 나노기술원의 비상임이사 2명 코드인사 및 공익신고자 보복성 해임 지적

넷플릭스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태 지적

- 해외사업자 국내 대리인 편법지정 및 뉴스 콘텐츠 사용료 미지급 지적
- 애플의 동의의결 사과와 법 무시한 보험상품 부가세 징수 문제 비판
- 넷플릭스 탈세, 무임승차, 약탈적 이익배분, 인터넷망 무임승차 문제 지적
- 플랫폼 관련 주무부처를 과기부로 지정하고 진흥과 규제 조화 강조
- 플랫폼의 언론장악 지적 및 포털 뉴스 서비스 중단 촉구
- 불법보조금으로 소수만 혜택을 받는 단통법 폐지 필요성 강조
- 알뜰폰 시장 이동통신 자회사 시장 독식 문제 지적

정희용 의원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정책·현안 국감 실시

(카카오) 거대 플랫폼 독점 서비스에 따른 택시이용자 보호 방안과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 카카오 대리 AI추천요금의 상한제 도입과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 인하 방안 마련을 통한 생활비 인하 촉구

- **(카카오택시)**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택시가 아닌 블루를 불러야 배차가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
- **(카카오대리)** 카카오대리 호출 시 낮은 요금부터 시작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콜이 잡히지 않는 경우 AI 추천요금제를 안내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은 높은 비용으로 대리를 사용하고 있어 요금 상한제 도입을 촉구
- **(카카오 선물하기)** 카카오톡 선물하기 시스템의 서버 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해도 환불 시 상품 금액의 10% 수수료가 과도함을 지적하고 인하할 것을 촉구

DIY (Do it yourself) 요금제 신설을 통한 국민통신비 인하 추진 촉구

- 2021년 8월말 기준으로 5G 가입자가 1,780만명에 달하고 있어, 사업자 중심의 요금제도가 아닌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임.
- 이에 이통3사에 맞춤형 요금제를 신설할 것을 제안, 본인의 사용패턴에 맞춰 음성과 데이터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촉구

(정책국감) 세계적 흐름에 맞는 국가 과학기술 전략 수립 필요성 강조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 점검

- **(현안국감)** 월성 원전 삼중수소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 공영방송의 기울어진 편파성 보도에 대한 지적 및 개선방안 마련 촉구
- **(지역국감)**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대구·경북 국가 R&D사업 확대 필요성, 원전 운영 허가 지연에 따른 경북 지방세수 감소 문제점, 지역방송 지원과 농어촌 5G 기지국 설치 확대 촉구
- 내부 고발자 색출을 위해 직원의 휴대폰을 포렌식까지 시킨 NIA, 올림픽 개막식 중계방송 논란으로 문책당한 간부를 자회사 임원으로 발령한 MBC 등 공공기관 비리 지적

주호영 의원

문재인 정부 4년, 공염불이 된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 내 캠코더 인사 2018년 대비 2배 증가 지적
- 문재인 대통령 가계통신비 8대 공약 4년간 부실이행 지적
- 5G 28Ghz 구축은 기술적, 비용적 한계로 불가능, 대국민 사기극 지적
- 화웨이 5G통신장비 백도어 검증 없이 서둘러 보안 공백 초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규제기관의 정치적 후견성 지적, 공정성을 담보할 의결구조 주문
- 성인물, 테러, 범죄 등 컨텐츠 추천하는 유튜브 알고리즘 개선 주문 (구글코리아 증인)
- 뉴미디어 상의 북한 이적표현물 방치, TF구성 등 적극 대응 주문

원자력안전위원회

-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 정권 입김 개입 여부 추궁
- 세계적 안전성에도 국내에서는 위험성 논란에 휩싸이는 이유 추궁
- 원전 없는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과 무계획성 추궁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 KBS 정권 우호 보도 배경 추궁, 방송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성 강조
- KBS 수신료 방만 사용 지적, 수신료 인상 전 KBS 경영 개선 주문

방송문화진흥회, 방송광고진흥공사

- 권태선 이사장 친여 성향 이력으로 정치편향성 논란 초래, 공정성 주문
- MBC 야당 비판 편향 보도,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 방안 마련 촉구

허은아 의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미흡, 정치 편향적 가짜뉴스 규정, 불공정 인사 지적

원안위원장이 답변 못한 월성원전 삼중수소 가짜뉴스, 한수원 사장 판단은?

- 국정홍보채널 KTV, "월성원전 인근 주민 삼중수소 하루 1g씩 검출" 한수원 "월성 전체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0.38g 수준" 원안위 "하루 1g이면 치사량"
- 지난 2월 업무보고 당시 사회적 혼란 야기 '허위조작정보'에도 답변 못한 원안위원장
- △한수원 사장 답변 "사실일 가능성 없다" 일축 △원안위원장 답변 "허위 사실 맞다" 인정
- 이어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가짜뉴스 맞다" 답변까지 확보

문 정부 인사들, 직책 활용한 가족 혜택 만연, NIA 이원태 원장도 예외 아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위원시절, 과제 자문회의 배우자 17차례 참여, 평가비 수령 → 2020 국조실 적발에도 '몰랐다' 변명
- 인터넷 진흥, 정보보호 관장하는 NIA와 상관없는 학력에, 본인 분야 보고서도 오류로 '견책'
- 전문성 부족으로 '유영민 비서실장 입김 작용' 구설수

'20년도부터 지적해온 `디지털성범죄` 대응 미흡, 국제공조 강화법의 구체적 계획 마련 촉구

- KT대리점, 반납받은 휴대폰 사용자의 `나체사진` 유출·유포… 휴대폰 반납시 개인정보 보호절차 질문에 방통위·과기부·개보위 "소관 아님"
- 아동대상 디지털성착취물 603건 → 2623건으로 4배 이상 급증 "금쪽같은 내새끼" 사례 : 채널A·다음의 '아동 성적대상화' 여전히 심각
- 방심위 국제공조 강화법 통과 이후 사실상 추진사항 전무(全無)
- KT 이철규 부사장의 '본사 차원 사과' 답변 이끌어내고, 방심위로부터 "연내 국제공조단 정식출범" 답변 확보

홍석준 의원

비현실적인 탄소중립·탈원전 정책과 낙하산 인사는 빠르게, 시급한 OTT·콘텐츠 생태계 규정 검토는 느리게 하는 文정권

비현실적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신재생에너지 목표 지적

- 정부 시나리오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안 56.6%, 2안 58.8%, 3안 70.8%
- 우리나라 환경 여건상 신재생에너지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 각 부처는 현재 엉터리 탄소중립 계획에 따라 행동 중으로 재검토 필요

초라한 文정부 원전 해외수주 실적, 탈원전 정책 고수하면 수주 불가 비판

- 2013년부터 러시아 36기, 중국 12기, 일본 4기, 프랑스 10기 수주
- 한국은 2009년 UAE 원전 수출 이후, 유지·운영 보수로 140억 실적이 전부
- 탈원전 정책 폐기해 파괴된 원전 생태계 복구해야 해외수주 경쟁력 재확보 가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임원 66% 낙하산 인사 질타

- 사장, 감사, 본부장 4명 포함 총 6명의 임원 중 내부 출신 전문가 2명
- 비상임이사 5명 중 3명도 진보성향의 기자 및 교수
- 2016년부터 적자 추세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평균 C등급

대장동 사건의 화천대유와 비슷한 오징어 게임 수익 배분 개선 촉구

- K- 콘텐츠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으나 그 수익은 해외 OTT가 독점
- 거대 해외자본 OTT의 콘텐츠 제작 하청으로 전락 우려가 큼.
- 과기부와 방통위의 통합적인 OTT 관련 규정 마련 시급

'선공급 후계약' 불공정 콘텐츠 거래 근절하고 '선계약 후공급' 제도화 강조

- 선공급 후계약 관행은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80%인 IPTV의 절대적 우위
- '18.2월 발표한 '유료방송시장 채널 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 유명무실
- K- 콘텐츠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선공급 후계약'으로 건전한 콘텐츠 거래 생태계 조성 필요

황보승희 의원

1. 文대통령 추진 규제샌드박스 선정업체 30% 폐업 위기
2.'가짜 5G'홍보로 가계통신비부담 늘어... 사과 없이 6G 홍보
3. 4.7재보궐 '불공정 보도'앞장선 KBS가 대선 '공정 보도'약속?
4. 한수원의 원전 경제성 평가지침 용역 부실 의혹

규제샌드박스, 과기부 시행 첫날 선정된 업체 9곳 중 5곳 사실상 폐업

- 2019년 1월, 文대통령이 규제샌드박스 시행을 적극 홍보. 그러나 첫날 접수된 9건의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중 5곳이 폐업 수순(전체 162건의 과기부 소관 샌드박스 중 30%인 46개 기업이 심의위를 통과 못했거나 폐업 위기)
- 신청업체들은 사실상 정부의 홍보수단으로 전락, 실질적인 대책 마련 지적

'가짜 5G'홍보로 가계통신비부담 늘어도 사과 없이 6G 홍보하는 정부

- 문재인 정부는 LTE보다 20배 빠른 5G서비스를 세계 최초 실시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상은 20배의 1/5에 불과한 '가짜 5G' 서비스
-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28GHz 고대역망이 설치되어하나 설치율은 고작 0.3%에 불과. 대신 설치된 전국망은 LTE보다 4배 정도 빠른 3.5GHz 저역대 기지국
- 이 때문에 국내 단말기 제작사도 5G폰에 고대역 칩셋을 아예 탑재하지 않음.
- 20배 빠르다는 정부의 홍보를 믿고 국민은 LTE보다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온 것임. 5G 속도를 정직하게 홍보했으면 가계통신비 부담이 훨씬 낮출 수 있었음.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지난 5월 文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성과로 5G보다 '50배 빠른 6G' 계획을 발표함.
- 정부는 5G 실태를 알리고, 가정통신비 부담 완화에 앞장서길 촉구

4.7재보궐 '불공정 보도'앞장선 KBS가 대선 '공정 보도'약속??

- ▲오세훈 '생태탕' 의혹 첫보도 ▲오 후보는 의혹 위주 보도, 박영선 후보는 공약 위주 보도 ▲부산시장 선거에서 박형준 후보 의혹만 집중 보도 ▲야당에 불리한 여론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통보받고 사과방송함.
- 그런 KBS가 내년 대선 공정 보도 약속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한수원의 원전경제성평가지침 용역 부실 의혹

-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계기로 '원전경제성평가 지침 개발 용역' 실시
- 그러나 중간회의 생략, 중간보고서 미제출 등 '엉터리 용역' 확인
- 용역 결과를 국회 과방위에 보고하고 검증받을 것을 지적함.

제3부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성과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의원

北 지속도발에도 '종전선언'만 집착하는 정신나간 문재인 정부

정권유지에 눈 먼 '대북 굴종외교' 중단 촉구!

-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언급없이 '종전선언'만 제안한 문재인 정부의 국민·국제사회 기만행위 규탄
-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 사전이행 조건(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훈련 폐지, 핵보유국 인정 등)에 대한 우려 표명 및 文정부의 대응 점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의심스러운 대북관 해명 촉구!

- 현 정권 및 여당 대선 캠프 내 간첩 활동 의혹 제기
- 청주간첩단의 문재인 대선캠프 활동 사실에 대한 대통령의 해명 요구
- 청주간첩단이 북한에 통신문을 보내 "이재명에 대한 대중결집 도움"을 요청한 사실, 이재명 대선캠프 내 종북 세력 활동 의혹, '미군은 점령군' 등 이재명 후보의 삐뚤어진 역사관 등 문제 제기

북한 도발에 침묵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에도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도발' 표현조차 쓰지 않는 정부의 안이한 안보의식 지적
- 이인영 장관의 답변을 통해 文정부가 호들갑을 떨며 홍보했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단순 실무적 기능'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되며 사실상 무용지물에 불과한 사실을 밝힘.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과 교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펜데믹 상황 가운데 소외된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백신 지원 방안 모색
-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재외동포를 위해 경찰주재관 확충을 요구

김기현 의원

무능력의 정점, '장관 리스크' 커진 文정권의 실정을 지적하였습니다

'정의용 리스크' 실체를 밝히고, 사퇴 및 경질 필요성 강조

- 정의용 장관,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인식을 의심하게 하는 발언을 반복해 논란 자초, 단순 말실수 아닌 외교관계 흔드는 위험한 발언
- 그간의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정의용 리스크' 설명

연 1천억가량 탈북민 정착지원 비용에도 불구, 탈북민의 잇따른 자살 및 유명무실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등 말뿐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책에 대해 지적

- 지난 3년간 탈북민-일반 국민 고용률 격차 12배, 실업률 격차 2배 증가, 자살사례 잇따라 발생했으나, 취업보호담당관의 1인당 담당 탈북민 수는 469.1명에 불과. 통일부의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탈북민 보호 시스템 마련 촉구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전체회의 대부분 사무관 대리참석·서면회의로 진행. 포장만 범정부적 기구로 전락한 유명무실한 협의체의 실체를 지적

연이은 北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에도 文정부의 그릇된 대북정책관 지적

- 북한 원자로 재가동은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임에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외교부·통일부 장관에 대한 질책 및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
-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北 미사일을 '도발'에서 '저강도 긴장 고조'로 후퇴, 정의 없는 종전선언 타령 등 북한 눈치보기에 몰두해 위협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안이함을 질책
-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협상의 기본조차 없는 발상에 근거한 것임을 지적

중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에 의해 우리나라가 입은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일관되고 명확한 외교 메시지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

- 중국의 문화 ·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못하는 굴욕외교,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오락가락 외교 보이는 文정부를 강도높게 비판
- 우리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

김태호 의원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북한 인권 및 납북자·국군포로 외면 등 文정부의 잘못된 외교안보정책을 질타했습니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모래 위에 쌓는 성

- 한미연합훈련 폐지, 전략자산 전개 영구중단, 주한미군 철수, 핵 보유국 인정 등 요구할 가능성 지적
-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
- 종전선언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힘.

자체 핵무장 검토 필요성

- 미국 정치학계에서 제안된 한국 자체 핵무장 용인 필요성 소개
-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가능 조항(10조) 확인
- 자체 핵무장 검토에 대한 정부(통일부)의 입장 청취

북한 인권 및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외면

- 유엔 대북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북한인권재단 표류, 북한인권대사 공석 등 북한인권 문제 외면 지적
- 남북 대화 과정에서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문제가 제대로 거론도 안 되는 문제점 지적
- 향후 남북대화시 북한 인권,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문제 제기할 것을 요구함.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해수부 공무원 피살에 사실상 무대응

- 여론 들끓을 때 '성명' 발표가 유일한 대응
- 북한이 사과도 없고, 정부는 사과 요구도 하지 않은 점 지적
- 북한 도발 시에는 강력한 대응 요구

박 진 의원

문재인 정권 5년 초라한 외교안보 성적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에 매달려서는 안된다

외교분야 국정과제 '주변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실패

- 신뢰가 손상된 한미동맹, 중국에 저자세 외교 일관, 일본과의 대화단절, 러시아와의 실질적 협력 부족

북한의 비핵화 없이 임기 말 '종전선언'에만 매달리는 것은 '위험한 도박'

- 외교는 뒷전에 두고 종전선언에 올인하는 외교부의 문제점 지적
- 유엔대표부, 북한 비핵화 진전없는 종전선언의 국제 지지 한계 지적
- 종전선언에 대한 워싱턴 조야 인사들의 우려 전달

눈 앞에 펼쳐진 인도태평양 시대, 국제질서 급변하는데 준비 안된 외교부

- 쿼드(Quad), 오커스(AUKUS),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등 인도태평양 역내 민주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 중요성 강조

경제안보 중요성 부각 국가적 사활을 걸고 대비 촉구

- 미중 글로벌 패권경쟁 속 국익 창출과 공급망 변화 대처를 위한 경제통상 분야 외교 중요성 강조

주중대사관의 소극적인 백신 대처로 중국 교민 백신 접종 혼선 초래

일본 기시다 총리 취임,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협력 중요성 강조

- 위드코로나 시대 먼저 도입한 일본 사례 연구를 통한 방역대책 수립 촉구

이인영 장관이 유럽을 방문해 종전선언을 홍보했지만 돌아오는 건 원칙과 비판뿐이라는 것을 강조

'통일부 폐지론' 부상은 다름 아닌 文정부 통일부가 한 일이 없기 때문

- 통일부 사업비 예산의 70%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예산과 직원 인건비
- 통일부 폐지론을 안이하게 바라보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처할 것을 촉구

정진석 의원

북한 눈치보기로 대한민국 안보위기 자초한 文정부

도발을 도발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정부

- 北 김여정이 "대통령이 기자들 따위나 함부로 쓰는 '도발'이라는 말을 망탕 따라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시한다"는 입장 밝힌 이후, 文정부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도발'이라는 표현이 모조리 사라져
- 김여정 말 한마디에 ▲대북전단금지법 단독처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연철 통일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 北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질타

文정부의 종전선언은 북한 '꽃놀이패'

- 북한의 비핵화 실행이 없는 상황에서 文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은 ▲국제사회 대북제재 약화 ▲주한미군 주둔 명분을 약화시키고 ▲실패하면 한미동맹 균열 등의 결과를 초래
-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은 北 '꽃놀이패'가 될 수밖에 없음.
-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 차기 정부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북한의 내정간섭에도 침묵하는 통일부

- 북한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것'이라고 주장
- 북한이 막가파식 막말을 쏟아내도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해 말 한 마디 못하는 한심한 정부라고 지적

장하성 주중대사, 지난 국감에 이어 이번 국감에서도 '위증'

- 장 대사는 지난 국감 교내 연구비 법인카드로 강남 유흥업소에서 수 백만원을 쓴 것에 대해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이라고 증언
- 교육부 감사 처분서에 따르면, <별도 룸에서 여성 종업원이 손님 테이블에 착석하여 술 접대 등을 하고 손님은 가무를 즐길 수 있는 실제 유흥업소다>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음.
- 장 대사의 '위증'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 요청

조태용 의원

대한민국 외교·안보에 '리셋'이 필요하다

종전선언 관련 북한의 선결 조건에 대한 정부의 수용 불가 입장 확인

- 북한이 제시한 선결 조건은, 대한민국 안보를 철저하게 훼손하는 내용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문 정부의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추진 강력 규탄

북한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대북정책 비판

- 북한의 미사일 도발마저 도발이라 못하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굴욕적 북한 바라기를 넘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강하게 비판

최악의 한일관계 더 악화시킨 주일대사의 부적절한 처신 지적

- 취임 1년이 되도록 일본 총리는 고사하고 외무상조차 만나지 못한 대사의 무능과 북방영토 관련 인식 등 주일대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시정 촉구

기울어진 한중관계 정상화 및 국익에 입각한 대중 외교 촉구

- 사드3불 겁박·불평등한 격리면제 조치·불법조업 방관 등 중국의 일방적·고압적 태도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정부의 사대 대중외교 및 저자세 외교 철회 주문

탈원전 독주 및 무관심으로 인한 해외 원전 수주 경쟁력 약화 우려 제기

- 탈원전 강행과 원전수출 관련 대통령·장관의 무관심으로 재외공관의 해외원전수주 활동이 위축고 있음을 지적하고 원전 생태계 고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

서해공무원 살해·소훼 1년,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의 직무 유기 비판

- 북한 눈치 보기로 사망판정도 내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유가족을 월북가족으로 내몬 문정부의 파렴치를 질타하고 정부차원의 진상규명 대책 마련 및 이행 촉구

국군포로 외면하고 경문협 옹호하는 통일부의 부적절한 처신 질타

- 법원과 국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통일부의 비상식적 태도를 비판하고 국군포로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

이외,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실패, 위안부 합의와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원칙없는 입장 등 오락가락 대일정책, 코이카 해외코디네이터 채용 비리, 이념편향적 통일교육 등 문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총체적 실패 지적

지성호 의원

외무공무원 공직기강 해이와 탈북민 정착지원 문제

증가하는 외무공무원 공직기강 해이 사례의 원인 분석 결과, 외교부 감찰 조직의 실효성, 전문성 문제 심각

- 외교부 직원 징계 건수, 지난 4년간 74건으로 前정부 대비 2배 이상 증가
- 부처 내(內) 감찰 부서 인력은 정부 18개 행정부 중 가장 적고(7명), 소속 직원 70%가 감찰 관련 경력 全無, 평균 재직기간은 1년도 안 되는 0.73년

탈북민 정착지원금 지난 `00년부터 `20년까지 130만원 인상됨.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52.2%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임.

- '20년 기준 취업가능한 탈북민 1인세대가 주거지원금, 취업장려금을 제외하면 8백만원이 전부인데 이마저도 하나원 수료 후 일시금으로 5백만원만 지급되어 초기정착하는 탈북민이 브로커 비용을 지불하면 남는 돈이 없어 거주지 전입 후 기초적인 집기류도 살 수 없음.
- 이에 탈북민 정착지원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하여 초기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제도로 개편해야 함.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탈북민 채용기업에 세제혜택을 줄 수 있음에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약 1950개의 기업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함.

- 통일부는 조세당국이 세금감면 계획을 세우지 못하였다 하지만 탈북민 정착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할 변명이 못됨.
- 이에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통일부가 재정당국을 적극 설득하여 관련법이 통과되어 추후 탈북민 채용기업이 세금감면을 받아 탈북민 고용창출을 늘리는 효과로 어어져야 함.

태영호 의원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외교정책 대한 현실적 평가와 대안제시

외교부

- Assertive Diplomacy의 개념을 이해 못 한 채 중국의 공세 외교를 두둔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 (대한민국의 국익이 아니라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장관 질타)
- 미국, 중국 등 핵보유국들에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 핵무기에 대한 선차적 주권 우리에게 있다고 당당히 밝혀야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우리의 통치권이 수립될 경우 북한 핵무기에 대한 선차적 접근, 통제, 관리 등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지금부터 강하게 전달해야)
-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내용 임기 초와 임기 말이 달라, 이에 따라 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의 입장에서도 미묘한 차이 생겨
  - 임기 초인 2018년 종전선언 언급 시 종전선언 앞에 있던 비핵화가 올해에는 종전선언 뒤로 후퇴하며 자리를 잡았다며 임기초 선 비핵화 조치 후 종전선언이 임기 말에 와서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로 바뀐 것
- 외교부, 탈레반 장악 아프간에 3,800억원 지원
  - 외교부는 '대(對) 아프간 경제·사회분야 지원 강화' 사업에 내년도 예산 183억6500만원을 책정. 해당 사업은 총 예산 3876억원의 대형사업으로 아프간에 무상지원. 탈레반 정권에 대해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세금 수천억원을 들여 무상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 필요

통일부

- 6.25 참전용사를 납북자로 방치한 통일부
  - 1952년 정부 발간 납북자 82,959명 중 실제 납북자가 1/10에 불과하고, 국군이 더 많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2012년 전문가 예비조사 결론에 따른 권고를 무시한 통일부 담당자 징계 요구 및 재조사 요청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해야
  - 지역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는 하나센터에서 개인정보 보안이 허술한 점과, 실태조사 진행 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 및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적

산하기관

- 재외동포재단 임원 억대연봉, 신입은 최저임금 수준 문제 제기
- 코이카, 해외봉사 나가 성비위 추태, 4년간 18명
- 민주평통,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인권 관련 사업 시행 0건

국민의힘

제3부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성과

국방위원회

성일종 의원

군 장병 복지 소홀한 국방부 반성해야!

이재명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군인공제회 막대한 손실 발생

- 지난 2005년, 군인공제회는 성남 신흥동 제1공단 부지 주상복합 건설사업에 PF로 2,400억원 투자. 그러나 2010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제1공단 부지를 전면 공원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뒤 2012년 개발구역지정을 해제함. 이에 군인공제회는 당시 PF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1만5,000평 신흥동 부지를 보유
- 이로 인해 현재까지 군인공제회의 미회수금 2,343억원 + 기회손실 1,675억원 = 4,018억원 손해. 이 돈은 모두 군인들의 피땀 어린 월급에서 나간 돈임.
- 이재명 전 성남시장 때문에 군인공제회 회원 수 약 17만 5천여명이 1인당 약 236만원 정도의 손해를 본 것

90% 할인율 군납 화장품, 업체들 농간에 속고 있는 국군복지단

- 국군복지단은 PX에 납품하고자 하는 화장품 업체들로 하여금 대형마트 4곳에서 자사의 제품을 구매한 영수증을 끊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지난해 낙찰된 업체들 중 90%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한 중소·신생업체들이 제출한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모든 업체들이 동일한 몇 개의 마트에서 끊은 영수증을 제출
- 업체들이 브로커 업체와 결탁해 영수증을 조작, PX 납품에 성공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개선책을 요구

현역병사 휴대전화 하루에 3시간 쓰는데, 요금제는 더 비싸

-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 평일 오후 6시~9시, 주말 오전 8시 30분~저녁 9시
- 휴대폰 사용시간은 제한적인데 장병전용 현역병 요금제보다 온라인 전용 요금제가 더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음을 지적
- 11월 3일, 통신3사 "현역병사 통신 요금 20% 할인" 도입

강대식 의원

북한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 아닌 '위협'으로 규정한 국방부장관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현황

- 2021.09.15 평남 양덕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 2021.09.28 자강도에서 극초음속미사일 1발 발사
- 2021.09.30 신형 지대공미사일 발사
- 2021.10.19 함남 신포에서 신형 SLBM 1발 발사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 '도발'로 규정

- **2017.07.28. 국방부장관,** "한반도 안전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등 중대한 도발 행위"
- **2021.09.15. NSC,**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깊은 우려 표명"
- **2021.09.15. 대통령,** "우리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

국방부장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 아닌 '위협'으로 규정

- **10.21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대식 의원** "이번에 발사한 SLBM과 최근에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등 이런 미사일들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
- **서욱 국방부장관,** "저희가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북한의 위협으로 보여짐.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공·영토·영해에,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
- 이번 국방부장관으로 발언, 문재인 정권 말기 북한과의 가시적인 성과에 매몰되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이 정부의 대북 저자세 행보는 '국가안보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무능한 정권임을 국민들께 각인

정부의 입장 변화 요인

- **2021.9.25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무기개발을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지 말라"

평가 및 후속조치

- 김여정의 하명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금기어로 삼음, 향후 상임위에서 거듭된 확인으로 국방부의 입장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증명하고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허구임을 확인

신원식 의원

文정부 출범이후 무너진 국방·안보 태세와 공정

경항모 사업 편법·졸속 추진 지적

- 방사청, '대형수송함- Ⅱ 선행연구' 결과 → '경항모 선행연구'로 둔갑
- KIDA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제기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계획서 수정, 사업추진기본전략 재의결 등 절차를 생략하는 등 편법적이고, 졸속으로 사업 추진 ⇨ 감사원 감사 필요성 강력 제기

국방대학교 특정직 교수 연구보조수당 나눠먹기 등 모럴헤저드 심각성 지적

- 강의·연구·학생지도 등 실적평가 없이 사전 연구계획서를 근거로 수당의 90%(약 1,500만원) 先지급 [실적 '0'인 교수도 매년 증가 추세 / 1명('18년) → 6명('19년) → 8명('20년)]
- 화려한 계획서로 수당만 받고 일하지 않는 교수,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는 국방대
- 文정부가 강조한 '땀흘려 일한만큼 보상받는 나라', '공정 국가'인지 지적
  ⇨ 국방부 자체 감사 및 先지급 수당 환수 등 특단 조치 촉구

군 사법제도 개혁(군사법원법 개정) 문제점 지적

- 군검사 1인당 연평균 처리 사건 수는 52.3건으로 민간 검사의 25.9%, 군판사 1인당 연평균 처리 재판 건수는 114.5건으로 민간의 19.5%에 불과함. 이런 상황에서 장군 1명 대령 5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국방개혁 2.0'에 따른 장성 정원 감축에 위배됨.(법원행정처 차장, 민간 법관 20명으로 군 사건의 95%를 처리가능 언급)
- 전·평시 군사경찰 임무를 고려해 국방조사본부장의 하향된 계급 조정 필요성 강조

공군, 9.19군사합의 이후 훈련 반토막, F- 35 스텔스 전투기 기관포 실탄 '0' 지적

- 9.19 군사합의 이후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대화력전훈련, 근접항공지원 훈련 각각 49.2%, 44.1% 감소
- F- 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시 기관포 실탄 없이 교육훈련탄(적기 공격 불가)만 도입
- 도입한 교육훈련탄(5.5만여발) 마저도 사격훈련 '0'
- 기관포 실탄의 조속한 구매 및 교육훈련 실시 강조

文정부 출범 이후 해군 사격훈련 횟수 감소 지적

- 해군 함포탄(함정발사 미사일 포함) 교육훈련탄 사용률 96.1%('16년)→94.5%('17년)→93.1%('18년) →91.4%('19년)→87.2%('20년)로 급감
- 북한 SLBM 발사 및 중국의 서해공정에 해군의 기민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도 文정부의 對北·對中 굴종쇼에 해군이 해상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소임을 다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

조명희 의원

총체적 난국 국방우주·사이버·안보 시스템, 文 정부 국방무능 질타, 과학적 정보 기반 합리적 대안 제시

文 정부의 열악한 국방우주 시스템, 전문가로서 국방우주 시스템 개선 촉구

- 국민혈세 2조 5,873억 원이 들어가는 425위성사업과 초소형위성체계사업에서 초소형위성에 대한 성능 검증도 하지 않은 군의 업무태만 지적 → 관련 성능 검증과 재검토 지시 및 국방부의 KPS 적극참여와 첩보위성 개발의 중요성 강조
- 군 전용 정찰위성의 핵심 부품이 수입산으로 부품에 문제 발생 시 제때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 → 적시 대응 위한 부품 국산화 방안 마련 촉구
- 현장 정보가 구현된 디지털트윈 軍 훈련 시뮬레이션을 도입한 미국에 비해 우리군은 현장성이 확연히 낮은 수준임을 질타 → 한미연합훈련 필요성 강조
- 국방부의 우주 전담 부서 인력 및 각 사관학교 우주 관련 교수진이 매우 부족한 실태 지적 → 우주전담 조직 확충하고 우주전문인력 양성 촉구

軍 사이버 보안 및 北 드론 대응 장비에 구멍! 안일한 안보의식 지적

-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사이버인력 중 79%가 초·중급 수준이고 전국 20여개 이상의 정보보호학과가 있음에도 인력양성에 전연하지 않음을 질타 → 더 많은 대학과 MOU를 맺는 등 사이버 전문 인력 육성 채널 다양화 방안 제시
- 테러 관련 신고 건수 2,885건(드론 1,114건)에도 北 드론에 대응할 주요장비가 육군제2작전사령부에 全無함 지적 및 화력장비 93%, 해안감시레이더 86% 등 장비 노후화 질타 → 관련 장비 확보하여 드론 위협 대비 및 노후장비 교체 지시

국·공유지 무단점유 방치 지적 및 軍 기강 해이 심각성 비판

- 국방부 '무단 점유 부지' 38만㎡를 방치한 직무유기 질타 및 보안특례업체도 아닌 기업에 외주를 주는 LX와 GIS 관련 MOU를 맺어 군 기밀 시설 정보 노출 우려 지적 → 무단점유 현황 파악 및 근절 대책, LX MOU 보안 대책 마련 지시
- 매년 군사기밀이 유출되고 휴대폰을 이용한 성범죄·불법 도박과 같은 범죄가 증가하는 등 군 기강 해이 지적 → 무너진 군 기강을 바로 세우도록 촉구

부실한 軍 의료체계 및 미흡한 장병 안전관리 수준 지적

- 장기 군의관 비율은 7% 수준이고 산부인과 전공 군의관이 안과에 배치되는 등 부실한 軍 의료체계 지적 → 빈틈없는 군 보건 대책 마련 지시
- 지뢰 제거 작전 중 사고로 인해 최근 10년간 우리군 사상자가 19명 발생한 사실을 질타 →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철저한 대책 마련 촉구

5.18 · 군사망사고 규명위, 방만한 예산 운영 및 친여 인사 일감 몰아주기 지적

- 업무추진비의 약 60%가 회식 등에 집행되고 연구용역 수행자 다수가 친여 인사임을 지적 →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른 엄격한 예산집행과 재발 방지 대책 요구

보도기사 총 511건 · 단독 61건, 전방위적 문제 지적 및 합리적 대안 제시(21.8.26.~21.11.10.)

하태경 의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부 감사

국방과학연구소 AESA 레이더 모듈 시험중 화재가 있었나?

- **연구소장** △ 실제로 테스트 중 모듈 일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대통령이 참석했던 시험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건 아님.

한미연합훈련 연기 이후 축소 이유는 북한 아니지않나? 위드코로나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실시해야하지 않나? 그리고 위드코로나 반영된 상황에 맞는 훈련 계획이 마련되어있나?

- **장관** △ 순전히 축소 이유는 코로나라는 답변을 받아냄.
- **공군총장** △ 12월에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예정되어있음.
- **장관** △ 그렇게 시행 할 예정임.

도산안창호함이 북한에 해킹 당한 거 국방부는 파악하고있나?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중국산 CCTV를 국산화 시킨 것에 대한 국방부 감사결과는 경찰 수사와 달리해

- **장관** △ 안창호함이 해킹 당한 건 수사하고 조사 중인 것만 파악 중
- **장관** △ 경찰 수사와 결과가 달리하는 건 감사관실에서 볼 수 있는 영역으로만 감사했음.

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안 실제로 진행중인가? 육군은 왜 지난 번에 지적당한 침입 후 10초 뒤에 울리는 CCTV를 왜 도입하나?

- **장관** △ 장병처우개선을 위해 진료권 보장을 하는 제도 개선방안이 초안은 나왔으나 보류하고 있었음. 연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
- **방위사업청장** △ '바보CCTV' (침입 후 10초 후 경보가 울림) 사업도입 의 KISA의 기준과 달라 어려움이 있지만 방위사업청 차원에서 5초 이내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

한기호 의원

문재인 정부! 자화자찬이 아닌 반성문 필요!
- 국방분야 4년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

北 핵 능력 고도화 나몰라라! 北 핵 대응 능력 제자리!

- 문재인 정부는 '국방예산 증액'을 홍보하지만, 총 3번의 추경을 거치는 동안 정찰위성, F- 35A, 이지스함 등 주요 전력 증강 사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2조 3,365억원을 삭감하여 오히려 전력 약화 유발.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향상을 위해 방위력개선비 일부를 전력운영비로 전환하는 등 거짓과 꼼수로 치장하여 홍보
- 백두체계 능력보강, 글로벌호크, F- 35A등의 전력화를 통해 '북핵 대응 전력'을 확보했다고 하나, 同 전력 모두 前 정부에서 도입·추진을 결정한 것이 시기상 現 정부에서 전력화된 것일 뿐임. 또한, 文 정부 들어 F- X 2차 등 북핵 대응을 위한 전력 증강 추진은 중지되었으며,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전력 추진은 全無함.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은 '국방개악(惡)'이다!

- '상비병력 50만'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軍 전력 보강 없이 매년 2~3만명에 달하는 병력감축으로 '先 병력감축- 後 전력 증강'이 전개되어 軍 임무 수행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고, 軍 부대 해체 및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軍 밀착형 경제구조를 보이는 지역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음.
- 軍 직위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문재인式 문민화'로 인해 전투부대에서 민간인이 군인을 지휘하게 되는 등 군인들이 軍 본연의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軍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 남발되고 있음.
- 軍 부실 급식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식자재를 공급하는 군납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국방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 중에 있음.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5조 제3항 '국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

국민의힘

제3부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성과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

집권 5년 차를 맞은 현 정부 추진 주요 정책·사업 문제점 지적

행안부에 정부 정책으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 임기말 공직기강 해이 문제 등 지적

- 선거전 정부·지자체의 경쟁적 재난지원금 지급 등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
-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방역 대책 문제점
- 대진단 결과 보수보강 대상임에도 방치된 시설이 다수인 재난대응 문제
- 현 정부 공무원범죄 최대치 기록 등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 문제

경찰청의 수사 전반과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 점검

- 압수수색, 구속영장, 통신수색영장 등 강제수사 실효성 부족 문제
- 최근 사건관계인 등의 수사 이의제기, 수사관 기피사례 급증 문제
-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피해자 보호체계 마비 문제

중앙선관위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됐던 것과 관련, 선관위원장 당시 내려진 선거관련 의결권의 효력 문제
- 원칙없는 재보궐 실시여부 결정 문제점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편파적 운영 문제

소방청

- 재난 현장을 남기는 영상기록장치의 관리체계 문제점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부실운영 문제
- 소방시설 잦은 오작동 및 에너지저장장치 화재시 소방관 안전대책 문제

지방자치단체

- 코로나19 장기화 영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 및 공무원 사기 문제
- 방만한 운영으로 심각해진 지방공공기관 부채 문제점

김도읍 의원

대장동 사업, '단군이래 최대규모 부동산 특혜 사건'

대장동 게이트 관련

-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원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수용하고, 그곳에 지은 아파트를 국민들에게 고액으로 분양해 얻은 8,500억원(배당금 4,040억원+분양수익 4,500억원)대의 막대한 수익을 극소수 민간사업자들에게 부당하게 돌아가게 한 '단군이래 최대 규모 부동산 특혜 사건'
  ☞ 불과 7%의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배당금은 전체 배당금(5,903억원)의 68.4% 차지. 즉, 1조 5천억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을 하는 데 3억5,000만 원을 출자한 사람들에게 110,000% 이상의 엄청난 수익률을 준 것 자체가 특혜

이재명, '종합비리세트'의 몸통

- 성남시장 재임시 ▲ 대장동 개발사업 ▲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 및 아파트 건립사업 ▲ 한국가스공사 부지용도 변경 특혜
  ▲ 분당 수내동 분당지웹푸르지오 용적률 특혜의혹
  ▲ 정자동 사유지 20년 장기 임대 특혜 + 백현유원지개발사업
  ▲ 성남FC 후원금 모금 등 수 많은 비리 의혹 제기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 책임론'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책임 있다' 응답이 67.7%로 '책임 없다' 보다 3배 더 많았음.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와 중도층은 물론 진보층에서도 '책임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음. 결국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국민의 73%가 찬성하는 특검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함.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대장동사태 관련 특검 추진

김용판 의원

文 정부의 실정 비판과 지자체장의 도덕성 검증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서 친정부·친북 단체 지원 지적

- 북한 코로나 방역사업 지원,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단체에 국비 지원
- 사업심사위원 구성을 시민단체 출신 및 친정부 성향으로 구성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전면적 재검토 필요

[진실화해위원회] 역사의 뿌리를 흔드는 진실화해위원회

- 군·경 등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만 나라에서 보상금 지급, 적대 세력 인민군·빨치산의 민간인 피해자는 구제 장치 없음.
- 인민군에 동조한 부역행위자는 보상받고 있지만, 군·경을 돕다 희생된 민간인은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
- 침략세력에 맞선 대응은 독립운동가와 같은 국가유공자적 성격임을 강조
- 제도개선으로 적대 세력에 대항하다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보상책 마련 촉구

경찰청·소방청·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경찰청)**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엄정 수사 촉구
- **(경찰청)** 무분별한 경찰공무원 겸직허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주문
- **(소방청)** 강원소방본부 헬기도입 시 지침 위반 확인/ 감사원 감사청구
- **(승강기안전공단)** 과도한 비용 등 승강기 관련 검사제도 전면 보완 촉구

[경기도] 이재명 지사, 조폭 유착 의혹 제기

-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박O민의 진술서, 사실확인서 등 공익제보자료 확보
- 공익제보를 바탕으로 이재명 지사의 국제마피아파와의 유착관계 의혹 질의

김형동 의원

나라를 잠식한 대장동 게이트, 실체적 진실 규명 위한 활동

대장동 게이트 진실 규명

- 이재명 전 지사 대장동 개발 모든 과정 보고 받은 정황 밝혀내
- 이재명 전 지사 측근 세력의 입김 작용한 성남의뜰, 점수 몰아주기 의혹 제기
- 이재명 전 지사 선거 공약으로 활용한 배당이익 결재 문서 확보
- 화천대유 5개 블록 직접 분양수익 4,500억원 밀실합의 정황 밝혀내
- 이재명 전 지사, 성남시, 민간업체간 과도이익 알고도 방치한 사실 밝혀내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인구수도권집중, 지방소멸 위기 대책 마련 촉구

- 지방의 소멸, 고향의 소멸 대응이라는 공동 가치 아래 초당적 협력 요구
-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정책 촉구
- 소멸위기지역으로의 이전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및 행정·재정지원 제도 촉구

(경찰청)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된 보이스피싱 중간책 문제 지적

- 단속 강화에도 보이스피싱 해마다 증가 특히, 대면편취형 급증 문제지적
- 법률서비스플랫폼, 인터넷 등에서 중간책으로 검거시 대응 방법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간책으로의 활동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소방청) 소방관 건강 이상 심각, 관리 대책 촉구

-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야간작업 과중으로 소방관건강 이상 심각
- 진단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 건강 관리 위한 소방심신수려원 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양프로그램 방영, 방송 재탕 한국선거방송

- 한국선거방송 재방송 과다 및 선거 관련 없는 프로그램 송출 문제 지적
- 매년 국민 세금 19억원 낭비, 선거방송 운영 재검토 요청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관리 대책 시급

- 양질의 일자리라고 홍보하며 채용해놓고 관리는 방관
- 운영과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선제공무원과의 진정성있는 대화 촉구

서범수 의원

이재명 후보 대해부(대장동 게이트 설계자, 건설업자에게 정치후원금 받아) 경찰청, 선관위의 정치편향 지적, 이재명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조사 촉구 文정부의 코로나19 탁상행정 및 지자체의 예산낭비 사례 지적

총체적 난맥상,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 대해부

- 대장동 게이트 설계자는 '이재명', 실무 집행자는 유O규 (정치경제 공동체)
- 관내 건설업체로부터 고액 정치후원금 수수, 인허가권자로서 부적절한 행위
-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내용을 팩트체크하여 허위사실공표 혐의 조사 촉구
- 대권놀음에 정신이 팔려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 484회 중 단 8차례(1%) 참석
- 이천 물류창고 화재 당시 소방대장이 행방불명되던 시각, 황O익과 먹방 촬영

정권 눈치보는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립성 요구

-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야당 서울시장을 무리하게 기소
- FIU의 화천대유 관련 의심스런 현금거래 통보, 조사하지 않고 5개월동안 뭉개기
- "바꿀 준비 되셨습니까?" 유권해석에 48시간 이상 소요, 파란 '이'는 되고, 빨간 '이'는 안된다는 해괴한 논리로 현수막 게첩 불허(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

文정부, 안일한 코로나19 대책 질타

- 영업제한 등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회의에 자영업자를 대표할 기관·단체를 배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지적하고 제도개선 요구
- 공직사회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제고를 위해 존재하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코로나 확진자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 요구

지자체 대북퍼주기, 유명무실 위원회, 예산낭비 공공앱 문제 지적

- 울산시 콩기름 사업 1억 불법 지원으로 감사원의 고발조치로 드러난 지자체 대북퍼주기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자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요구
- 文정부 5년간 부처별 위원회 96개 증가, 예산 150억 원 증가한 반면, 5년간 회의를 단 한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41개(5번 이하 152개)로 확인
-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제도개선과 지자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촉구

이명수 의원

대장동 사태로 본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관리·감독 체계 지적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의 행정적 보완 지적

- 지방공사 추진 일정 규모 이상 대단위 사업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독감시 제도화 필요
- 도시개발사업, 지방공사 직접 외부사업체 평가 및 사업권 주는 방식 부적절
-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이권 개입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책 수립 요구

「엉터리 용역」에 의해 추진되는 지자체 사업 지적

- 발주자 입맛에 맞는 엉터리 용역 다수 발생 - 대장동 사태의 시작!
- 엉터리 용역에 의해 진실을 호도시켜 셀프검증하고, 혈세 낭비 및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함을 지적
- 일정규모 이상 용역은 무조건 심사·평가·감사받도록 하고, 엉터리 용역시 용역기관 책임 물어 형사처벌 등 엄벌 처하도록 요구

지자체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진단

- 지자체 산하기관 둘러싼 코드·낙하산·보은 인사 논란 꾸준히 지적
- 해당분야 경력·전문성 전혀 없다고 지적받아도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인사권 행사 지적
- 최소 5년 이상 해당 기관관련 경험자에 한해 임명하도록 하고, 외부전문가 포함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지방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의 의무화 요구

상부(지자체장 및 기관장)의 「결재」관련 논란

- 공직자의 「결재」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책임감도 결여!
- 상부의 결재 없이 사업이 진행되거나, 상부의 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재자가 기억을 못한다는 등 책임 회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 수사 및 처벌 어려워
- 공직자, 결재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교육하고, 책임 회피자에 대한 강한 처벌 요구

이 영 의원

대여 투쟁! 민생 행보! 빈틈없이 해냈습니다!

(대장동 검증) 유O규 전 본부장, 대장동 개발로 행안부 장관 표창 받아

-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 유O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8년 2월, '대장동 개발' 공적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받아
- 유 전 본부장의 공적조서에는 '대장동 개발이익 2,781억원의 공원 조성을 통한 사회환원'으로 기재
-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게이트 설계자에게 행안부의 표창 질타. 향후 유O규의 법정 형량 고려해 표창 취소 조치 촉구

(대장동 검증) 사업·주주 협약 보고 누락 미스터리, 유O규가 직보했나?

- 성남도시공사는 유O규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5월 29일, 6월 18일제21회, 22회 이사회를 열어 대장동 사업 사업협약, 주주협약, 정관체결 의결
- 문제는 이사회 의결 내용을 성남시(이재명 성남시장)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동 안건만 누락되었다는 점을 밝혀냄.
- 대장동 개발의 다른 사안은 모두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되었지만 대장동 사업 수익배분 구조만 보고

(대장동 검증) 이재명 지사, 유O규 본부장 임명에 "기억안나" 답변 받아

- 2010년 10월 유O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명에 있어 이재명 시장의 인사지시 개입 여부, 집중 추궁
- 유O규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운전사 경력이 2달이 전부. 건설 분야 전문성이 전무했으며 '임명권자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임명된 자'에 해당, 채용 비리 의혹 제기
- 이재명 지사는 "기억 안난다" 라는 답변만 되풀이. 추후 위증죄 여부 검토 필요

(민생) 생계의 벼랑 끝에서 외치는 절규마저 차단당한 자영업자 목소리

-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엉터리 대책에 애꿎은 자영업자들이 생계 절벽에 놓임.
- 방역수칙 준수,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자영업자들이 선택한 평화적 야간 차량 시위를 경찰이 지나칠 정도로 강경 진압
- 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비상식적 강경 진압 지적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최춘식 의원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한, 반성 없는 정권

(행안부·경기도)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

- 이재명 지사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의혹과 증거를 제시하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하였음.

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당시 공사가 단독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한 사유 해명 필요

② 지방공기업이 법률에 따라 작성하게 되어 있는 법정 경영실적 보고서에 실적 수치뿐만 아니라 초과수익 환수 방식이 아닌 사전확정 방식을 굳이 우수사례로까지 적시하며 정당화한 배경에 대한 조사 필요

③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친민주당 성향 '성남정책포럼'의 공동대표였던 한국경제조사연구원 본부장 A씨가 처리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 필요

(서울시) 윤리강령에 따라 공정성을 지킬 것을 요구하자, 윤리강령에서 '공정'을 삭제한 TBS 지적

- 서울교통방송(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방송의 공정성과 편향성에 관하여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왔음.
- 본 의원 역시 2020년 국감에서 TBS의 방송강령 중 '편향되지 않도록 방송한다.',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 등의 조항을 들어 강령을 준수하고 공정한 방송을 진행할 것을 촉구 한 바 있음.
- 하지만 국정감사 이후 확인해 본 결과, 개선과 노력은 없었고 오히려 방송강령에서 '편향성'에 관한 규정을 전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함.

국민의힘

제3부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성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채익 의원

코로나 민생피해 복구 촉구 및 K콘텐츠 문화강국 도약 초석 마련

코로나19 민생 생태계 회복 대한 정부실정 지적 및 대책 마련 촉구

- 문화예술·체육·관광 업계 방역대책 마련 미흡 질타
  - 코로나 확진현황, 언론기사로 집계 및 접종 현황·대책 손 놓고 있어
  - 피해대책 마련위한 업계피해, 1개 카드사(시정점유 20%) 자료로 추산
  - ☞ 문체부, 관광·체육·공연 업계 코로나 피해 2,900억 예산지원 추진 보고

문화예술인 복지지원 및 기업후원 수도권- 지방 간 양극화 지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안정자금·사회보험료·의료비 등 수도권 76% 집중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업 지정기부금 수도권에 68% 집중
  - ☞ 예술인 거주비중에 맞춘 복지지원 및 기업후원 토록 시스템 개선 촉구

정부 정책홍보 및 언론사 언론 중재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촉구

- **(한국정책방송원)** 정책홍보 아닌 정치선동 등 정치적 편향성 논란 지적
- **(언론중재위원회)** 文정부 정치인 의혹보도 시정권고 급증...조국97건 최다
  - ☞ KTV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언론사 시정권고 간 좌우 편중 없도록 시정

대중 문화예술·체육 업계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촉구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매출급감에 직원 54%감축...20대 비정규직 피해
- **(문화체육관광부)** K가요 역사관 설립 추진 위한 적극 지원 요청
- **(대한체육회등)** 울산 전국체전 예산·행정 지원 및 북한 선수단 초청 촉구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 저작권 보호 위한 시스템 개선 촉구

-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무소 인력 및 설치 확대 위한 예산편성 촉구온라인 불법복제 3년새 25% 급증... BTS·원피스·어벤져스 1위
  - ☞ 2022년 예산심의 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인력확대 예산 증액 추진키로

전통 문화유산 보존관리 대책 소홀 지적

- **(문화재청)** 태릉 아파트 개발에 유네스코 서신 "아파트 개발은 부정적"
  -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환수 위한 검경 동원 압수수색 등 추진 촉구

김승수 의원

문재인 정부의 문화체육계 내로남불 실태 공개

이재명 후보의 대권후보로서의 부적절함

- 형수 욕설 및 거친 언행에 대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부족 지적 및 답변
- 성남시장 시절 성남FC를 통한 우회 지원 및 치적홍보 지적
- 이재명 후보의 과격한 언론관 언중위 지적

내로남불만 남은 문재인 정부의 문화체육계

- 대통령 아들 문O용에게만 관대한 문화예술계 지원
  (문예위 및 지자체 미술관 등에서의 과도한 전시 지원 지적)
- 한예종 교원의 부적절한 민주당 대선캠프 활동 및 친여 문화인사 전횡 지적
- 친정부 인사(김O민)의 변상금 집행 문제 지적 및 집행 요구
- BTS 유엔방문 관련 청와대 탁현민 의전비서관의 거짓말 문제 지적
- KTV 편파방송 문제 지적 및 시정 요구
- 대북제재 위반 및 정부부처 거짓 후원도용 2018년 광주비엔날레 전시

웹툰작가, 여행숙박업, 콘텐츠 제작자를 살리기 위한 민생 국정감사

- 카카오웹툰, 네이버웹툰의 CP, 작가들과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지적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전수조사 실시 및 상생방안 마련 요구)
- 여기어때, 야놀자의 숙박여행업계 잠식상황에 대한 지적과 상생방안 요구
- 넷플릭스와 국내 콘텐츠사와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 및 이익배분에 대한 지적 및 개선방안 제시 요구

기타 정책 질의

- 체육계 불공정, 비위 관련 지속 지적 (레슬링 대회, 빙상협회 관련)
- 해외 관광 관련 문제 지적 (중국 등 역사왜곡, 과도한 홍보비 등)
- 각종 인사 문제 지적 (태권도 진흥재단 전임 이사장 문제, 콘진원장 해임의 부적절성 등)
- 국립 현대미술관 위작 문제 관련 관장의 위증 문제 지적
- 좌편향 문제 지적 (역사박물관의 좌편향 교육도서 제작 지적, 고궁박물관 도서 편향 시정요구)

김예지 의원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승부한 국정감사

문화·예술

- 법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출판물의 장애인 접근성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실질적 변화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 각 부처의 전자출판물 접근성 확보를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함.
- 장애예술인 공공쿼터제 지원을 통해 국공립 공연문화공간에서 공익적 정체성과 문화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함.

스포츠

- 국가대표 경기복 구매 입찰 과정(대한빙상연맹)과 인사 채용 과정(대한수영연맹)에 대해 지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찰 과정을 개선하고 감사를 통해 문제 확인을 요구함.
- 국가대표 선수들의 진천선수촌 훈련 효율성, 종목별 훈련 관련 애로사항 등 전반적인 점검을 요구함. 장애인체육과 관련하여 지도자 처우 개선, 스포츠과학 지원 확대, 유소년선수 육성 사업 강화, 스포츠 장구 및 전담팀 인력 지원 확대를 요구함.

관광·문화재

- 한국관광공사에 장애인 관광지원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광복지센터를 확대개편하거나, 무장애관광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 요구함.
- 최근 김포 장릉 주변에 미허가 아파트 건축 건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허술한 점검과 정보 공유 미비에 대해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유네스코 지적 시 대응 대책 마련을 요구함.

콘텐츠

-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과 관련하여 대체자료 제작대상을 확대하는 등 법령과 제도 정비와 선진국 수준의 시·청각장애인 정보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함.
- 장애인의 콘텐츠 향유권 향상을 목표로 한 저작권 연구, 화면해설, 폐쇄자막, 수어영상 등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 개선 등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 강화 대책 마련을 요구함.

배현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대변된 국민의 엄중한 경고

UN 대북제재 회피 시도한 북한 관광 용역보고서 실체 폭로

- 세금 3억여 원 투입,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연구용역 진행
- 이스타항공 이용 등 UN 대북제재 피한 북한 관광 활성화 방안 내용 담은 점 폭로
- 국내 금융기관 볼모로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북한에 재원 조달하는 방안 구상한 점 함께 지적

북한에 22조 지원 계획 세운 2032 서울- 평양 올림픽 비공개 보고서 문제점 지적

- 서울시, 오세훈 시장 당선 1주일 전, IOC에 2032 서울- 평양 올림픽 유치제안서 제출
- 올림픽 핑계로 북한에 SOC 구축 위해 22조 지원하는 방안까지 포함
- UN 대북제재로 관련 물자 북한 반입 금지 상황에도 강행하려던 점 밝혀

동북공정 문제 방관하는 문체부 및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대국민 사과 받아내

- 중국 열병식에 아리랑, 한복, 장구 등이 중국 문화로 등장해도 방관하는 문체부
-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실 대표 영상에 동북공정 논리 반영 내용 전시한 사실 지적
- 담당자가 위키백과의 동북공정 지도를 그대로 사용한 점 함께 밝혀 기관장도 잘못 인정

김포 장릉 사태 책임회피 및 유네스코에 허위보고한 문화재청 감사원 감사 청구

- 김포 장릉 사태에 대해 건설사, 지자체에 책임 회피하던 문화재청 지적
- 현지에 소속 상주직원 25명에도 건설 2년 지난 2021년 5월에야 상황 파악한 것 밝혀내
- 7월 제출 유네스코 공식보고서에도 장릉 사태 고의누락해 제출한 점 지적 및 감사원 감사 청구

중국의 체계적 문화침탈에도 국내 콘텐츠 피해 방관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 물어

- 중국의 정풍운동으로 국내 연예인 및 콘텐츠 기업들 피해 심각
- 사드 조치 이후 중국 내 게임 판호 받은 사례 단 3건에도 조치 없는 점 밝혀내
- 중국 내 피해 현황 자료도 없고, 국회에는 게임협회 자료를 표절해 제출한 점 지적

철거 위기의 흥사단 LA 본부 건물 지키기 위해, 사적지 지정에 대한 협조 촉구

-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설립한 흥사단 LA 본부, 중국계 건설사가 매입해 철거 예정
- 배현진 의원, 미 당국에 협조 요청 서한 발송해 함께 돕겠다는 답변 받아
- 국민의힘은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는 정담임에 대한 인식 공유 및 확산에 기여

윤상현 의원

문정권 문화정책 실패를 묻다

'영화쿠폰'의 실집행 실태와 문제점 지적

- 문재인 정부가 발행한 영화 할인소비쿠폰이 특정 지역을 위한 쿠폰으로 전락하면서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실패한 재정사업임을 지적
- '문화적 편익의 지역적 편차'가 '차이'를 넘어 '차별'이 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코로나19 대확산 속에 정부의 거듭된 실정으로 빈부격차와 자산격차 확대는 물론, '문화 향유 격차'까지 확대되고 있는 문제 지적
- 국민 세금으로 지역 간 역차별을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이고 정치 실패라는 점을 강력 비판

GTX-A 노선의 문화재 조사 문제점 지적

- GTX-A 노선 사업부지에서 문화재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곳이 12곳, 면적으로는 총 58,522㎡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곳은 543㎡에 불과함을 지적
- 조사 대상 지역에서 발굴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이전 보존' 결정이 내려졌지만, 아직도 유적의 보존 조치도 이행이 안되는 점과 문화재 발굴 여부에 대한 보고서조차 제출되지 않고 있는 실태 지적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에 운영비 과다 지급 지적

- 스포츠토토 사업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이런 목적에 무색하게 급속히 사행산업이 되어 수탁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는 실태 지적
- 스포츠토토사업이 시행된 2001년부터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수탁사업자에게 지급된 돈이 총 4조 7,507억여원에 달해,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모이고 쌓인 돈이 이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자의 이윤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태 지적

이 용 의원

자신들의 말만 믿으라는 '내로남불' 정권

BTS 열정페이, 청와대의 거짓말?

-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미래·문화특사로 임명된 BTS가 정부(문체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와 계약(7억 1,700만원)한 일정 이외 대통령 순방 일정을 소화한 것을 두고 '열정페이'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소속사측과 합의된 것이라 해명함.
- 그러나 청와대의 해명과 달리 소속사는 미국 순방에 드는 비용을 총 16억 3,764만원으로 견적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정산이 완료된 시점도 사실과 달랐다는 것을 밝혀냄.
- 전세계적인 아티스트로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BTS를 정권의 홍보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문제가 될 것 같자, 거짓 해명과 말 바꾸기를 하는 청와대의 모습을 드러나게 함.

언론재갈법의 신호탄, ABC협회 사무검사의 문제점 집중 추구

- 문체부의 ABC협회의 '부수공사'를 정책활용하지 않겠다는 사무검사 결과는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언론중재법'의 신호탄이자 뒷받침으로 활용되었음.
- 그러나 ABC협회의 사무검사의 과정과 결과를 검증해보니, ▲ (지국)사무검사 목적을 감추고, ▲ 특정 언론사 대상으로 유가율·성실률을 계획한 것을 확인하였고, ▲ 유가율·성실률 산출과정 및 방식, 결과에 대한 검증의 불투명성을 지적함.
- 또한 ABC협회의 사무검사의 과정과 결과 등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제3자의 독립된 기구에서의 검증을 주문함.

전국체전 대학·일반부 취소, 대한체육회는 뭐했나

- 대회를 20여일 남기고 취소가 된 대학·일반부 전국체전로 인해 실업팀 입단을 앞둔 대학선수, 연봉협상을 앞둔 일반수 선수들의 사례를 소개함.
-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미흡한 사전대처로 이번 사태를 초래한 대한체육회를 질타하고, 선수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안과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는 대회 개최방안 수립을 주문함.

최형두 의원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을 반면교사로 상식, 공정, 정의의 대한민국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시도, 졸속입법 및 위헌 문제

-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주장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은 국내외 인권·언론단체에서 모두 반대하고 있음.
-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관, 국제언론인협회(IPI) 등은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공식입장을 표명함.
- 개정안은 결국 문재인, 조국, 윤미향 등 권력비리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언론징벌법은 저지할 필요가 있음.

이건희 미술관 서울건립은 문화독점, 수도권 문화기반시설 쏠림 지적

- 서울은 양적·질적으로 미술관과 박물관 인프라·컨텐츠를 독점하고 있음에도 최근 이건희 미술관 건립 부지로 또다시 서울이 선정되었음.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지역문화진흥법이 있으나 모두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고 지역홀대는 지속되고 있어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커지고 있음.
- 문체부는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함.

정치보복으로 껍데기만 남은 경기도체육회

-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 경기도지사 측근 떨어지자 4일만에 당선 무효결정
- 7개월 만에 법원 유효판결 나왔지만 경기도는 체육회 예산 80%삭감하고 위탁관리권을 회수하였으며, 경기체육진흥센터 신설해 기존 체육회 사무 대부분 이전 추진하며 무력화시킴.
- 이에 대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경기도측에 엄중항의하고 향후 정치적 보복의 재발방지를 위해 법적 수단 동원해야할 것임.

문체부 청년·장애인·여성 고용 개선 필요

- 문체부 청년 및 장애인고용의무 이행 저조해 공정한 기회 제공해야 함.
- 문체부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비율 현저히 낮아 양성평등 개선필요가 있음.

제3부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성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점식 의원

농식품부 예산 대폭 감소 등 농어업 정책 홀대하는 문재인 정권 질타!
해양폐기물 처리 및 수거 관련 대안 제시 등 농어민 목소리 정책 반영 노력!

(농림축산식품부) 문재인 정부의 농업·농촌 홀대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 촉구!

- 문재인 정권의 무관심 속에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4년 9개월째 1,467억원 모금에 불과(10년간 1조원 목표)한 점을 지적하며 수수료 인하, 평가배점 개선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성 강조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이 3.62%에서 2.76%로 감소하는 등 단 한 차례도 증가한 바 없음을 지적하며 농업·농촌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식량자급률 목표치가 8년이나 후퇴하고 있음을 질타

(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 옵티머스 펀드, 식량자급률, 청년 후계농 등 농정 현안 분석 및 대안 제시!

- 옵티머스 펀드 관련 후속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하여 NH투자증권이 사장 개인의 변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밝혀냄.
-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던 청년 후계농(2018년 선발)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종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해양수산부) 최근 10년간 해양폐기물 수거 101만톤, 실효적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 10년간 101만톤의 해양폐기물이 수거되고 있는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해양폐기물 수거·관리 체계의 미흡한 점과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및 해양환경감시원 운영 축소에 대한 우려사항에 대해 집중 지적
- 바다환경지킴이 활동근거 및 지원방안, 민관의 협업을 강조하고 전처리시설 설치,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주장

(해양수산부) 굴패각 남해 해양배출지역 지정 직무유기하는 해수부, 골재 채취 지역 복원은 사업 시행자가 실시해야!

- 굴패각 남해 해양배출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그간 해양수산부의 입장,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조속한 해양배출해역 지정의 필요성 강조

김선교 의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상식에 기반을 둔,
정책 국정감사를 실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근무 시절 추진한 백현동의 아파트의 옹벽문제에 대해 산림청장으로부터 '(이런 옹벽은) 처음 봤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건설 문제에 대해 지적함.

- 백현동 아파트의 옹벽을 보면, 현행법에 근거한 15m를 넘고 있고, 거의 아파트 8~9층 높이로, 산지전용 허가권자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인 만큼, 산지관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부각

태양광 시설 설치 간척 농지 염해 보상 전무

- 국가가 간척 농지 중 일정기준 이상의 염도가 측정되는 농지에 대해 태양광 설치를 허가하고 있지만, 정작 염해피해로 인한 보상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고, 염해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도 전무한 것으로 밝혀짐.
- 기존의 염해 판단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새로운 기준 마련 및 그 때까지 태양광 설치 허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이외,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상식적인 문제를 부각, 적극적인 대안을 촉구함.

- 농협, 4년간 법적으로 기부받을 수 없는 성남FC에 대한 기부 문제 지적
- 멀쩡한 보 개방과 해체를 위한 환경부의 획책에 동조하는 농림부 지적
-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농업·농민을 위해 노력해야 할 농림부 본분을 지적
- 중·일·러 등 주변국에 무시당하는 대한민국 해수부의 문제점 지적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촉구
- 국민과 특히, 어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해상풍력 관련 문제점 지적
- 산불 진화 헬기의 노후화가 심각한 점을 부각, 관련 예산 확보 촉구
-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문제 지적, 유족에 대한 사과 촉구

안병길 의원

북항 재개발 관련 거짓말하는 해수부 지적, 온라인상 동물용 의약품 판매 문제 제기, 미투식품 판치는 한국 식품업계 질타 등

해양수산부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계획변경으로 추가사업비용 부산시민에게 전가

- 트램사업비 약 200억원, 1부두 상부 복합문화시설 329억원, 해양레포츠 콤플렉스 사업 202억원, 오페라하우스 500억원까지 총 약 1,200억원을 사실상 부산시민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변경안 발표
- 도시철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철도와 궤도를 따로 설치하라는 해양수산부 지적

동물용 의약품 거래 무법지대 되어버린 온라인 쇼핑몰

-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병원이나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음.
- 하지만 국내 이커머스 사이트와 포탈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구매가 가능
- 온라인 쇼핑몰 동물용 의약품 거래 규제 마련 촉구

미투식품 판치는 한국 식품업계 중국 미투에 대응할 명분 있나

- 오리온에서 만든 '꼬북칩'은 일본 야마자키 비스킷의 '에아리아루'를 카피
-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투 식품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촉구

어민 면세유 횡령해서 게임아이템 구매한 수협 직원

- 서산 수협 직원 임모 씨가 어업용 면세유를 빼돌려서 3년간 121회에 걸쳐 30억원을 횡령하여 리니지M 게임아이템 구입
- 취약업무 개선, 유류구매 시스템 개선 등 실질적인 대안 없이 기계적인 답변 질타

종자산업 활성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

- 세계 종자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약 1%에 불과
- 종자확보를 위해 종자강국 네덜란드 벤치마킹 제안

이만희 의원

농업·농촌 인력난 해소와 무분별하고 부적합한 해상풍력사업 난립 지적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농업·농촌 인력난 심화에도 대책 없는 농식품부

- 국내 농업의 외국인 근로자(합법, 불법 포함) 의존도는 9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며 농업·농촌 인력난 심화
- '21년도 농림부 농촌인력수급 사업 성과 저조, 관련 예산 70억원에 불과
- 농업·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 제도 및 중장기 대책 수립 요구

밭기반 정비와 밭농업 기계화 촉진으로 농업·농촌 인력난 해소 필요

- 농정당국은 농업농촌 인력난을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국내 밭농업 기계화율은 61.9%
- 농림부, 농진청 등 밭농업 기계화 관련 R&D 예산 지난 3년간 835억원 투입에도 기계화율 1.7% 상승
- 밭농업 기계화 관련 전담조직 구성 및 연구과제 확대, 밭기반 정비 사업 관리·감독 강화 요구

황금어장과 항로 침범 등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해상풍력 발전시설

-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가 난 사업중 어선밀집도, 어획량, 해상교통안전 등 입지선정에 부합하는 사업 수는 총 33개소 중 단 1개소(3%)에 불과
- 어업 피해 최소화 위해 해상풍력 입지 적정성 확인 가능한 입지정보도 구축 지연 및 입지 적정성 평가 기준 미비
- 해수부 입지정보도를 보완·공개 및 세부적인 적정성 판단기준 마련 요구

해피아의 부활과 산하 공공기관의 국회 무시한 방만 경영

- 해수부 소관 17개 공공기관 중 해수부 출신 기관장은 총 10명으로 전체의 60%
- 해양진흥공사 임직원 수 149명, 사택 수 30채,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임직원 4,254명 중 294명인 약 7%만이 사택 제공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와 해수부 산하 기관들의 방만 운영 개선 요구

이양수 의원

국가기강 뒤흔드는 文정부 질타

국가 정체성 훼손하는 오표기 문제 질타

- 독도사랑운동본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 '일본해', '리앙쿠르 암초' 표기 지도 방치
- 한식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김치를 중국 '파오차이'로 표기 안내
- 소나무 등 한반도 자생식물의 영문명을 'Japanese'로 표기해 홍보

농협, 수협 대장동 개발사업에 '로우 리스크'라며 6,000억원 투자한 사실 발견

- 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 총 5,036억원 대출하면서 리스크 낮다고 평가
- 수협은행 700억원 대출하면서 인허가·준공위험 등에 대해 리스크 낮다고 평가
- 이재명 후보가 말한 "하이 리스크"와 정면 배치 드러나

장병 건강 해치고 군납농어가 사지로 몰아넣는 군급식 경쟁조달 개편안 반대

- 가격경쟁력 제고 위해 저가·저급 식재료 공급 만연한 경쟁조달체계
- 군장병 건강 해칠 수 있으며, 군납농어가 안정적 생산에 치명타
- 농어가 대변해 반대 목소리 내고, 관계 부처의 개선책 요구

신재생에너지 늘리겠다며 경제림·재해위험지역에 산지풍력단지 허가해준 文정부 질타

- 文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설비 구축 위해 축구장 7,000개 면적 산림 훼손
- 작년 말 혈세 6,000억원을 투입한 인공조림지에도 풍력단지 조성 허가
- 발전기 면적의 8배에 달하는 부대시설에 대한 재해위험성 검토 규정 마련도 안해

농어민 등 직접 챙기겠다 약속하고 무책임하게 내팽개친 文정부 농정

- 해수부 피격공무원 직접 챙기겠다 약속한 대통령, 정부는 여전히 무책임
- 안전·재해 정책보험 내실화 약속했지만, 농어민이 필요사항은 전혀 반영 안돼
- 가축방역 성과 자화자찬하지만 정작 피해입은 살처분 농가지원은 소홀

홍문표 의원

문재인 정부의 농어업 정책 무능과 '北 바라기' 문제 지적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농어민 홀대

- 대기업·유통업체 배만 불린, 농수산물 할인쿠폰 1,800억
  - 국내 농수축산물을 최대 30% 할인해주는 쿠폰 예산 2,307억원 중 80%에 달하는 1,848억원을 대기업에서 사용하도록 방치
  - 코로나로 고통받은 농어민, 소상공인이 아닌 대기업에 국민혈세 투입 지적
- 文정부 정책 무능이 낳은 계란 가격 폭등세 장기화
  - 지난해 11월 발생한 AI사태에 전체 24%의 산란계를 무차별 살처분
  - 계란 값 폭등으로 약 9개월 간 1,500억원에 달하는 계란을 수입, 이를 다시 476억원에 되팔아 1,023억원의 예산손실 초래, 정책 무능으로 농어민 피해 증가 문제 지적 및 해당부처 책임 강조

문재인 정부 '北바라기 정책' 강력 비판

- '北 피격' 해수부 공무원 1년 넘게 외면, 인권침해 문제 제기
  - 북한에 의해 대한민국 공무원이 목숨을 잃은 사건임에도 해경 수사 결과엔 객관적 근거 없이 고인을 '정신적 공황'이라 표현하며 월북 증거 제시
  - 국가인권위원회는 '북 피격 공무원' 수사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지적하고 해경 관계자의 경고 조치와 강력한 재발 방지 권고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무시한 채,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현 정부의 현실 지적
- 남북산림협력사업 5년간 198억, 과도한 예산 투입 문제 지적
  - UN대북제재로 북한지원 묘목 출하가 불가능한 상황에도 내년도 묘목생산 예산 편성 문제 제기
  - 대북지원 묘목이 국내 조림사업에 활용될 경우, 묘목가격 폭락 문제 발생 및 국내 조림사업 예산과 중복 발생 우려 지적 남북교류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것 요구

국민의힘

제3부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성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폐해 및 불법·비리 온상인 사업

(산업부) 백운규 前 산업부장관 배임교사 면피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 산업부는 비용보전이 포함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 위기에 처한 '백운규 前 산업부장관 구하기'에 나선 것은 명백한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법체계에도 맞지 않는 사항
- '법률에 근거한 비용보전이 보다 바람직 하나, 현재 에너지전환로드맵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비용보전을 미룰 수 없다'는 산업부 내부 문건을 확보. 무리하게 추진된 것임을 자인한 셈으로 감사원 감사 통해 실체적 진실 확인 필요

(산업부) 풍력발전사 대리인 통해 현금 살포, 고발까지, 방관하는 산업부

- 전남 영광군에 설치하는 해상풍력발전소 조성사업 추진과정(인허가 등)에서 주민 동의를 목적으로 한 현금살포, 반대 주민에 고소·고발 등이 난무하는 등 조용했던 마을이 순식간에 아수라장
- 산업부는 동 사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 받았음에도 묵인하고, 주민들에게 안내한 것과 다르게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허가해주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만 혈안이 돼 현 실태를 방관하고 있어 풍력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중기부) 스마트공장·K- 비대면바우처플랫폼·브랜드K 사업 불법·비리 온상

- 현 정부의 초기 국정과제 사업인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서 설치비를 페이백해주거나, 최종점검 당시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시연하고, 바로 장비를 회수하여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불법·비리행위들이 적발되고 있어 스마트공장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요구
-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추경 반영된 K- 비대면바우처플랫폼 사업 역시, 페이백, 상품 제공, 대리결제 등 국가예산을 편취한 불법·비리행위들이 적발되고 있어 사업 시행 전면 재검토 요구
- 브랜드K 사업의 'K- 방역' 선정 13개 기업 중 일부 기업들이 분식회계로 금융위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임에도 선정 후 사후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고 버젓이 브랜드K 기업으로 홍보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구자근 의원

7,050억 규모 AMI사업 설치호수 '0건' 등 문 정부 무능한 정책운용 지적

총 사업비 7,050억 규모 AMI사업, 실 설치호수 '0'건, 업체 밀어주기 정황까지

- 총 사업비 7,050억 규모로 2020년 3차 추경(282억)을 통해 시작한 AMI사업은 2022년까지 아파트 500만호에 AMI(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을 보급하는 목적임.
- 1차 공고시 유찰된 이 사업은 2·3차 공고에서 단독 응찰한 누리컨소시엄에 2년간 1,014억을 선지급 하였음.
- 그런데 감사결과 20.12월 말 기준 설치 건수 0, 설치 희망 가구 0건으로 추경 편성부터 졸속으로 이루어 졌음.
- 성과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컨소시엄에 또다시 단독 응찰 기회를 제공하는 특혜를 부여한 불합리한 정책운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함.

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 관리부실, 불법브로커 먹잇감 전락

-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사업은 2011년 사업 시행 원년보다 약 9배 가량 예산이 증대해 지난해 1,041억원 예산이 투입된 사업임.
- 그런데 학교 운영에 있어 불법브로커가 학생을 대리인으로 입학시켜 정부 예산을 받아내는 등 관리부실 사례가 밝혀졌음.
- 심지어 비리제보에 대한 실무자 은폐 의혹도 있어 사업 전반에 대한 중기부장관의 직접 조사를 요구하였고, 전수조사를 비롯한 제도개선을 이끌어냄.

비정규직 정규직화 폐해, 청소- 경비 등 업무관련비용 27% 증가하고 자회사 임원 자리는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 2017년 문 정부 지침에 따라 발전자회사의 청소·경비 인력 등이 11개 기관에서 총 12,228명이 자회사로 고용되었는데 이에 따라 업무비용이 대폭 증가함.
- 11개 기관 모두 모회사 출신 임원이 사장으로 임명, 낙하산 문제 지적

권명호 의원

개발사업자의 이익 극대화에 동조한 이재명과 親정부 자격미달 낙하산 인사, '가치삽시다' 소상공인 울리는 쇼행정이라 인정한 중기부

대장동 송전탑 논란, 당시 이재명 시장이 개발사업자 이익 위해 묵살 정황 밝힘.

- 한전이 극심한 주민불편을 우려해 대장동 북측 송전선로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성남시에 공문 보냈지만 이익 극대화를 위해 주민불편을 무시하고 지하화하지 않은 장본인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임을 밝힘.
- 한전 사장으로부터 개발사업자가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 지중화를 무시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답변을 얻어냄.

친(親)정부 성향의 자격 미달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는 인사가 한전 비상임이사에 선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농어민위원장, 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장 출신 등 해당기관에 대한 전문성은 무시하고 정치적 성향과 지역 연고 등을 고려한 비상임이사 수두룩
- 자격미달 비상임이사가 연간 수천만원의 수당을 받으면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거수기 역할한 점 지적

한수원, 원전 공포조장 등 가짜뉴스 대응 전담팀 신설 막았다

- 한수원 산하 방사선보건원이 2018년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악의적인 뉴스를 유포하는 반핵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 신설을 요청했지만 한수원이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승인한 점 지적

박영선 장관의 치적 쌓기 사업 '가치삽시다', 중기부 사업실패 인정

- 소상공인 제품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가치삽시다', 2,066개 입점 업체 중 625개 업체가 매출 0원, 전체 입점업체 월 평균 매출 5만원
- 중기부 장관, 사실상 사업 실패를 인정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쇼핑몰 진출을 지원하는 플랫폼 교육 사이트로 개편하겠다고 답변

▲ 정부의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인 점을 비판하고, 원전 필요성을 논리적 근거와 자료 등으로 설명하는 '탄소중립의 길, 원전에게 묻는다' 정책자료집 발간

김정재 의원

원자력 발전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정책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강조

상향된 NDC,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에 필요한 천문학적 비용 숨기는 산업부, 원자력 발전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정책 필요성 강조

- 탄소중립위원회 내부 비공개자료 공개, 재생에너지(전체 발전량 중 61.9%로 비중을 확대할 경우) 저장용 ESS 구축 비용 1,248조 원, 면적 6,680만 평 필요
- 탈원전·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국민에게 정확히 공개하고 탈원전 정책 폐기해 원전과 함께하는 탄소 중립정책 필요성 강조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2040 탄소중립공약의 무책임과 불가능함 지적
-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 마련 촉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뒷전이고 비효율적 사업, 정치인 장관들 치적사업 진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 문제점 지적

-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가짜 손실보상법'의 문제점 지적 및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영업피해는 피해받은 만큼 보상 촉구
- 소상공인을 위한 '소담영화제' 사업 위해 '배달의민족'에게 3천만원 후원 요청해 받은 중기부의 갑질 지적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조사 촉구
- 민간보다 효율성 현저하게 떨어지는 '가치삽시다 라이브커머스' 사업 운영방식 제고 필요성 강조
- 박영선 전 장관 치적사업 '스마트 슈퍼', 올해 목표 800개 중 오픈 실적 0매출실적 성과도 매우 미미,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고민해야
- 중진공·기보에 창업지원자금 2억 5천만원 받은 세금 도둑 '조O은'에 대한 정책자금 환수 촉구 및 정책자금 관리실태 지적

한국전력공사 및 산하기관의 부적절한 정책 및 조치 개선 촉구

- 특별법 만들어서 건물 하나 없이 졸속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원자력 발전 교육 배재하는 문제점 지적
- 한일병원 인턴 의사로 근무중인 조국 전 장관의 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촉구
- 한전 KPS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기관의 부적절한 인식과 관행 개선 강조 및 전 산하기관의 성비위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요구

양금희 의원

국민 부담은 NO!
에너지정책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정책 방향 바로잡기

부담과 비용 외면한 2050 탄소중립 실현가능한가?

-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중 정부부처 추천 전문가는 44%에 불과
- 발전업계, 산업계 반대 의견도 외면! 형식적 절차에 그친 의견 조회
- 산업부 과기부 산하 공공연구기관 탄소중립 기술 78%는 경제적 성과없어
- 재생e 수용증대를 위해 위원회에서 선정한 필요기술 24개 중 1개만 개발
- 좌초자산 확대, 재생e 증가에 따른 국민 비용 부담은 모르쇠

바람만 문제가 아니네, 갈 길 먼 풍력발전

- 풍력발전 국산 설비 비중 2016년 70%에서 2021년 상반기 12% 급감,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체 수, 일자리, 매출액은 감소세
- 뒤죽박죽 재생에너지 잠재량 엉터리 신재생에너지 백서
- 정부의 장밋빛 목표에도 풍력발전 지지부진, 부유식 해상풍력 예타 탈락
- 1개 계측기로 다수 사업 신청, 환경영향평가 피하려고 쪼개기 꼼수 만연, 계측기 설치 후 발전사업허가까지 10년, 해결해야 할 과제 산적

어려움이 가중된 시기, 소상공인·중소기업 중심의 정책 운영 필요

- 지역화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1,093억(8월 기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테마주 '코나아이' 올해만 758억 챙긴 것으로 추정, 중기부가 구조 개선 앞장서야
- 코로나 치료시설로 활용되는 중기부 연수원 6곳 중 4곳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노출',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필요
- 정책자금 구조개편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자금지원체계 마련
- 제2의 조O은 막고, 선의의 창업자가 재기지원 기회 얻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채용비리 왕국으로 전락한 지역신용보증재단
- 후계자 찾아주는 M&A로 늙어가는 기업과 창업주 살리는 방안 모색 필요

엄태영 의원

민생현장 외면 정부사업 중점 지적!
국민의 목소리 대변한 정책 질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50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비중 속도조절 필요성 강조
- 미국의 우리 반도체 기업 핵심기밀정보 요구 부실대응 질타
- 민생경제 지키는 유류세 인하 및 도시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하 강조
- 정부부처 산하기관 친여세력 임원급 낙하산 인사 지적
- 수소 공급망 인프라 구축 상황의 문제성 언급
- 손실보상 제외업종 피해 지원 및 회복 방안 등 대책 마련 촉구
-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소상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 전달
- 소상공인 대리대출 급감 및 대출제도 개선 요구
-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조속한 심의위 개최 촉구
-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비율 상향으로 초래 될 기후환경비용 인상 및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 가중 지적
- 경제적 타격 최소화 및 안정적 전력 수급 위한 원전 발전과 탄소중립과의 병행 추진 강조
- 유명무실한 공영홈쇼핑 내부규정 개선 요구
- 중도포기 속출하는 디지털 일자리사업의 사업 부실화 문제점 지적
- 소상공인 현실과 동떨어진 희망회복자금의 잘못된 경영위기업종 선정 문제 지적
-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의혹과 불법 조기 폐쇄 지적
- 리스크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해외투자사업 손실과 방만적 경영 지적
- 국가산단 고용인원 감소 및 노후산단 대책안 마련 촉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성비위 관련 솜방망이 처벌 실태 지적
- 무역 사기 등 금융사고의 예방 대책과 철저한 사후조치 강화 필요성 제안
- 시니어창업 지원사업 미비와 실질적인 지원 강화 요구
- 가시적 성과에 집착한 중기부의 부실 운영 혈세 낭비 백년가게 사업 지적
-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업무 재정비 필요성 제안

윤영석 의원

한국형 FIT 불법보조금 60명 적발 지적 후 기준조건 강화 이끌어내

보조금에 의존한 태양광 산업, 한국형 FIT 불법보조금 60명 적발

- 정부의 태양광 확대정책으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는 이미 포화상태인데 떨어지는 태양광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한국형 FIT 제도 등 장기계약을 늘리는 대책을 내놓음.
- 한국형 FIT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고정 가격 계약제도로 가짜 농부 행세를 하며 보조금을 노린 60명 적발
- 막대한 혈세가 태양광 보조금으로 투입됐으나 관리부실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한국형 FIT제도의 불법보조금 적발 및 제재 방안에 대해 지적. 이에 한국에너지공단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발전소 위치 및 중복 참여 제한 등의 한국형 FIT 기준요건을 강화시킴.

전체발전량 중 태양광 전력 기여도 5% 이하에 불과 ('21.10.19 매일경제 지면)

- 정부는 문재인대통령 지시로 그동안 통계에 잡히지 않아 '숨은 태양광'으로 불렸던 한전의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물량과 자가용 태양광 발전 추계량을 모두 포함시켜 태양광 발전비중의 총 수요의 11.1% 기록했다고 홍보
- 하지만 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2016~2021년 8월 발전원별 발전량 및 점유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과 8월의 태양광 전력 점유율은 각각 5%, 4.4% 였으며, 혹한기에 해당하는 올해 1~2월 점유율은 각각 2.7%, 4.3%로 더 낮음.
-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안건을 최종 확정했으나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하며 원전이 대안이 될 수 밖에 없음.

이주환 의원

산업부 제2차관- SK E&S 금품·향응수수 의혹 폭로 중기부 재난지원금 부지급 사업자 발생 사실 알고도 묵살한 사실 밝혀내

산업부 제2차관- SK E&S 금품·향응수수 의혹 폭로

- 2015년 2월, 강남에 있는 한 요정에서 당시 박기영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이 SK E&S 관계자들로부터 350만원 상당의 술과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 폭로
- 박 차관과 SK의 유착비리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 민간기업과 유착하여 민간의 등골을 빼먹는 '에너지 마피아' 발본색원 위한 산업부 차원의 전수조사 시행 관철

중기부 소상공인재난지원금 부지급 사업자 발생 사실 알고도 묵살한 사실 밝혀내

- 중기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지급 사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살한 정황 담긴 '중기부 재난지원금 실무추진T/F 내부문서' 공개
-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오른 것으로 판단돼 억울하게 부지급 판정을 받은 사업자 3,593개소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촉구

탈원전은 실패한 정책…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허구성

- 대선 국면 앞둔 文정부 마지막 국감에서 정부 대표 실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 환기
- **(탈원전 모순)** 백년대계 에너지 정책, 왜 5년 단임정권이 독단 결정하는가? 국가적 탈원전 정책인데 文대통령의 원전 세일즈는 자기모순. 국내에선 안전성과 경제성이 떨어져 없앤다면서 외국에는 우리 원전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 **(탄소중립 현실성 결여)**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기술력 없음에도 미래 기술혁신 일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목표치 설정
- **(소요 비용 미산출)** 시나리오별 소요 예산이나 비용에 대한 설명 빠진 함량 미달 로드맵
- **(정부 내 이견)** 한수원은 탄소중립위원회에 정부의 '원전 절대불가론' 금기 깨고 탈원전 시나리오 수정 공식 요청
- **(산업계 반발)** 원자력 발전 없이 탄소중립 불가하다는 의견 끝내 외면. 과학이 아닌 정치와 이념논리로 억지를 부리면 안됨. 정부가 원전 배척 아집을 꺾는 게 순리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불신 키우는 밀실 공작 행정

희토류 비축 실패 지적

- 정부는 2021년 8월 희소금속 희토류 비축 일수를 100일로 늘리겠다고 함.
- 실행 산하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비축출자로 666억 원(희토류 구매 112억 원, 희소금속 구매 162억 원, 신규 비축기지 토지확보 392억 원)을 신청했으나, 37.3억의 예산만 확보함.
- 지금 112억을 긴급 투입해도 군산 비축기지의 적재율이 약 97%로 100일 치 비축은 불가능. 기지 건설 기간 4년 동안 100치 비축은 불가능함. 손발 안 맞는 아마추어 정책 실행을 지적함.

한전 직원의 태양광 사업 셀프거래, 제2의 LH 사태 지적

- 한국전력공사는 2016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태양광 사업을 겸직한 83명의 직원을 징계 조치했으나 이 중 9명은 징계처분 이후에도 또다시 사업을 영위해 재징계
- 징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해관계 기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 내부 정보를 이용한 특혜 의혹으로 한전發 제2의 LH 사태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 공기업 직원들의 셀프 거래를 방지하는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실보상 심의위, 밀실서 중기부의 일방적 결정 우려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9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운영.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소상공인 대표들의 의견들을 듣고도 손실보상안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진행
- 비공개로 진행된 심의위가 형식적인 껍데기에 불과하다면서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 등을 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

한무경 의원

가짜, 거짓말, 조작 덩어리 문재인 정권!

3억 혈세들여 가짜 풍력발전기 동원한 대통령 행사!

-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 신안을 방문하여 해상풍력에 48조 원 투자하겠다고 밝힘. 당시 행사장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들이 가짜로 밝혀짐.
- 가짜 풍력발전기 제작에만 약 3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였고, 풍력발전기 가동을 위해 발전차까지 동원한 것에 대해 지적

해상풍력 발전원가 KWh당 275원, 20GW 건설 시 연간 보조금 10조 원!

-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산업부 의뢰로 발간한 'RPS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경제성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상풍력 발전원가는 KWh당 275.59원으로, 필요한 REC(보조금)는 KWh당 193.68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20GW 해상풍력을 건설할 경우 연간 10조 원 이상을 국민들이 보조금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경고

전력수요 과소예측, 9차전력수급계획 수정 않을 시 블랙아웃 우려

-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2년 총전력수요량은 520.7TWh였으나, 전력거래소의 수요예측 결과는 이보다 52.7TWh 많은 572.9 TWh로 밝혀짐. 산업부의 전력수요전망 및 이에 근거한 발전설비계획도 모두 엉터리가 됨.
- 이런 상태로 전력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심각한 전력난뿐만 아니라 블랙아웃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지적

특정 기업에 놀아나는 서울시와 중기부, 제로페이는 '박원순 버전의 화천대유'

- 중기부와 서울시 예산 480억 원이 투입된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목적의 제로페이 약 98만개 가맹점 중 55.3%가 거래실적 0원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외면받고 있으며, 실제 제로페이는 결제 대부분(85%)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판매가 차지해 사실상 상품권 판매대행소로 전락하여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부분 지적
- 특히, 상품권 판매의 86%가 '웹케시' 그룹사에 치중되어 있음을 밝히고, 제로페이의 전신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서울페이가 설계되는 시점부터 웹케시 출신이 관여하였고, 제로페이 기본계획 수립, 운영, 수익 등 전방위 특혜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요청

홍준표 의원

4대 관문 공항, 수소 강국 추진

1. 4대 관문 공항 추진

-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성장을 위해 21세기 하늘길을 활짝 열어야 함.
  - 국가공항계획을 새로 수립하여 인천공항을 중추공항으로 대구통합신공항, 무안신공항, 가덕도신공항 등 4대 관문공항을 국비로 확장·건설하여 항공 수요를 분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길 것을 강력 촉구
- 지역별 관문공항을 중심으로 지역성장 전략을 추진
  - 항공물류와 연계된 공항공단 조성, 에어시티 건설, 공항인근에 반도체, 플라잉카를 비롯한 미래자동차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산업재배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함.

2. 에너지 정책 대전환 필요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전면 폐기하고, 원전과 수소를 통해 탄소제로에 도전하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 수립 촉구
- 신한울 3.4호기 등 원래 계획하고 있던 원전은 즉시 건설을 재개하고, 필요한 신규 원전은 조속히 착공하여 원전의 비중을 50%로 확대 (29%->50%) 요구

  * 프랑스 50(원전) : 50 (재생에너지)

3. 수소경제 체제의 건설을 통해 글로벌 수소 산업 표준을 주도하는 '수소 강국'으로 도약 강조

- 석유 한 방울 없이도 우리는 석유화학을 주도하고 수출하고 있음. 수소 에너지원이 없어도 우리는 수소경제를 주도해야 함.
- 원전과 수소를 통해 탄소제로를 이루는 '한국형 길(Korean Track)을 개척해야 함. 러시아와 미국의 LNG를 도입하여 동해안 원전전력과 결합해 수소를 만들어 가야 함을 강조
- 수소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수소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 인프라와 관련 인력 육성에 최대한의 지원해야 함을 촉구함.

제3부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성과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

K방역의 허점 지적 및 제도 개선 방향 제시

이상반응 신고 21.5만건 중 보상 결정은 1,793건뿐! 백신 접종 이상반응의 보상 확대해야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사망, 부작용 발생해 신고건수 총 27만건으로 전체 접종 건수(6천2백만건) 대비 0.44%
- 그런데 중증이상반응 2,440건 중 인과성 인정 건수는 303건으로 12.4%이고, 전체 이상반응 27만건 중 피해보상 결정은 0.66%에 불과
- 백신 미접종자 550만명인 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접종에 참여하도록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인정, 보상 비율 올려야

백신 도입보다 국내 개발에만 목 맸던 범정부위원회, 결국 유통기한 임박한 백신을 기부받는 백신 거지꼴 만들어

-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 백신 해외 도입 투트랙 외쳤던 범정부위원회
-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 범정부위원회」 회의록 분석 결과,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국내 개발에만 목매다 백신 도입 골든타임 놓쳐
  - '20.8.21일 5차 회의에 비로소 백신 도입 안건 등장
  - '20.10.30일 7차 회의에서야 백신 도입 세부 논의 진행하겠다고 밝혀
- 결국, 백신 수급 불안과 유통기한 임박한 백신을 기부받는 백신 거지 나라 만들어
- 지금이라도 「백신도입 TF」 회의록 공개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초기 백신 도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

김미애 의원

국민 희생으로 위기 극복, 제대로 보상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코로나 백신 부작용,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 필요

- 백신 접종은 적극 독려, 부작용은 나 몰라라 식
- 지자체 신속대응팀의 인과성 결과조차 질병청은 대부분 부인
- 인과성 범위 확대하고, 중증에 대한 치료비 선지원 필요

유효기간 끝난 K- 방역

- 백신 늑장도입, 비과학적·비전문적 방역수칙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커져
- 문재인 대통령의 희망고문 발언, 국민 불신만 키워
- 정부 방역시스템 작동 여부 지표인 방역망 내 관리비율 20% 대로 추락(목표 80%), 역학조사관 의무배치 대상 시군구 134곳 中 24곳 아직도 미배치

준비 미흡한 위드코로나

- 위드코로나 전환 코앞에 두고도 구체적인 방역·의료체계 대응안 없어
- 준비 덜 된 상태에서 강행하는 재택치료 확대, 상당한 부작용 우려
- 재택치료 관련 중앙정부의 인력, 예산 지원 없어 지자체 부담 가중

일산대교 포비아, 이재명의 정치적 악용

- 애초에 정해진 차입금 이자율을 악덕 사채업자로 호도
- 미래수익 추산이 불가능함에도 연금공단에 수익 보전하겠다고 거짓말
- 국민연금 수익 추구의 정당성 제시

아동권리보장원, 입양부모심화교육의 편향성 지적

- 특정 집단, 특정 인물에게 교육을 도맡아 진행
- 입양의 진정성, 긍정적인 면은 뒤로 한 채, 부정적인 면만 집중 교육
- 입양에 대한 다양한 시각, 균형적인 시각이 오해 없이 전달될 수 있는 교육 실시

백종헌 의원

위드 코로나 시대, 文정부 신뢰할 수 있나?

文정부의 코로나 대응 문제 지적

- 백신 오접종 총 2,014회! 하지만 피해보상은 0건
- 코로나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권자 43만명 늘어났지만, 보장기관 착오로 과소지급·미지급 급여액 1,583억에 달해
- 말로만 공공병원 확충하는 보건복지부, 보험자병원 배제하고 검토
- 정치방역, 보수집회 땐 요청한 통신자료, 민노총 광화문 집회엔 안했다
- 중국 온라인몰 가짜 KF94 마스크 판매…손 놓은 식약처
- 질병청 일일확진자 5,000명 예측, '위드코로나' 가능하나
- 말로만 준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오락가락 확진자 예측 수정. 불과 2주만에 예측 수치 변경
- 코로나 백신 이물질 발생 800여건, 文정부는 쉬쉬
- 백신 구걸 논란 루마니아 공여백신, 알고보니 백신 포장재, 화이자 정품 아니였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필수의약품 국내 안정 공급체계 마련 시급
  (희귀·필수의약품 등 지속적인 국내 지료체 공급 중단)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품 국민 안전정책 점검

- 국민이 헌혈한 혈액관리, 20여년간 복지부, 적십자 모두 나몰라라
- 장기이식 대기중 사망자 매년증가, 대부분 간 이식 못해 사망
- 반복적인 제약제조(안전) 위반에 나몰라라 하는 식약처, 지난 5년간 189개소 위반 중 중복위반 118개소 (62%)로 충격

이재명의 일산대교 공익처분, 이대로 가능한가

- 이재명발 공익처분 리스크...강원도, 민자 투입된 미시령터널 '이재명식 공익처분' 검토
- 국민연금, 잘못도 없는데 말도 못하는 국민연금공단, 명확한 입장 밝혀야

부실운영 보건복지 공공기관

- 일도 안하는데 창립기념일에 유급휴일로 운영
- 채용절차법 무시, 채용 신체검사 비용 여전히 구직자에게 부담

서정숙 의원

문재인 정부 5년,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 행태 질타

국민의 삶 무너뜨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정부가 끝까지 책임져야

-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 반응에 대한 진단과 진료를 전담할 종합병원급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전담병원' 지정 촉구
- 가족의 삶 전체 무너뜨리는 코로나19 백신 중증 부작용과 사망 관련, 인과성을 핑계로 국민 고통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부 행태 지적하고, 국가가 피해자들을 무제한적으로 끝까지 책임질 것을 촉구

매표행위나 다름없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정책

- 문재인 케어 5년, 질병 치명도가 아닌 혜택받는 사람 수에만 치중한 포퓰리즘 정책임을 지적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방향 전환 촉구
-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권에 대한 경기도의 일방적인 회수 추진, 지역민 혜택 위해 국민 전체 노후를 위협하는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에 불과함을 지적

文정부 산하 공공기관, 도넘은 '무책임 경영'

- 국민연금공단, 총 인건비 정부가이드라인 초과함에도 지침 준수한 것으로 경영실적보고서에 거짓으로 만점 기재. 성희롱 발언한 지역 본부장을 단순 징계 후 같은 직위 유지시켜 지사장으로 발령한 사례도 있어 기관 윤리의식 제고 위한 특단의 조치 촉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급여 심사에 경쟁사 의약품 임상시험 책임자가 참여했음에도 제척 하지 않는 등 급여심사 절차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지적하고 재심사 및 행정부 감사, 그리고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일한 관료주의 행태

- 거대여당 입맛에 맞춘 식약처의 낙태약 졸속허가 계획에 문제를 제기하고 약물낙태라는 새로운 의료체계 도입에 있어 여성건강과 안전, 낙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지적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형적인 부서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용품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촉구

이달곤 의원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의 현주소

저출산, 청년 자살, 노인 빈곤 등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점 지적

- 출산율 높이기에만 집중한 저출산 정책의 실패를 지적, 이에 대한 책임 질타
- 10대 ~ 30대 청년층의 자살 증가와 자살 예방 정책의 예산 투입 대비 낮은 효율성을 지적
- OECD 평균보다 3배 높은 노인빈곤율(43.4%)에도 불구하고, 단기· 저임금 형태의 공공형 일자리가 대부분인 것을 비판, 미래를 위한 연구 시급
- 문재인 정부의 인구정책은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만 남은 껍데기에 불과, 인구정책 사업의 주무 부처로서 사과와 책임 촉구

코로나19 관련 정보공개 요구

- 단계적 일상 회복에 앞서 개인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장소별 위험 행위, 전파 가능 지수’ 제작 및 공포 필요 강조
- 백신 접종 부작용 우려 확대에 따른 투명한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강조,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폭넓은 보상 체계 마련 촉구
- 정부의 안일함으로 인해 늦어진 백신 도입 지체 사유 공개를 촉구하고, 백신 도입 지연의 정확한 진상 규명 필요

문재인 케어의 명과 암

-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 부담(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 2.7%)은 늘고, 국고지원은 큰 폭으로 하락(15.0% → 13.9%),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적자 전환
- 건보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한 고민과 연구 없었음을 질타
- 전 국민의 2.65%에게 약 40%의 건강보험 급여비가 지출되는 점을 분석, 이들에 대한 관리 및 대책 촉구

이종성 의원

문재인 정부 무능력·무책임·무관심(3無)에 국민 보건·복지 수준만 후퇴

(무능력) 사실상 실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케어)

- 자화자찬 일색 문케어, 약 12조 쓰고도 9.3조의 의료비 절감에 그친 무능함
- 정치적 ‘표’ 셈법으로 다수 경증환자 중심의 보장성 강화, 소수 중증환자는 외면
- 3천만원 약속 재난적의료비, 실제 평균지원액 256만원에 불과, 의료파산 안전망 부실
- 비급여 풍선효과, 과잉진료, 상급병원 쏠림 등 정책 부작용으로 재정낭비 극심
- 늘어난 보험금 부담만큼 문케어의 효과 체감 못하는 국민 77.6%, 정책수정 불가피
- ‘24년 재정고갈·‘30년 요양급여 지출 160.5조 전망, 늘어난 재정부담 국민 보험료로 전가

이재명 청년기본소득(`19년 시행)의 실체, 차별 복지·거꾸로 복지

- 이재명 보편적 복지의 대표작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초생활수급자는 오히려 제외
- 청년기본소득 수령시 기초수급청년 생계급여액 차감 또는 수급자 지위상실 부작용 발생
-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19년 61.1%, ‘20년 53.8%는 기본소득 신청조차 못해
- 금수저 청년은 기본소득 수령하고 흙수저 청년은 배제되는 엉터리 정책

(무관심) 문재인 장밋빛 약속, 지난 4년간 무관심에 장애인들의 삶은 오히려 후퇴

- 장애인 욕구·환경 무시한 서비스종합조사, 중증장애인 서비스 시간 하락
-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확대 문재인 공약, 지자체에 떠넘기고 무관심
- 장애인도 기피하는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장애인 건강권은 하락
- 장애인 선택권 무시한 설익은 탈시설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불안만 가중

(무책임) 연금개혁 방치한 문재인 정부, 국민 노후자금 약탈하려는 이재명

- 매표(買票) 위해 덜 내고, 더 많이 주겠다는 국민연금, 애초부터 연금개혁 의지 실종
- 미래준비 없이 청년 등골 빼먹는 연금구조 방치한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 심판해야
- 이재명 지사의 일산대교 공익처분 강행, 한 표 더 얻어보겠다는 정치쇼
- 일산대교 논란으로 민간 투자사업까지 위축, 국민 모두의 손해로 귀결

국민의힘

제3부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성과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

현안과 정책, 깊이 있고 내실 있는 질의로 모두 담아내다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및 사회적 책임 필요성 강조 (조선일보 보도)

- 민주노총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지속적인 대규모 집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불법파업으로 인정한다는 답변을 이끌어냄과 함께 노조의 불법·부당행위 규제 필요성 제기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 입증

-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은 63만개의 일자리 감소 및 소득 분배 악화를 초래한다는 지적,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특정 계층·업종 고용에 부정적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냄과 함께 실패한 경제 대책 마련을 촉구

정부 해석과 다른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조선일보 보도)

- 중노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중노위 판정이 대법원 판례와 정부 행정 해석과 맞지 않다고 입장을 밝힘.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법 신설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이끌어냄.

국내외 탈석탄 요구, 문재인정부는 '묵묵부답' (KBS 보도)

- 문재인정부가 탄소중립을 약속하고도 탈석탄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음. 또한 세계주요국에서 탈석탄동맹을 제시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음.
- 이에 본 의원이 단독입수한 문건을 공개하는 한편 PPCA(탈석탄동맹)의 가입과 함께 탈석탄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기를 촉구함.

여당 대선 후보 이재명, 공약 문제 제기 (조선일보 보도)

- 여당 대선 후보의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탄소세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 세목에 맞지 않음과 불건전한 재정소요를 지적, 헛공약임을 제기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의료폐기물 관리 사각지대

- 코로나 자가진단키트의 정확도가 100% 미치지 못할뿐더러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은 2차 감염을 발생시킬 위험을 지적
- 자가진단키트의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확인되고 원인불명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처리 방법을 재점검할 것을 촉구함.

권영세 의원

말 뿐인 문재인표 탄소중립 정책, 민노총의 불법에 눈감는 정부행태 지적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과속 질주

- 비용추계도 실천전략도 없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 설정
- 전문성 없고 형식적인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당연직 위원인 장관은 참석조차 하지 않아
- 전력 판매 수익보다 수리비가 더 드는 수자원 공사의 수상 태양광 지적
- 산업계나 경제계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수립 필요

대기오염물질 쏟아내는 시멘트 공장 소성로 문제

- 시멘트 소성로 관련 완화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고효율 질소산화물 제거 설비(SCR) 설치업체 전무, 효과 없는 '시멘트업 대상 시설개선융자'사업 재검토 필요
- 시멘트 업종 환경영향평가 대상,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서 제외, 시멘트 공장이 많은 강원도는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외. 중금속 시멘트에 대한 우려

민주노총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대응 요구

-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한 명백한 불법파업임을 지적
- 글로벌경제의 냉혹한 경쟁체계에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민주노총의 시대적 책임감을 요청함과 아울러 정부의 엄정한 조치 요구

MZ세대 상대 노동조합 관련 인식조사 실시

-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8.3%가 인정, 기존 노조의 활동에 대해서는 22.8%만이 긍정적 입장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대해서도 73.4%가 부정적인 입장
- 노조가 정치 이슈보다 근로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함을 지적
- MZ노조의 의견 청취 및 소수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김 웅 의원

‘블랙리스트 유죄판결 무시’ 文정부 내로남불 인사!
일자리 폭망 와중에 ‘노동관계법 무시’ 친여 낙하산 사장들의 노조 탄압!

[환경부] 환경부의 인사부정채용도 내로남불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유죄판결에도 공모자들의 임기만료 퇴직·현직 유지·재임용 등 문제 지적
- 文정권의 무경력·캠코더 공공기관 임원 인사 문제 지적

[고용부] 친여 낙하산 사장 부당노동행위·노사갈등 유발 실태 지적, 고용부 감독촉구

- **(항공보안파트너스(주))** 文 정부 청와대 경호처 차장 출신 사장 취임(‘19.11) 이후 특정노조 와해 목적 부당노동행위 의혹 및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지적
- **(인천국제공항공사)** 현 사장 취임(‘21.2) 후, 지난해 공사 ‘직고용 추진(비정규직 해고 사태 유발)’에 반발한 노조원에 대해 올해까지 소 제기·협박성 내용증명 발송 등 노조 탄압 지속. 반면 노조원 고소 위해 불법행위 자행 간부에는 징계 감경

  ☞ 고용노동부 엄정 근로감독 촉구

[환경부·수공] 작년 역대 수해 피해 과오 덮기에 급급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 객관성·독립성 위해 구성한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 의견은 참고용 부록으로, 원인 제공자인 환경부와 수공과는 사전협의하고 검토의견받아 최종보고서에 반영
- 연구용역 수행한 한국수자원학회 배덕효 회장의 국정감사장 위증 고발

[고용부] 文정부 일자리 정책 실패가 초래한 고용보험기금 고갈 사태 지적

- 올해 고용보험기금, 공자기금 차입*으로 인한 예수금 제외 시 3조 2천억원 적자 예상(*내년까지 ‘19~’22년 -3년 연속) 지적. 단기·세금 일자리 일변도 일자리 정책실패 지적 및 일자리 정책 기조 전환 촉구

[기상청] 기상청의 장비도입 갑질 문제

- 기존 드론 제품 구매할 것처럼 `19년도 추경으로 급히 편성하고 업체에는 고도 기술 요구한 기상청의 갑질 지적

김성원 의원

청정 환경! 공정 노동!
4대강 해체 대못 박는 환경부, 녹조 없는 한강 보 개방위해 1,342억

(환경부) 4대강 해체 대못 박는 환경부, 녹조 없는 한강 보 개방위해 1342억

-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 취수 안정성을 제고한다며 취·양수장 개선을 추진
- 한강 수계 3개 보의 최근 10년간 수위는 거의 일정했으나 ‘기후변화’라는 막연한 이유를 들며 취·양수장을 보다 수심이 깊은 곳으로 옮기겠다고 1342억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 중
- 민간기업은 정부가 시설개선 예산을 지원할 근거도 없으며 농어촌공사와 지자체의 취·양수장을 옮기는데만 국민 혈세가 약 765억 낭비될 예정
- 이외에도 환경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려는 의원실에 ‘회의자료가 없다’, ‘MOU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보고, 국정감사 무력화를 시도
- 환경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강력항의했으며, 세금을 낭비하고 민간기업에 피해를 주는 무리한 보 개방 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

(고용노동부) 헌정사상 초유의 ‘기부금 땡겨쓰기’..결국 기부금 펑크

- 고용노동부는 ’20.12.29 ‘취약계층 일자리, 연대와 협력으로 지켜낸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은행연합회와 금융노사가 750억원을 근로복지공단에 기부할 것이라고 발표(금융노사 550억원+은행연합회 200억원)
- 기부금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편입, 코로나 영향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문돌봄종사자 한시 지원금 사업에 활용
- 하지만 기부금이 다 들어오지도 않았는데(750억 중 302억 기부완료) 금융노사가 발표한 기부 보도자료만 보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기부금이 부족함을 알았음에도 ‘정책 신뢰’ 운운하며 사업을 강행한 것
- 헌정사상 초유의 기부금 땡겨쓰기 발생. 국가 재정이 펑크나는 것은 상관없이 선거를 앞둔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현금 살포만 중시한 것
- 이를 허용한 기재부와 고용부가 반드시 책임을 질 것을 촉구(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답변 받아냄.)

박대수 의원

문재인 정부, 무능과 비리의 4년

환경영향평가제도 허점 악용으로 발생한 대장동 비리 배당금

-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시, 과태료부과 외에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갈음하여 총공사비의 3%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할 수 있음.
- 대장동 개발은 이미 4,000세대가 입주하여 공사중지나 원상복구가 어려워, 과태료 및 과징금밖에 조치할 수 없음.
- 현재 1차 과태료가 2년 가까이 납부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과태료 납부까지의 기간을 2년으로 가정하고, 3차 이상 과태료 부과액인 5,000만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4년에 1억원이 납부될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 이행 비용인 1,000억원에 준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1000(이행금)=450(과징금)+(1억×550))으로 2,20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
- 이에 법을 지키는 것보다 지키지 않는 것이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및 대장동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위한 방안 마련 촉구

문재인 정부 청년일자리사업의 실패

- 지난해 정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및 청년일경험사업에 8천억원을 투입했지만 지원자 2명 중 1명은 6개월을 전후하여 퇴사한 것으로 나타남.
- 국민 혈세로 청년 단기일자리를 양산하고, 일자리통계를 왜곡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비판

산업재해 감축 못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무용지물

- 올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현장에서 35명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발생
- 원인불명 2명을 제외한 33명 모두가 계획서상 안전조치 미준수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계획서의 실효성에 의문 제기
- 현장 중심의 계획서로 재설계할 것을 주문

10년간 꾸준한 점검에도 국민혈세 횡령 발견 못 하는 무능함

- 2011년부터 환경공단은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해 민간위탁수거사업자를 선정하여 관리·감독하고, 수거업자는 영농폐기물을 운반하여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받음.
- 운반 중간에 수거한 물량을 빼돌려 그 물량만큼의 보상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했음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한 무능함을 지적하고, 사업 시작 이후 얼마만큼의 세금이 횡령되었는지 전면 조사할 것을 주문

제3부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성과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

성남의뜰 보상평가 담합 의혹, 진실 규명 촉구

성남 판교대장지구 과소 보상평가 관련 ①보상평가를 맡았던 평가법인, ②평가기관을 선정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③전체 보상업무를 위탁받았던 한국부동산원이 사업시행자와 유착되었다는 의혹 제기

① 감정평가기관 - 성남의뜰 유착 의혹

- 성남 판교대장지구 보상평가는 시도지사, 사업시행자, 주민이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3곳의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해 도출했는데, 시도지사 추천 몫으로 들어온 하나감정평가법인은 사업시행자가 결정되기도 전인 2015년 3월 3일에 이미 화천대유와 사적으로 2억 1,450만원짜리 담보평가 계약을 체결한 관계였음. (감정평가기관 세 곳 중 최소 두 곳이 사업시행자측을 대변해 보상평가 수행함으로써 공정성 훼손)

②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성남의뜰 유착 의혹

- 하나감정평가법인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경기도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도지사 추천 몫 법인으로 선정했던 것인데, 협회가 추천 프로그램을 조작해 특정 법인을 선정했을 것으로 의심됨. (2016년 4~5월 당시에는 엑셀 프로그램으로 법인 선정했다고 함.)

③ 한국부동산원 - 성남의뜰 유착 의혹

- 한국부동산원은 성남의뜰 보상업무 일체를 위탁받았는데, 과업제안서에 4~5천만원짜리 '표본평가(약식 보상평가)'를 무료 서비스해주겠다는 내용을 넣었고, 과업계획서에는 '사업시행자측 이익극대화에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다'는 내용을 넣는 등 부실 보상평가에 동참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됨.

송석준 의원

이재명 부동산 특혜 비리 및 문재인 정부 부동산 참사 집중 질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시절 설계자 및 인허가로서 대장동 및 백현동 게이트 연루 관련 진실 규명 촉구

- **대장동 개발 비리 8대 특혜 지적** : 도시개발법 적용, 강제 토지수용권, 인허가 편의, 수의계약, 임대주택 대신 분양용지 전환, 용적률 상향, 분상제 미적용, 자산관리 수수료 특혜 등
- **양두구육 실태 적발** : 공공개발의 탈을 쓰고 이재명 후보 측근 소수의 개발이익 부당편취 등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의 민낯 집중 추구
- **위증사례 질타** :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위증, 대장동 개발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예상할 수 없었다던 위증, 유O규는 측근이 아니라는 위증에 대한 상세 반박자료 제시

집권 말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 밝혀내

- **부동산 폭등** : 매매시장 안정세 변명과는 동떨어진 국민 선호도 반영된 지역별 랜드마크 아파트 폭등 실태 지적
- **공공임대주택 공실률** : 공급량 부풀리기에 함몰되어 소형평수에 집중된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 및 향후 건설 계획의 문제점 적발
- **정책 방향성 전면 수정 촉구** : 무지와 몰이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부동산 정책 강행으로 국민기만 및 집값 폭탄·전월세값폭탄·세금폭탄 야기 질타

서민경제 파탄 실태와 국민편의 및 국민안전 위협 요소 지적

- **무너진 서민경제** : 지속된 경제난 및 코로나19 여파 인한 주요상권 공실률
- **국민편의 및 국민안전 위협** : 하이패스 단말기 교체 지원, 셀프주유소 결재 오류 방지, 고속도로·국도 낙하물 방지, 역사 에스컬레이터 고장 등

국민 생활 중심 입법 추진(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 위한 3종 패키지 등)

-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민생법안 발의 및 국감 성과 지속 반영 예정

김상훈 의원

국민을 대신한 문제 제기, 국민을 대신한 대안 제시

대장동 특혜,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후속 조치 제시

- 화천대유 분양 물량 독점 대행사, 대표 100억 수수 등 논란에도 불투명한 회계자료로 자금흐름 추적이 불가능함을 지적, 분양대행사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해당 업체 조사 및 부실 감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주문
- 화천대유 보유 아파트 일부를 최측근 등 관련자가 분양받은 것에 비추어, 등기를 미루고 있는 여분 물량을 직권조사하고, 장물 활용 여부 등 확인할 것을 주문

국토부의 지도·감독 권한 적절한 사용 감시

- 모빌리티 혁신 추진 위한다던 정부의 타다금지법 통과 이후 오히려 특정 업체 독점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해당 업체가 시장지배적 위치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기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 LH혁신안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새로운 투기 수법, 즉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사례를 밝혀냄. 투기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LH에 해당 내용을 혁신안에 포함할 것을 주문하고, 국토부에 지속적인 지도를 요청
- 공정위가 검토중인 국내 양대 항공사 합병시 운수권 및 슬롯 제한 조치가 외국 항공사의 점유율을 늘려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국토부의 범부처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

文정부 시기 만연해진 내편챙기기 지적

- 건설노조 갑질 횡포에도 수수방관하는 국토부, 노조와 밀실협약을 맺어 장기파업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코레일 자회사에 문제 제기
- 공시 의무가 없는 자회사에 낙하산 인사가 다수 포진돼있음을 지적하고, 법인 카드 사적 이용 등 낙하산 인사의 무책임한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
- 이 외에도 서울시 투자기금의 친여단체 자금줄 전락, LH의 퇴직간부 회사 일감 몰아주기, 새만금개발공사의 LH출신 감사실장 면죄부 부여 등 文정부들어 만연해진 내편챙기기를 지적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 제시

- 악성 갭투기꾼의 최대 피해자가 사회초년생 2030세대인 점과 공공 전세임대 제도마저 갭투기에 악용되고 있음을 밝혀냄. 이어서 「갭투기꾼 공개법」 발의 등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기관에 선제적 방안 마련을 촉구

김은혜 의원

국민 피눈물 나게한 국토교통 정책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전대미문의 민간특혜 도시개발사업, '대장동(이재명 후보) 게이트' 진상 규명

-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당시 관계자 녹취록, 사진 등 정황·증거 제시
  -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핵심인물 음성파일 공개
- 당초 확보하기로 한 임대주택 비율(세대수) 축소 확인(무주택 서민 외면)
  - 2015년 임대비율 목표치 15.29% → 계획변경 뒤 6.72%로 축소
  - 2015~2016년 화천대유 분양물량 186세대 증가(10.5%), 임대주택은 111세대 축소(- 7.2%)
- 평택 현덕지구 등 대장동 사업 설계구조와 유사한 경기도 개발사업 확인
- 대장동 원주민 피해사례(공급가격 변경, 지적확정 지연 등) 공론화
- 대장동 주민들과 감사원 공익감사 및 성남시 정보공개 청구, 특검 촉구

투기 등 비리로 얼룩진 국토부 및 산하 공공기관, 각종 부실행태 지적

- LH 임원 땅 투기, 가족 채용비리, 출장비 횡령 등 내부 감독시스템 붕괴 질타
- 코레일) 고객만족도 조작에도 징계 패싱, 조직 내 온정주의 지적
- 코레일유통) 지하철 역사 입점업체에 계약 갑질(임대수수료 천차만별 등)
- LX) '골목상권' 지형도면 사업 수임, 공공기관이 선수로 뛰며 상생 무색
- 인천공항공사) '인국공 사태' 항의한 노조에 공사 임원, '일벌백계' 엄포 폭로
- 행.복.청) 퇴직공무원, 2018년 국가산단 지정과 연계한 땅 투기 의혹 지적

문재인정부 국토교통분야 정책 허구성 등 부실 질타(민생국감 실천)

- 입주민 부담만 더 가중시키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대출 지적
- 공시지가 산정 '토지이용 데이터' 치명적 오류 발견·지적(국민 재산권 피해)
- 국토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신형 반사식필름 번호판 품질 이상징후 발견
- 카카오모빌리티 상생방안 실천 촉구(프로멤버십 폐지 검토)

김희국 의원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 사례들을 지적하고 개선대책 마련 촉구

주택정책 실패의 원인을 지적하고 대안 제시

- 문재인 정권 4년반 동안 "공급은 충분하다", "가격 상승은 투기꾼 때문"이라는 등 잘못된 판단으로 25차례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내며 국민들을 좌절과 고통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

  * ▲임대차3법 폐지 ▲취득세·양도세 완화로 거래 활성화 ▲공시가격 조정을 통한 국민부담 완화 ▲용적률 상향·재건축 요건 완화로 공급확대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

- 실제 시장의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밀어내기식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소형 평수의 임대주택 공실이 크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LH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질타하고, 먼저 시장의 동향을 파악한 후 수요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현실과 맞지 않는 LH 혁신방안에 대한 재검토 요구

- 정부가 LH 혁신방안의 하나로 발표한 "내부직원의 심사위원 배제" 방안에 대해 심사위원을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할 경우 기술력 평가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지고, 로비로 인한 부정의 가능성은 오히려 더 커질 것이라며 제대로 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국토부 차원의 대책마련 촉구

- 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 관련,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 조건으로 슬롯반납을 요구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확보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 주요항공사 수준의 슬롯 점유율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공정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

법적 근거도 없이 분양가 규제를 일삼는 HUG, 설립목적에 충실해야!

- HUG가 보증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분양가를 규제하고,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하는 등 법적근거 없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주택도시기금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보증 및 기금관리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

박성민 의원

2021년도 국정감사 수행 '국민의 눈높이에서'

10월 5일(화) 국토교통부

- 이재명 지사와 마귀와의 거래, 방조 묵인한 국토교통부가 '공범'이다!
- 1·2기 신도시가 지방인구 유출시켰는데, 정부는 3기 신도시 또 추진!
- 혁신도시 시즌2 성공하려면 교통인프라 서둘러 구축해야!

10월 7일(목)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

- 기본주택의 '허구성' - LH 모든 임대주택 중 이런 주택 모델은 단 한 채도 없음.
- 성남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5,500억' 공익환수 주장 검증
- LH는 공룡 조직이 되었음. 이러한 비대한 조직과 권위적 태도를 버려야 혁신임!

10월 8일(금)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

- 전기차 화재! 고속도로와 터널의 전기차 화재 대비하라!
- 소상공인들은 카카오의 노란색만 보면 노이로제 걸린다!

10월 12일(화) 한국철도공사 등 (8개 기관)

- 몸집만 더 커진 코레일, 주요 공기업 中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 가장 커!
- 송정역 ~ 태화광역 광역전철 연장 조기개통을 위해 차량 발주를 서두를 것!

10월 14일(목) 한국부동산원 등 (10개 기관)

- 성남 대장지구 고분양가, HUG 분양보증심사 외압 있었는지 특검 통해 밝혀야
- 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기준 현실화하라!

10월 15일(금) 인천국제공항 등 (4개 기관)

- 인국공, 스카이72 단전·단수 불법 행위 사장은 사전에 인지했다?
- 울산공항 폐쇄론 나오는데... 국토교통부·한국공항공사는 뭐 하고 있나?

10월 20일(수) 경기도

- (도시개발지구 지정) 성남시 대장동에 왜 이렇게 돈벼락이 떨어졌습니까?
- (개발방식) 애초에, 설계 당시에, 시장 하기 나름 아닙니까?
- (이사회 구성) 공공 1 對 민간 2, 왜 화천대유에게 돈벼락을 안겼나?

송언석 의원

투기는 방치하고 국민을 못살게 구는 文정부의 엉터리 부동산 정책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중 6,564호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되었고, 1,983호가 전세나 월세로 임대되었음.
- 전매 및 매매된 특공 아파트의 시세 차익은 3,984억원에 달하며, 일부 당첨자들은 실거주하지 않고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준 뒤 매매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됨.
- 또한, 일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분양받은 특공 아파트에 살지 않고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에, 특공 아파트가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 및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그림의 떡' 3기 신도시, 서울 인구 분산효과 미미

- 정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서울 주택수요 분산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 하지만, 사전청약 당첨자 중 서울 시민은 15%에 그침.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당첨된 서울 시민은 고작 8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 정부의 주장과 달리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서울 주택수요 분산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남.
- 국민을 호도하고 희망고문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실수요자들의 기회 확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함.

취약계층 임대료에 기생하는 사회적 경제주체

- LH는 시세의 50% 수준의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을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고 있음.
- 하지만, 사회적 주택 운영하는 일부 사회적 경제주체는 LH와의 계약보다 비싼 임대료로 사회적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대부분의 사회적 경제주체는 사회적 주택 운영조건인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운영함. 특히 민달팽이협동조합은 운영중인 사회적 주택의 입주기준을 조합 가입 및 운영비 납입 횟수 등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일반 국민들의 입주 기회를 박탈함.
- 사회적 경제주체 간부가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을 심사하고 선정하는 주거복지재단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사회적 주택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된 상황
- 이에, 사회적 주택의 운영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동시에, LH가 직접 사회적 주택을 운영할 것을 요구함.

이종배 의원

부동산 양극화 심화시킨 文정부, 특혜·비리를 최대 사업이라는 이재명 지사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특혜 사건', 대장동 게이트

-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장동 사업을 설계하며 '관'에게는 1822억원이라는 캡을 씌우면서도 '민'의 이익에 대해서는 상한을 두지 않았음. 특히 당시 대장동 부동산은 상승세였음에도 '초과이익환수' 규정은 제외시킴.
- 또 인·허가 과정에서 '관'은 '민'에게 ▲5개의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받도록 하고 ▲임대주택 규모 대폭 축소 ▲ 용적률 상향 등의 특혜를 몰아주었음.
-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개발공사 시행 후 발생한 초과이익 중 1,100억원 상당 사업을 추가 부담시키면서도, '공모 시 정해진 것을 바꿀 수 없다'며 사업협약에 환수규정을 배제시킨 모순을 펼침
-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특혜 사업'이자 '종합 부동산 비리 세트'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직무유기, 배임 혐의를 지적

문재인 정부 4년, 부동산 양극화 심화

- 우리나라 집값 폭등 원인은 ▲ 공급 없는 수요 억제 정책, ▲ 양도세 등 세금 강화, ▲ 때 늦은 공급 정책 등 명백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음.
- 또한 부동산 자산에 의한 부의 양극화도 심화되었음. 지난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주택보유 격차는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 부동산 격차도 벌어졌음.
- 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 한시적 양도세 중과세율 폐지 등으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 당장의 공급부족을 해결하고, ▲ 비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 한해 1가구 2주택 세금 감면 등 수도권- 비수도권 양극화를 해소할 대책 마련을 촉구

정동만 의원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낙하산 인사 강력 규탄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총체적 실패

-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할 것 촉구
- 부동산통계 부실,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셋값 폭등, 가계대출 억제로 주택관련 대출 과도한 제한, 임대주택 미스매치 등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각종 문제점 지적
-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집값 올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임대차3법 지적 뼈아프게 새기겠다"고 답변
-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민간통계와의 차이 과다, 뒤늦은 표본개선, 외압이 있었는지 등 통계부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

국토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강력 규탄

- 한국공항공사 감사선임 과정(비밀누설, 임추위구성 등) 관련 국토부 감사 실시 검토요구
- 낙하산, 캠코더 등 잘못된 인사로 인한 조직기강 해이 및 방만경영으로 이어질 가능성 지적

부전- 마산 복선전철 터널 붕괴사고에 대한 당국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 촉구

- 터널 붕괴사고 이후 국토교통부의 무책임한 후속조치로 인한 개통시기 지연 장기화 문제 발생
- 공정성이 담보된 사고조사를 통하여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조속한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촉구
- 민자 건설사업 사고 발생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 설계분과 위원회 구성 제도개선 요구

하영제 의원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올바른 정책개선 요구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관련

- 지난 5월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스라엘 국영기업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샤프테크닉스K와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를 체결
- 이는 항공 MRO사업을 할 수 없는 1등급 공항이 정부 산하기관이 정부와 국회를 패싱하고 독단적으로 특정기업과 합의각서를 체결한 것은 현행 법령 위반임을 지적
- 정부가 이미 2017년 정부지원 항공기 정비업체로 선정한 사천시 소재 KAI와 출혈 경쟁을 초래하면서 항공기 정비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
- 현재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소멸의 위기에 몰린 상황으로 더 많은 지역거점을 창출하는 것이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지름길이라 역설

KTX- 산천 카펫(바닥재) 시험성적서 위조

- A업체가 영국의 검사기관인 SATRA에 의뢰하여 제출한 바닥재 화재 안전기준 시험성적서 중 유독성 부분이 위조된 정황 지적
- 관련된 열차 바닥재 전체 교체에 대한 방침 관련 실태파악 요구
- 한국철도공사의 관행적인 안전불감증과 업무태만을 지적
-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 하는 재발 방지 대책 요구

채용비리 근절 위한 대책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국토부 및 산하기관 채용비리 1~3차 전수조사 결과 총 32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함.
- 대부분의 채용비리는 타인의 면접 기회나 입사 기회를 박탈한 사례로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적
- 국토부 및 산하기관에서 채용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요구
- 공개 경쟁 채용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주문

국민의힘

제3부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성과

여성가족위원회

김정재 의원

여당 눈치 살피기 바쁜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정의연 비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름은 누락하고,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 이름은 새겨져 있는 남산 '기억의터' 문제 지적

- 2016년 서울 남산에 조성한 기억의터 위안부 피해자 247명의 명단 기록 중 정의연(정대협) 활동을 적극적으로 비판하신 심미자, 박복순 할머니 등 여덟 분의 이름 누락
- 기억의터 관리하는 서울시에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의 주무 부처인 여가부에 명단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정의연 눈치만 보고 있는 여가부의 행태 비판
- 의원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82.2% 남산 기억의터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성함이 누락된 사실 잘못됐다고 판단
- 의원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74.9% 남산 기억의터에 윤미향 의원의 이름 새겨진 것 잘못됐다고 판단
- 의원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68.3%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 주무 부처로서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
- 여가부에 위안부 피해자 지원 주무 부처로서 서울시와 협의해 기억의터 피해자 이름 누락 문제해결 촉구

낙인효과로 청소년들에게 외면받는 청소년증, 부정적 낙인효과 제거하고 발급률 높이는 방안 제시

- 청소년증 발급률, 2019년 11.95%, 2020년 14.53%, 2021년 17.11%(추정치)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20%를 넘지 못해, 청소년 10명 중 8명은 청소년증 없는 문제 지적
- 발급률이 낮은 이유는 학교에서 발급하는 학생증 때문에 청소년증은 학교밖 청소년만 이용하는 신분증이라는 낙인효과 때문이라는 원인 진단
- 청소년증을 사용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 발급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가부 차원에서 교육부·지자체와 협력 촉구

'성 비위' 은폐하는 공공기관 징계 현황 통계, 여가부 차원에서 전수조사 통해 내부규정의 징계 대상에 '성 비위' 포함하도록 규정 개정 권고 필요

- 한전 및 자회사 13곳 중 8곳이 취업규칙 상 징계대상에 '성 비위'가 없어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처리,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 비위가 통계에 잡히지 않아 사건이 축소 은폐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
- 여성가족부가 주도해 공공기관 전수조사 실시해 규정(취업규칙) 조사해 징계 대상 분류에 성희롱·성폭력 등 성 비위를 포함해 성폭력 예방 및 방지대책 마련 촉구

김미애 의원

여가부 존재 이유 스스로 증명할 때

정의연 보조금 사적유용, 조속한 환수 조치 필요

- 윤미향 의원의 파렴치한 범죄 혐의
- 국민 혈세로 지급된 국고보조금 사적유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속한 환수 조치 필요

같은 듯 다른, 한국과 미국(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권력형성범죄 처리 과정

- 피해자를 상대로 인신공격 등 악질적인 2차 가해 자행
- 다만 미국의 경우 혐의가 드러난 순간 自黨에서 강력히 사퇴를 요구하는 등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보호하기 급급했던 우리와는 정반대로 대처
-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후에도 자행되는 2차 가해, 여가부의 단호한 대처로 피해자 일상회복 도와야

데이트 폭력, 여가부의 단호한 대처 필요

-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신고 두 배 이상 증가, 매년 10명 이상 사망
- 사후 정책만 있고 방지대책 부족, 사례 관리조차 하지 않는 상황
- 정부 차원의 강력한 데이트폭력 방지대책 필요

여가부 폐지론은 여가부가 자초한 일

- 성희롱·성폭력 대책 주무 기관임에도 2차 가해 통계자료 미구축
- 학교밖청소년, 다문화 및 한부모 청소년 실태 파악조차 없어
- 인력, 예산 부족 핑계 말고, 주어진 역할과 책임 다 해야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필요

- 학교 밖 청소년 수검율 50% 수준(초중고 학생 99% 이상)으로 수검율 제고 위한 실질적 대책 필요
- 학생건강검진과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은 동일하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나, 검진 항목에 상당 부분 차이 발생, 검진항목 타당성 검토 후 재정비 필요
- 궁극적으로 건강검진 복지부(건보공단)로 일원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서정숙 의원

여성가족부 정의연 보조금 관리감독 부실 질타 및 여성의 권익 신장에 대한 대책 촉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지원 강화 및 정의연 보조금 감독 부실책임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간병비 24시간 정액으로 지원할 필요 및 할머니들의 "피해자 맞춤형" 지원 사업 전담 인력 필요성
- 정의연(정대협 후신) 여성가족부 보조금을 지급받아 인건비로 지급한 후 다시 윤미향 개인 및 정의연 계좌로 이체한 정황을 알았어야 함에도 이를 방기한 여가부의 보조금사용 감독 부실 책임 촉구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여가부의 인식전환이 절실

- 성전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들이 이용하는 공간(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대한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시버시권 침해 문제가 발생
- 우리나라에서도, 생물학적인 남성의 신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여성으로 인정받는 판결이 나오는 등, 사회적 갈등과 여성들의 폭력위험 등의 역차별 상황이 발생하므로 여가부 차원의 대책마련 촉구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촉구

-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발생건수에 비해 전국에 친족 성폭행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이 열악함을 지적
-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 강조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사후관리 미비

- 부정수급 사안 경중에 따른 세부지침기준 마련 안해 미고발 현황 지적
- '자격정지·활동정지' 지자체별 중구난방 제재로, 형평성 논란 비판
- 관련 규정에 따른 고발조치 및 제재 일관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촉구

양금희 의원

정부평가 최하위, 폐지론 반복되는 여성가족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재발방지 및 2차 피해 방지대책 수립에 대한 점검

-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지침이 대상기관 10곳 중 4곳 정도만 제정
- 2차피해지침제정도 1년 소요되는 상황에 실질적 인식전환 가능한가 지적
- 관련하여, 고 박원순 시장 변호인이 피해자와 변호인을 명예훼손으로 소송하겠다는 것이 2차 피해인지 여부에 대해 여가부 입장 확인
- 2차가해에 대한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함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 검찰수사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확인

- 공소장의 적시된 범죄 사실에 대한 정의연의 소명 여부, 여가부의 보조금 부정수급분 환수에 대한 여가부 대응에 대해 문제 제기
- 법인 청산절차에 들어간 정의연이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 잔여재산을 모두 처분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대책 주문

데이트폭력 사건 종합 대책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시급

- 최근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린 '마포 데이트폭력 사건'은 여가부의 데이트폭력 방지 종합 대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므로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을 당부함.
- 버닝썬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된 약물 성범죄 관련, 약물의 지정 미흡과 유통의 문제점 지적. 엄격하게 규제·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에서 약물 성범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가해자가 엄중 처벌받을 수 도록 여가부에서 역할할 것을 당부함.

전자발찌, 성범죄알림e 관리 허점 제기

- 성범죄자 알림e 공개 범죄자 전수조사를 통해 유효기간이 지난 오래된 사진과 부정확한 주소지 등 관리문제를 지적함.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고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것을 강력 촉구
- 관리 대상 인원 중 최근 출소한 인원들의 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이양수 의원

본연의 역할 충실하지 못해 폐지론 맞닥뜨린 여가부

국민 절반이 찬성하는 여가부 폐지, 여가부는 반성과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 작년 국민의 72%, 올해 7월 국민의 절반이 여가부 폐지에 동의
- 박원순·오거돈 시장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정의연 사태 방관 등 사회갈등 부추김
- 여가부가 본연의 역할 충실하지 못하고 진영논리에 치중한다는 비판 뼈아프게 새겨야

위드코로나 시작하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임산부 묵인하는 여가부

- 청소년, 임산부의 경우 이제야 백신접종 시작하고 백신에 대한 우려 커
- 소관부처 여가부는 이들을 배제한 백신패스 도입에 의견표명 한마디 안해
- 여가부는 위드코로나 시기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외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긴급위기가족인 北 피격 공무원 유가족 계속해서 방치하는 文정부

- 작년 국정감사에서 2차 가해를 당하는 北 피격 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여가부의 방관 지적
- 유가족은 긴급위기가족으로 여가부의 정책 대상이지만 의원실 지적 후에야 정책 안내해
- 대통령이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공허한 말뿐인 것으로 밝혀져

성범죄 신고율 저조하고 예방교육 이수율과 실효성 낮아

- 여가부 운영 성희롱·성폭력 센터 신고 건수 적어 유명무실
- 여가부 소관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성범죄 방지 기관에서 낮아
- 성매매방지법 시행령에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으로 대학생은 제외해

전주혜 의원

정의연에 불법 교부된 위안부 피해자 사업 보조금 적극 회수 촉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신중검토 및 실효성 있는 양육비 이행방안 마련 촉구

불법·허위 신청서로 교부된 여가부 보조금 6,520만원 범죄에 쓰여 즉각 회수 촉구 및 보조금 사업 관리 철저 요구

- 정대협 대표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은 작년 9월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음.
- 특히 단독 공개한 공소장에는 윤미향이 각종 후원금을 일부 유용하고,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부정 수수했으며, 217차례에 걸쳐 1억 37만원의 모금액을 고깃집, 과자점, 속도위반 교통 과태료, 종합소득세 지급 등에 사용하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써야할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국민적 공분을 삼.
- 여가부가 정의연에 교부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 6,520만원의 신속한 회수 촉구 및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함.

여성가족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가족 정의 확대 반대

- 여성가족부는 가족 형태 및 유형 다양화로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의 정의 삭제 혹은 확대를 주장
-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혼인·혈연·입양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반해 동거인을 포함하는 가족 규정으로 확장할 경우에 대한 우려 제기 및 사회적 논의 필요성 강조

양육비 이행 실태 점검 및 이행률 제고 방안 마련 적극 검토 요구

- 양육비 이행강화법 직접 발의 및 본회의 통과로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명단공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제재조치 적용가능해 졌음. 그러나 제재 기준이 높아 실질적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양육비 이행방안 실효성 검토 및 양육비 통계의 체계적 관리 촉구

2021
국정감사 백서

PEOPLE POWER PARTY

발행일 2021. 11
발행처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우)07238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2 남중빌딩
02) 6288-0200